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 집필진
-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움)
 - 명노연 변호사(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장)
 - 성유진 변호사(사단법인 온움)
 - 이은기 변호사(법무부 법률홈닥터)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개정된 법령과 제도 등을 반영하여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발 간 사



우리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프로보노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각 분야별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성년후견의 대리 범위가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성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이 장려되었지만,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들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다룬 법률지원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첫 발간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공공후견제도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후 공공후견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치매, 미성년자,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졌고, 이에 새로운 법적, 실무적 변화들을 반영하여 공공후견인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반영함은 물론,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공공미성년후견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의 외연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미성년후견 업무의 세부 절차와 후견인의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을 보강하였으며, 최신 법원 실무를 반영하여 후견인들이 실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의 제작을 위해 지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TF팀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공공후견사업에 힘써주실 회원 및 관련 단체 활동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공익 활동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 변호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CONTENTS

제1부 성년후견	1
제1장 후견제도의 이해	3
1. 후견제도	3
가. 후견제도의 개정 배경	3
나. 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4
2. 성년후견제도	4
가. 원칙	4
나. 내용	5
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	9
3. 후견인	11
4. 후견감독인	12
제2장 공공후견제도	14
1. 공공후견 개요	14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5
가. 사업 개요	15
나. 추진체계 및 주체별 기능	16
다. 주요 지원 내용	17
라.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징	18
마. 특정후견인의 권한행사	19
바. 특정후견사무의 감독	20
사. 특정후견 지속여부조사	20
아. 2024년 사업지침 개정내용	21
3. 치매공공후견사업	22
가. 사업개요	22
나. 추진체계	23
다. 업무 추진 절차	24
라. 주요 지원 내용	25
마. 맞춤형 사례관리사업과 치매공공후견사업 연계	26

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27
가. 사업시행 배경	27
나. 추진체계	28
다. 지원내용	29
라. 참고	30
 제3장 후견심판청구 절차의 이해	 31
1. 후견 개시 심판 준비하기	31
가. 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31
나. 후견사무 파악하기	32
다. 후견 제도의 종류 판단하기	34
라. 청구인 선정하기	35
마. 공공후견인 후보자 선정하기	36
2. 후견심판 청구하기	37
가. 후견심판 절차 흐름에 대한 개괄	37
나.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준비하기	38
다. 후견계획서 작성하기	40
라. 후견심판청구서 작성하기	40
마. 후견심판청구서 접수하기	41
3. 사전처분	42
가. 의의	42
나. 사전처분의 종류	43
다. 불복방법	44
4. 후견심판 절차	45
가. 가사조사	45
나. 보정명령	47
다. 정신감정명령	48
라. 심문기일	50
마. 불복방법	51

제4장 후견업무의 이해	52
1. 후견활동 개요	52
가. 초기 단계	52
나. 사무후원, 대리권 행사	57
다. 정기보고서 작성(매 1개월, 매 1년)	60
라. 후견 종료시	61
마. 후견 연장신청	64
바. 후견감독인 직무	64
사. 기타 후견사무 수행 시 유용한 정보	66
2. 주요 후견 사무	67
가. 신상보호영역	67
나. 재산관리영역	85

제2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공미성년후견 93

제1장 미성년후견제도의 이해	95
1. 미성년후견제도	95
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제도	95
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96
다. 기타 법률에 따른 미성년후견	97
2. 친권과 미성년후견	98
3. 미성년후견인	101
4. 미성년후견감독인	101

제2장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	103
1.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의 취지	103
2.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105
가. 사업 개요	105
나. 추진체계 및 업무추진 절차	106

제3장 공공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절차의 이해 ----- 108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준비하기 ----- 108
 - 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존부 확인하기 ----- 108
 - 나. 공공후견인 후보자 연계 ----- 110
2.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하기 ----- 111
 - 가. 필요서류 준비하기 ----- 111
 - 나. 청구서 작성하기 ----- 112
3. 사전처분의 활용 ----- 113
 - 가.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113
 - 나.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임시후견인 선임 ----- 113
4. 심판의 흐름 ----- 114
 - 가. 보정명령 ----- 114
 - 나.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 114
 - 다. 사건본인 및 관계인 의사 확인 ----- 115
 - 라. 가사조사 ----- 116
 - 마. 심문 및 심판 ----- 117
 - 바. 불복방법 ----- 117

제4장 공공미성년후견 업무의 이해 ----- 119

1. 후견활동 개요 ----- 119
 - 가. 후견인의 업무 범위 숙지 ----- 119
 - 나. 아동(피후견인) 및 관계인과의 관계 형성 ----- 121
 - 다. 초기 후견사무 ----- 122
 - 라.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125
 - 마.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125
 - 바. 미성년후견의 종료 ----- 126
2. 주요 후견 사무 ----- 127
 - 가. 신상보호영역 ----- 127
 - 나. 재산관리영역 ----- 129
3. 권한초과행위 허가 ----- 130

- [서식 1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 [서식 3호]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 [서식 4호] 사전현황설명서
- [서식 5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전현황설명서
- [서식 6호] 재산목록
- [서식 7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회조사보고서
- [서식 8호] 치매공공후견사업 사회조사보고서
- [서식 9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회조사보고서
- [서식 10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용)
- [서식 11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 [서식 12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 [서식 13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 [서식 14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 [서식 15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계획서
- [서식 16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계획서
- [서식 17호] 정신질환자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후견계획서
- [서식 18호] 후견감독계획서
- [서식 19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 [서식 20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 [서식 21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발급 위임장
- [서식 22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 [서식 23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업무인수 체크리스트
- [서식 24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 [서식 25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 재산목록표
- [서식 26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 월 수입 · 지출표
- [서식 27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 [서식 28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 통장 관련 회계장부

- [서식 29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정기보고서
- [서식 30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지속여부조사서
- [서식 31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종료보고서
- [서식 32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정기보고서
- [서식 33호] 치매공공후견사업 금전지출내역서
- [서식 34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활동내역서
- [서식 35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 욕구확인서
- [서식 36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 지속여부 조사서
- [서식 37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정기후견보고서(분기)
- [서식 38호] 후견사무보고서
- [서식 39호] 후견감독사무보고서
- [서식 40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 [서식 41호] 후견종료등기신청서
- [서식 42호] 특정후견인 사임허가심판청구서
- [서식 43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필요아동 발굴 체크리스트
- [서식 44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활동보고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1부

성년후견

제1부

성년후견

제1장 후견제도의 이해

1

후견제도

가. 후견제도의 개정 배경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본인의 의사는 배제한 채 근친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등¹⁾ 본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제도와 달리,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를 넘어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의 해체가 시작되었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어 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하며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깊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결별하고 자기결정권 존중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 구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전의 것) 제993조 내지 제935조는 후견인의 순위를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후견인이 될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인 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고 정하였다.

나. 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후견제도는 크게 성인에 대한 후견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으로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이 될 자, 후견인의 권한 등이 결정되는 법정후견과 본인이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임의후견으로 분류됩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후견제도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법정후견			임의후견 (후견계약)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2

성년후견제도2)

가. 원칙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의 보충성 등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이념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자기 결정권 존중, 민법 제947조, 이하 본고에서 민법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만 기재),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후견의 보충성, 제947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登記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며(제959조의20 제1항),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이 개시된 이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2) 배광열, “성년후견과 사회복지”, [동천공익법총서5 - 사회복지법연구], 2019.6. 경인문화사

할 때는 기존 법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후견의 보충성, 자기결정권 존중, 제959조의20 제2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미리 대비하여 후견인이 될 자에게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1항)과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개시되는 법정후견으로 분류되고,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후견인은 여러 명이 선임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합니다(제930조 제2항).

나. 내용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제938조 제1항), 피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되며, 그가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제10조 제4항), 그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소송행위 역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안에서는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2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제947조).

성년후견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거나, 한정후견개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심판이 있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종료합니다(제11조).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후견종료심판이 불필요합니다. 후견이 개시되는 원인인 정신적 제약의 대부분은 현대 과학으로는 소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년후견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한정후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이하 '동의권 유보행위'),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제4항. 단,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 제한능력자가 되고, 그 외의 법률행위들은 모두 유효하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신상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4 제1항, 제2항, 제938조 제3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

한정후견인 역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함에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제959조의6, 제947조), 중요한 신상결정권한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959조의6, 제947조의2),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서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59조의6, 제950조 제1항).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성년후견의 경우와 같습니다(제959조의6, 제940조의3, 제921조, 제940조의6 제3항).

한정후견 역시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종료하는바(제14조, 제14조의3 제1항, 제959조의20 제2항),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할 때

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최근 한정후견과 관련한 실무의 동향은 정신적 제약의 소멸 여부를 의학적으로만 따지지 않고, 피후견인에게 후견지속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3) 특정후견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이때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제14조의2 제1항, 제3항),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제959조의9 제1항),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1).

특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특정후견인도 대리권을 보유할 뿐이지,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나 취소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에 대하여는 신상결정권한에 관한 제938조 3항, 제947조의2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단, 제959조의12에서 제947조를 준용), 신상결정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설사 향후 신상결정권한이 필요해지면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한 처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제959조의8).³⁾ 특정후견인에게도 신상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일회적 특정한 신상보호에 대한 사안을 위해서도 특정후견이 이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938조 제3항, 제94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⁴⁾

특정후견은 기간의 만료, 후원이 필요한 사무의 완료(제14조의2 제3항),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있거나(제14조의3, 제959조의20),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종료합니다.

3)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2018, 박영사

4) 김형석,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항”, 가족법연구 제28권 2호, 2014.7., 한국가족법학회

특정후견의 경우,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다만 공공후견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특정후견인의 이해관계인들이 재산처분 등 후견개시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⁵⁾

(4) 임의후견(후견계약)

후견계약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미리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등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확정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됩니다(제959조의18).

후견계약은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장래를 대비하여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 가장 먼저 이용해야 하는 후견유형입니다. 이에 민법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고(제959조의20 제1항. 성년후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을 때는 후견계약은 종료), 기존에 법정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더라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해야 한다(제959조의20 제2항 본문)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와 같은 민법 규정(제959조의20)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하생략)”이라고 판시하여 임의후견 우선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5) 김성우(주3).

다만,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후견이 우선할 수 있고(제959조의20), 이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임의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하거나 신상결정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다만,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중대한 결정(격리행위, 침습적 의료행위 등)을 할 때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유추적용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⁶⁾

만약,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을 위하여 처리할 사무가 있는데, 후견계약에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여 해당 사무의 후원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으면 될 것입니다. 민법은 임의후견과 특정후견의 병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959조의20 제1항,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더라도 후견계약은 종료하지 않음).

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고, 후견인에 의한 대행의사결정을 허용함으로써 피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년후견의 경우 과거 금치산제도와 유사하게 포괄적으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어 포괄적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

6) 김성우(주3)

으며,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할 때만 후견 종료를 허용하여 사실상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정후견 역시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유보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부여받은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후견개시 원인이 소멸할 때에만 후견 종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술한 두 유형에 비해서는 비판의 정도는 약하나, 역시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후견인에 의한 대행의사결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술한 세 가지 유형은 모두 법원이 후견개시 및 후견인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는 배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개시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나 명시적인 반대는 요건이 아니고,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제14조의2 제2항), 피후견인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이상 후견개시에 대한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가지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습니다. 후견인 선임 역시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 되지(제936조 제4항 등), 피후견인이 반대하는 자는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거나, 후견인을 선임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피후견인의 의사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는 우리나라도 비준가입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친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에서 의사결정대체제도인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3 후견인

후견인은 먼저 민법에 따라 성인에 대한 것과 미성년자에 대한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여러 명이 선임될 수 있고, 법인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제2항, 제3항). 그에 반해, 미성년후견인은 자연인 한 명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제1항).

후견인은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친족후견인, 전문가후견인, 공공후견인, 그 밖의 제3자 후견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친족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서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전문가후견인은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가 선임되는데 각 전문가 직역단체에서 실시하는 전문가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로 등재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개인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인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에는 법무사로 구성된 법인,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법인 등 전문직역별로 후견법인이 출범했으나, 현재는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고루 소속된 후견법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피후견인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후견인이 될 적절한 친족이 없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전문가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수여받습니다(제955조). 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전문가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나 피후견인에게 자력이 없어 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의 일환으로 법원에서 후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국선후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에 대해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후견활동을 지원·감독하며, 후견인을 양성·관리하는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공공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은 제2장 참조). 공공후견인은 각 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성, 관리되는데, 발달장애인, 치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사업의 경우 개인 공공후견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법인이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제3자 후견인은 전문가나 공공후견인이 아님에도 여러 사정으로 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자를 말합니다. 피후견인이 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무연고자인 데, 그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전술한 후견인들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4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입니다(제940조의6 제1항 본문).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 부재 시 후견인 선임 청구(제940조의6 제1항 단서), 급박한 경우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동조 제3항).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크게 후견인의 권한남용 내지 임무해태를 통제하는 것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성실히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의 경우와(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제940조의2)를 제외하고는 임의기관으로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임합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제940조의7, 제930조 제2항, 제3항).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크게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 그들로 구성된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가족들 사이에 분쟁은 없으나, 피후견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후견개시사건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친족에 의한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친족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전문가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후견사업을 통해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동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고 있고, 각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부서나 기관이 후견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장 공공후견제도

1 공공후견 개요

공공후견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에 대해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후견활동을 지원·감독하며, 후견인을 양성·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 그리고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7)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보호대상아동(시범)
실시	2014년	2017년	2018년	2024년
근거법률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복지법	치매관리법	-
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성인 중증정신장애인	저소득층 무연고 치매환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 광역)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치매센터	아동권리보장원
후견감독	지자체, 공공후견법인	지자체	지자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후견인	개인 공공후견인	공공후견법인(2개소)	개인 공공후견인	개인 공공후견인
후견인 양성교육	30시간	-	19시간	-
활동비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50만 원)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상한액 없음)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40만 원)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상한액 없음)

7) 배광열, “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 가족법연구 제37권 3호, 한국가족법학회, 2023.11.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가. 사업 개요

(1) 의의 및 근거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후견인 선임을 위한 자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려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로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14조의2,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이 있습니다.

(2)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추진체계 및 주체별 기능

(1) 추진체계⁸⁾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대상자 선정	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군·구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군·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군·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 →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		
후견심판청구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심판청구(시·군·구 → 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연초 시·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보조금교부 및 심판절차 종료 후 비용 지급, 정산, 잔액 반납

8) 보건복지부,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19면

(2) 주체별 기능

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등) -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교부 및 관리·감독 - 후견감독기관 역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공공후견 심판청구 관련 법률자문 - 공공후견 심판청구 및 사후조치 -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 지출·관리
후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양성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다. 주요 지원 내용

(1)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추천

총 30시간의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고, 사건본인에게 적합한 자를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여부, 사리판단 능력, 장애에 대한 이해도, 직업 및 경력, 후견인 활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하는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추천하는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후견심판청구서·사회조사보고서 등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사회조사보고서와 후견심판청구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건본인 주소지 소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3) 후견심판청구서의 제출

사건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장(시·군·구청장)이 심판청구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인사임허가청구 등은 예외). 후견심판청구서가 완성되면,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가 없는 경우)이 이를 전자소송 형태로 제출합니다.

(4)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후견인활동비 지원

후견인들에게 실비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활동비 액수는 월 만 원으로 하되, 다수를 후견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부모 등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징

(1) 특정후견심판청구의 원칙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민법상 후견 유형 중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개시될 수 없으며, 심판 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정하여지는바⁹⁾, 특정

9) 이에 반해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평생 동안 후견이 지속됩니다.

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잘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법령들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임용, 면허, 자격취득 등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후견법인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930조 제3항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인후견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 역시 후견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후견의 경우 개인후견에 비해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면서 후견업무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질 높은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후견보다는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후견법인은 그 법적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장점이 있는바, 현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 특정후견인의 권한행사

- (1) 일반적으로 특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특정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합니다.¹⁰⁾ 후견인은 우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후견인을 위해 의사결정을 대행합니다.
- (2)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경우 등 대리권행사 시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10) 특정후견심판이 등기되기 이전에는 특정후견심판문을 제시하며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바. 특정후견사무의 감독

(1)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특정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경우 사건본인 주소지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이에 근거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으로부터 매년 1회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사. 특정후견 지속여부조사

- (1) 특정후견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특정후견 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여 후견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2) 후견인감독기관인 지자체는 후견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후견인 및 피후견인을 면담하여 후견인 및 피후견인에 대한 특정후견 지속여부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공공후견법인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 (3) 특정후견 지속 여부 조사 시 특정후견 개시 이후의 변경사항, 현재 특정후견 사무의 목표달성 정도, 새로운 사무후원 필요여부,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등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특정후견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아. 2024년 사업지침 개정내용

(1) 심판청구 관련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 일부 사건에 대한 외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사건: 특정후견의 심판, 관할변경, 감독인변경, 후견인변경, 사전처분
- 위임사유: 법률관계 복잡 등의 이유로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 필요절차: 사전에 지역센터에서 중앙센터로 위임 사유, 사건 내용 등 공유 및 검토 후 진행(중앙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의 담당자 합의 필수)
- 변호사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또는 공공후견지원사업 관련 사건 수행 경험자

(2) 사업관리 관련

공공후견지원사업 장기 대기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기수요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후 대기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 시, 후견수요 등 재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타서비스연계, 신청철회 등 후속조치

3

치매공공후견사업

가. 사업개요

(1) 의의 및 근거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법적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18.9.20. 시행)¹¹⁾,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입니다.

(2)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기본적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¹²⁾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12)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나. 추진체계¹³⁾

수행기관	수행업무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예산 지원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실시
시·도	광역단위 사업 조정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치매센터/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총괄 • 지방비 확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대상자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대상자 발굴·선정 • 후견심판청구 • 후견인 활동비 지급 • 후견 감독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후견인 후보자 선발·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 후견인 후보자 지원 및 인력풀 관리 • 후견인 후보자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교육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자문(후견심판청구지원 계획 및 체계를 확립한 시·도 광역지원단만 해당) * 전문인력(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을 두고 시도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판청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심판청구 업무 지원 가능. 단, 후견심판청구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해 중앙지원단에 사전·사후 보고 및 상호 협의 필수
중앙지원단 (중앙치매센터)	법률자문 및 후견사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심판 청구지원 및 법률자문 • 광역지원단·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 • 후견업무 관리·감독 지원 • 후견인 후보자 교육과정 지원

13)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본문) 281p

다. 업무 추진 절차¹⁴⁾

수행업무	수행주체	세부내용
후견대상자 선정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후견대상자 발굴 - 후견지원회의를 통해 최종 후견대상자 선정 - 광역지원단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후견인 후보자 추천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관리 - 후보자 추천 요청 접수 후 2주 내 후보 추천 (2배수 이상 추천 원칙)
후견심판청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중앙·광역 지원단	- 후견대상자-후견인 후보자 최종 선정 - 후견심판청구(중앙 또는 광역 지원단 지원)
후견감독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후견인 정기보고서 검토·확인 등 후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후견지원회의 개최) - 매년 관할 법원에 후견정기보고서 제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요양병원 및 시설, 노인보호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유관 기관에 후견대상자 발굴 의뢰가 들어오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공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발굴하고, 공공후견이 적절한지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후견대상을 최종 선정합니다. 그 후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공문시행 원칙), 광역지원단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인력풀에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치매안심센터에 추천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인 후보자 선정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 중 후견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여 광역지원단에 알립니다.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청구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건본인을 치매환자로 하여,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치매 환자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14)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본문) 282p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때 공공후견인과 더불어 후견인 후보자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실제 후견감독업무는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사업 담당자가 하도록 합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및 공공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하고, 정기보고서(매월, 매년)를 제출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법원에 후견감독보고서를 매년 제출합니다.

라. 주요 지원 내용

(1)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추천

광역지원단에서는 매년 후견인 후보자 선발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공지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별 후견인 후보자 선발계획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신청 및 이수 후 최종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에게 위촉장 수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후견인 후보자는 광역지원단에서 관리하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 후견인 후보자 중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추천하게 됩니다.

광역지원단에서는 양성교육뿐 아니라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이수 후 1년 이상 경과한 활동 대기 중인 후견인 후보자(향후 후견인으로 활동 의사가 없는 자 제외)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상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후견심판청구 지원

중앙지원단은 사건본인 주소지의 지자체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그의 위임을 받아 후견심판청구를 대리하고, 후견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앙지원단의 변호사가

대리하여 수행합니다.¹⁵⁾ 또한 후견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률지원 일체를 하고, 후견사무와 관련된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내에서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지원회의, 자문수당, 회의 다과비, 사회조사보고서(1건당 최대 10만 원), 법원 인지송달료 등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합니다.

(3)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담당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가 상이한데, 치매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 1인 담당 시 월 20만 원, 2인 담당 시 월 30만 원, 3인 담당 시 월 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 맞춤형 사례관리사업과 치매공공후견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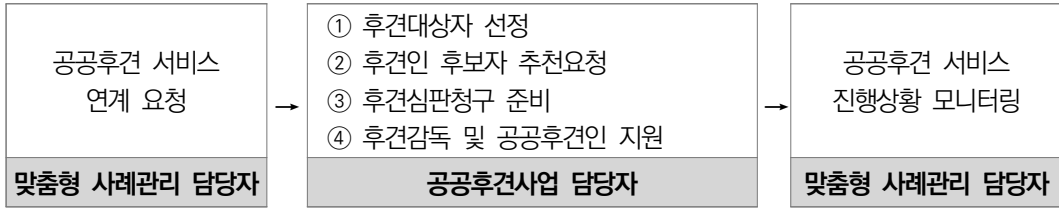
(1) 개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 및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어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 및 후견사무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후견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2)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중 후견 대상자 선정 기준(가족, 소득, 욕구, 학대·방임·자기방임 가능성)에 부합한 경우 공공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및 후견사무 지원하도록 합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자가 공공후견사업 담당자를 통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계하도록 합니다.

15) 2024. 8. 기준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 중앙지원단이 아닌 경기도 광역지원단(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공공후견사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공공후견 대상자 중 대상자의 신체·정신 및 개인·가족 영역 등에서 복합적인 욕구가 확인되는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도록 합니다. 연계절차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가. 사업시행 배경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은 구 정신보건법이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개정된 것)의 비자의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가9)이 있으면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개정 목적이었습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 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원을 시키거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 등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정신요양시설 내 무연고자거나 보호자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사실상 무연고자인 정신장애인을 전수조사하였고, 그들 중 의사결정능력이 자의입원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500명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으로 공공후견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전국에서 수백명에 대한 후견을 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 장애인 인권옹호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온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태화,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추진체계

2024.11. 기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2개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고, 정신장애인의 거주지(또는 거주시설)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후견청구 및 후견감독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종래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시달 -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지원 예산 집행 및 사업 평가 - 공공후견인(법인) 지정 - 후견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사업지침 제·개정 지원 -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법인 관리·감독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공공후견인(법인) 대상 교육
시·군·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필요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 - 후견감독사무 수행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 정기보고서 점검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연 1회) 제출 - 피후견인 권익보호사항 확인

공공 후견인 (법인)	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후견인(법인) 활동(후견서비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담당자 모집 및 선발 - 후견담당자 기본·보수교육 - 후견담당자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연 2회)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보고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관계기관	정신질환자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후견 지원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필요 서류 구비 등)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지원(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 • 공공후견법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후견법인 후견사무 협조

다. 지원내용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함(무연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포함) - 후견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공공후견법인 활동비 지원 :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공공후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②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지정기간 : '23.1.1.~'24.12.31.
후견 유형	• 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지원 가능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심판청구(청구인 : 지자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후견보고서 점검 - 후견사무보고서 점검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정기후견보고서 점검(분기별 수령, 후견법인이 시·군·구에 직접 제출) • 후견감독 사무보고서 법원 제출(후견개시 이후 매1년마다 작성)

라. 참고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 1. 3.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건강복지법[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에서 비로소 법제화가 되었고, 2024.11.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공공후견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법률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도 마련하였는바, 공공후견과 절차조력 양 사업의 유기적인 운영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3장 후견심판청구 절차의 이해

1 후견 개시 심판 준비하기

가. 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우리 주변에는 발달장애인이거나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안전망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후견사건들은 당면한 또는 가까운 시일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무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의사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능력은 한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개별 법률행위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법률행위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판단합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누군가에게 발달장애 또는 치매와 같은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 정도는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행위는 나중에 당사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그 의사능력의 유무가 문제되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후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을 가진 개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무와 다양한 공법

상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후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지, 추후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나. 후견사무 파악하기¹⁶⁾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후견을 개시하는 것은 대부분 현재 당면한 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후견사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후견사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후견인이 수행하는 사무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후견의 원칙적 후견유형인 특정후견의 경우,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뉩니다.¹⁷⁾ 법원 실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특정후견에는 피후견인의 신상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제938조 제3항 및 제947조의2)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재산관리사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¹⁸⁾ 여기서 ‘재산관리’라 함은 재산의 보존·관리·처분행위를 모

16)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조

17)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 친족 편, 2020, 785-786면 참조

18) 민법 제949조 제1항 참조. 한편 민법 제959조의 6은 한정후견의 사무에도 민법 제94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민법 제959조의 12는 특정후견의 사무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통상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합니다(민법 제959조의11 참조).

두 포함한 의미입니다.¹⁹⁾ 이러한 재산관리사무의 예로는 ① 은행예금 등의 금융재산 관리, ②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 ③ 보험에 관한 사항, ④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상속과 관련된 사무, ⑤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가 있습니다.

(2)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성년후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는 신상과 밀접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과 신상에 대한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상과 관련을 가지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거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이용·입소,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과 밀접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임대,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예로는 ① 의료행위의 동의, ② 주소·거소의 결정, ③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는 가능하다면 피후견인이 직접 결정하여야 하나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면 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신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결정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민법 제947조의2 제3항)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특정후견으로는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하여 충분한 지원이

19)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2013, 54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발달장애인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경증 발달장애인은 특정후견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경증 발달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반드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사례에서 성년후견을 개시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피후견인의 개별적 상황과 그에 따른 후견사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 후견 제도의 종류 판단하기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제 후견제도 중 어떤 유형으로 후견을 개시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앞서 후견의 필요성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후견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인권 존중,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하에 후견 유형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 즉 의사능력의 정도 외에도 후견의 지속성 여부, 후견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공후견의 경우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²⁰⁾ 의사능력 정도 판단은 후견의 유형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성년후견, 그 다음은 한정후견’과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후견 유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특정 사무에 한해서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견으로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가 특정후견 유형으로는 처리되지 않는지 여부, 후견개시 사유가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0) 보건복지부,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14면;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80면.

즉,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사능력의 정도가 가변적인 피후견인을 위해 동의권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후견 관련 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치매센터 등)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청구인 선정하기

(1) 개괄

여기에서는 후견개시를 위한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의 종류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청구권자는 후견의 종류가 무엇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후견의 경우 청구권자가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와 같아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4조의2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본인에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이 개시되어 있다면 굳이 특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공공후견 지원사업에서의 후견개시심판 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후견사업의 일환으로서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고 해도 사건본인의 가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사건본인이 ‘무연고자’여서 그를 위한 후견개시 심판을 위한 절차를 청구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공후견심판을 위한 실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치매센터 등이 맡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하고 있습니다.²¹⁾

검사의 경우 공익의 대표자로서 민법상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제도가 활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21) 보건복지부,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8-29면;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98면.

(3) 본인이 직접 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특별대리인 제도 활용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데, 검사나 지자체장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권자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대리인은 민사소송법 규정(제62조의2, 제62조)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이 수소법원(후견인선임심판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에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이후 후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활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마. 공공후견인 후보자 선정하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공공후견법인) 중 1인을 선정하거나 가족 중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²²⁾ 이 경우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사건본인이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인 경우에는 거주시설 종사자 등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사건본인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ex 활동지원사)의 경우 후견인과 중복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²³⁾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시군구(치매안심센터)는 광역지원단에 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고 광역지원단의 추천을 받은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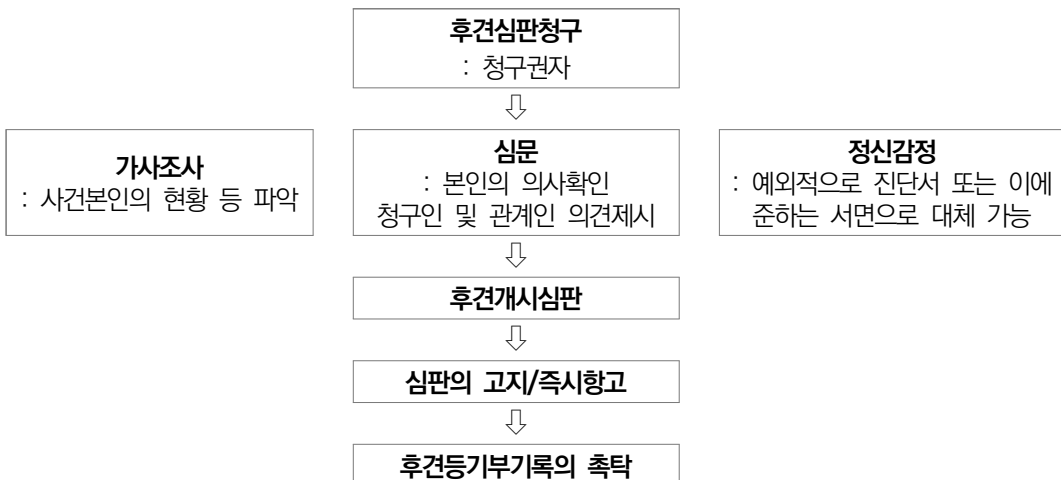
22) 실질적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는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한 공공후견법인이 하게 됩니다.

23) 보건복지부,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6면

2 후견심판 청구하기

가. 후견심판 절차 흐름에 대한 개괄

후견개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어떤 후견을 어느 범위에서 청구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필요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미비된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후 사건 본인과 후견인 후보자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가사조사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신감정촉탁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되면 심리를 하는데 이때 사건본인 심문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법원의 가사조사,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 정신감정 등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은 심문을 종결하고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후견심판청구의 경우에 정신감정은 의무가 아니며(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공공후견 지원사업 실무상 진단서 및 사회조사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심문기일 출석도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업안내 상 가정법원이 후견심판 심리 진행 중, 시군구에 적합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시군구에서 회보서를 제출한 뒤 후견심판이 내려지면 가정법원에서 시군구로 공공후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시군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나.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준비하기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²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서 류 명 칭		
1	심판청구서	
2	사전현황설명서	사건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3		기초자료
4		
5		사무처리
6		능력관련 자료
7		재산관련 자료
8	소명	사회조사보고서
9	자료	심판청구 동의자료
10		후견인, 감독인 관련자료
11		위 각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첨부함
12		
13	첨부	소송위임장 또는 심판대리허가신청서
14		사건본인 출석 시 보조인(의사소통목적) 출석허가신청서
15		절차구조신청서
16		예납할 인지대, 송달료 준비

24) 보건복지부,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30면 참조

Q 후견인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용정보조회서, 소재기 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후견인 후보자의 전과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에게 서류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아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건 본인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 동거하는 친족 등)의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후견인이 처리하는 사무에는 재산관련사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선순위 추정상속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또는 후견인 후보자가 유일한 선순위 추정상속인이거나, 선순위 추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본인 부모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아 사건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추정상속인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송달가능주소를 파악하여 동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에 추정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는 어떠한 서류인가요.

A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사건본인이 정서적 거부감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후견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시될 수 없는 것이지,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견대상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서 또는 의향서 모두 불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후견심판시 후견 대상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후견계획서 작성하기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중 하나로 후견계획서가 있습니다. 통상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회복지사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관련 실무자가 후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후견 사무의 내용이 적혀있으므로 후견인 후보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후견심판청구서 작성하기

각 필요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소명자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특정 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작성하면 되고 심판 진행 중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특정후견 심판청구서의 샘플은 사업안내 중 서식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식 1, 2 참조).

[특정후견 심판청구서의 구조]

목차	내용
기본 정보	심판청구명,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기재
청구취지	형식에 맞춰 기재
청구원인	청구인의 지위
	사건본인 사무처리 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특정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특정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소명자료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사건본인에 관한 서류
	사건본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후견감독계획서
	위 각 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소송위임장 혹은 심판대리허가신청서
	(인지송달 납부증명)

※ 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 작성합니다.

마. 후견심판청구서 접수하기²⁵⁾

후견심판의 청구권자는 특정후견심판청구서가 작성되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첨부서류 및 소명서류들이 준비되면 이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청구인이 직접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근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나 문서제출 등을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하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²⁶⁾

- 1) 심판청구서와 제출서류를 문서파일로 변환하기
- 2) 심판청구서 중 ‘청구취지 별지’와 ‘청구원인’을 별도의 문서파일로 분리하기
- 3)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기
- 4) 심판청구서 접수
 - 1단계: 문서업로드
 - 2단계: 전자서명
 - 3단계: 소송비용납부
 - 4단계: 문서제출

2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전자소송 안내를 참조

26) 통상 관련 준비는 공공후견 관련 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치매센터 등)에서 준비하게 되므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

사전처분

가. 의의

사전처분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²⁷⁾²⁸⁾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신청 혹은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본안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 진행 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 심판 절차에서는 사전처분 심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후견개시 결정전에도 긴급하게 피후견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권리구제에 매우 유용하지만,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 사전처분결정의 확정이 지연될 수 있고²⁹⁾, 사전처분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³⁰⁾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³¹⁾

27)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8)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9)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30) 동조 제5항

31) 동법 제67조 제1항

나. 사전처분의 종류

(1)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법원은 후견개시심판에서 사건본인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 혹은 신상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³²⁾ 이는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후견인 선임결정은 선임된 임시후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³³⁾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임시후견인을 해임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³⁴⁾ 가정법원은 임시후견인에 대해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³⁵⁾

(2)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법원은 후견인(또는 후견감독인)변경청구, 후견 종료 청구 등 사건에서 후견인(후견감독인)의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³⁶⁾ 또한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32)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

33) 위 규칙 동조 제5항, 제2항

34) 위 규칙 동조 제5항, 제3항

35) 위 규칙 동조 제6항

36)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를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³⁷⁾

한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³⁸⁾ 즉, 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한정후견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합니다. 이는 임시후견인 선임의 사전처분 신청에서는 성년후견인의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³⁹⁾

그밖에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⁴⁰⁾은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에서와 동일합니다. 후견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시후견인과 달리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부터만 직무대행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⁴¹⁾

다. 불복방법

사전처분의 절차는 심판청구 심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37)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38) 위 규칙 동조 제1항

39) 위 규칙 동조 제4항

40) 위 규칙 동조 제3항

41) 위 규칙 동조 제6항

4 후견심판 절차

가. 가사조사

(1) 가사조사의 의의

후견개시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사건본인의 생활내력, 현재 생활상태, 사건본인의 재산내역과 관리상황, 사건 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의 범위,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사항, 후견인의 향후 후견계획,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 등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합니다. 이때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직접 후견인 후보자 및 사건본인 등을 면담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상황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사건본인의 가족들이 조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심리를 마친 이후에도 조사관을 통해 후견인이나 감독인 혹은 사건본인과 적절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상황에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조사관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후견사건에서 가사조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후견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재산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는 전화조사, (사건본인의) 법원 소환조사, 출장 조사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후견인의 상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미리 가사조사에 준비하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건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수 없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도 충분하지 않아 진료감정 기록도 불가능한 경우

- 사건본인이 법원에 직접 나올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사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거나 사건본인은 사건의 진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 또는 가족들 간에 후견개시 또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가 사건본인의 유일한 가족인 경우,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방계친족인 경우

(3) 가사조사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제약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가족들 사이의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가사조사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사항 및 준비항목

가사조사는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및 생활환경,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그밖에 후견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① 사건본인의 성장 및 현재 생활에 대한 자료 : 생활환경, 생활 근거지, 보호자의 존부 등
- ② 사건본인의 인지능력 및 정신상태 : 현재 인지능력에 이르게 된 경위, 인지능력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악화되고 있다면 그 경과 등
- ③ 사건본인의 재산내역, 관리현황
- ④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여부 및 향후 후견계획

(5)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열람

가사조사관이 위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재판부는 가사조사보고서를 중요자료로 참고하여 청구취지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후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한편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자

에게도 제한적으로 공개되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가사조사보고서에서 공개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사건본인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될 때 보완할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보정명령

후견심판청구서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가사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모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서 미비한 서류들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정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상보다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미비

① 가족관계 관련 서류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②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③ 사전현황설명서

④ 진단서 및 진료기록

⑤ 재산목록

(2)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후견인 후보자들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후견인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경우 심판청구와 함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였다면 ①, ③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밝히면 됩니다.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③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후견심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목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정서를 통해서 이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후견인의 신용정보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여부 확인

사건본인의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견서(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들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친족의 송달가능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은 후 선순위 추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친족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⁴²⁾ 이를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 정신감정명령

(1) 정신감정의 필요성

사건본인에 대하여 후견개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사건본인의 정

42)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

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신감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⁴³⁾ 특히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그 진료기록이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의견은 진단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면이나 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⁴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고, 사건본인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신감정촉탁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정신감정촉탁신청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정신감정이 꼭 필요한데도 법원이 정신감정촉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 측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그 범위, 후견 개시 등의 필요성과 관련한 감정인의 견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신감정절차를 갈음할 의견서 등 구비의 필요성

공공후견 사업의 경우 특정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감정촉탁 절차의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신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위 의견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의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 사건본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표기되어

43)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

44)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

있는 진단서 등의 의견서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도 정신감정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입니다.

라. 심문기일

심문기일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에 관하여 심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심판의 필수 절차는 아니며, 가사조사가 있었던 경우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출석 당사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구인을 심문기일에 소환하지만 후견인 후보자, 사건본인(피후견인)⁴⁵⁾, 이해관계인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자가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감정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할 수 있고 출장조사도 거부하면서 협조하지 아니하면 임시후견인이 직권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번호, 청구인, 상대방, 심문기일의 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인 송달장소로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소환’이라는 단어 때문에 놀라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재판 참석 날짜를 알리기 위해 통지문을 보내는 성격이므로 사건에 대해 숙지하고 출석하면 됩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한 이후라면 많은 사항을 심문하지는 않을 것이나, 가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상황, 후견이 필요한 이유, 후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나 대리권의 범위,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문기일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가져야할 자세, 재산목록 제출, 후견보고서 작성, 권한초과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등 후견인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 전에 사회조사보고서, 심판청구서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심문기일은 보통 1회 정도 열리지만 필요한 경우 수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45)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의 출장조사 등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소환장에 적힌 장소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소환장에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기일변경신청서(심문기일 예정일 1주일 전)를 제출해야하며, 소환장에 적힌 담당 재판 부,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 불복방법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게 고지됩니다.⁴⁶⁾ 고지는 이들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으로 송달이 된 때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⁴⁷⁾ 성년후견의 개시, 선임된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심판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⁴⁸⁾ 즉시항고권자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인이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최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후견개시심판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⁴⁹⁾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⁵⁰⁾에 대하여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습니다.⁵¹⁾ 이때의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은 항고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46) 가사소송규칙 제25조, 제35조 1항

47) 가사소송규칙 제35조 2항

48) 가사소송규칙 제36조

49) 가사소송규칙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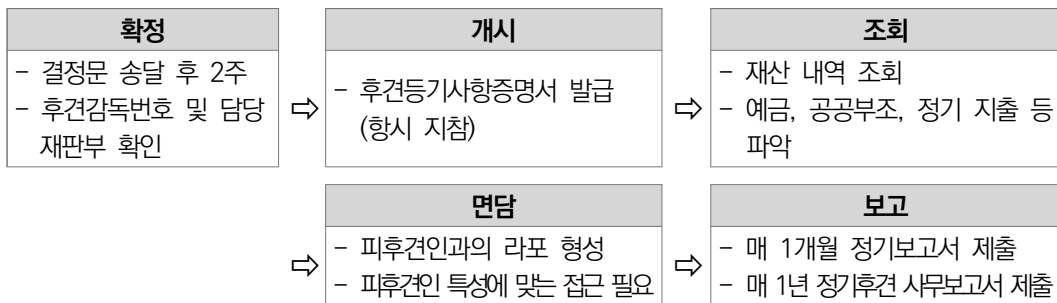
50) 여기서 항고법원의 결정은 제1심의 심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원심판을 취소하거나 자판하는 것 등을 말하며, 관할위반 또는 심리편의에 따른 이송결정, 원심재판장의 즉시항고장 각하명령 등에 대한 불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1)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제4장 후견업무의 이해

1 후견활동 개요

가. 초기 단계



[후견 개시 후 초기 단계 활동 개요]

(1)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견개시심판은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청구인, 사건 본인, 후견인, 이해관계인 중 마지막에 송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⁵²⁾ 사건이 확정되면 후견인에게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이라는 서류가 송달됩니다.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감독사건⁵³⁾이 개시되고, 위 안내문에서 “기본후견감독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후견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기본후견감독사건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⁵⁴⁾에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52) 만약, 항고심의 경우라면 항고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바로 확정됩니다.

53) 후견개시사건은 사건번호에 ‘후개’가 들어가며, 후견감독사건은 사건번호에 ‘후감’이 들어가며 후견인은 후견감독사건을 기억하여 활동하면 됩니다.

54)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건번호	2022후감	사건명	[전자] 특정후견감독(기본)
청구인	(OOO)	상대방	
재판부	제 가사단독(비송) () (전화:031-	가사조사관	제 가사조사관 (전화:031-
접수일	2022.07.21	종국결과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창설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후견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첨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예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사건본인(피후견인)에 관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후견개시사건에 관한 사항, 후견인에 관한 사항, 대리권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등 목록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후견인의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후견인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 후견인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후견개시사건을 검색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창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첨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창설 예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에 여러 장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너무 많은 수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인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현금납부만 가능).
- 발급 부수는 후견인이 방문해야 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한 번에 필요수량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이 유료이고, 가정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사본을 받도록 요구하고, 원본은 후견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조사

(가) 개요

공공후견은 현재 특정후견의 형태로 개시되고 있고, 특정후견의 경우 재산목록 조치가 필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정기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산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개시 시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변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개시 시점에 사회조사보고서나 피후견인의 친족, 보호자, 사례관리자 등으로부터 재산내역을 청취하여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예금

통상 공공후견인의 대리권에 “금융(예금) 관련 개인정보 조회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 또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공부조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내역(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조회합니다. 위 계좌의 내역 조회를 통하여 피후견인의 기본 소득, 정기 지출,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숨겨져 있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수급비 계좌를 비롯한 사용 중인 계좌의 압류 내역, 자동이체 내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

피후견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후견인의 인적사항과 후견인임을 밝히고, 보험증권을 받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의 내용, 납입보험금, 보험만기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익자가 제3자인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하고, 특별한 경위가 소명되지 않으면 수익자를 피후견인 본인 또는 공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⁵⁵⁾

(라) 임대차 계약

피후견인이 거주지를 임차하여 생활한다면, 임대차계약서나 확정일자 발급내역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복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 복사가 불가능하다면 거주지 소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후견인 명의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합니다.

(마) 공적부조 및 세금

기초생활비, 기초연금 등 사회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납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바) 기타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들어가는 정기적인 병원비, 주거지 월세 등을 조사하여 매월 지출되는 정기적인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시설(요양시설, 장애인거

55) 수익자를 공란으로 변경 시, 피보험자인 피후견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주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활비 납부 여부, 개인 용돈, 시설에서 지출되는 경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유하는 부동산,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개시심판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후견개시 심판청구 기록을 통하여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4) 피후견인, 이해관계인 면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은 물론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이들을 면담해야 합니다. 특히, 후견인이 되었다고 하여, 혼자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돌볼 수는 없고, 기존 조력자들의 도움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후견인과 관계인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시설관계자들이나 친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과 면담이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의 도움을 받거나 피후견인 주변 사람들 중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면담할 수 있습니다.

(5) 초기 보고서 작성

매 1개월마다 공공후견인은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후견법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서식29, 서식32, 서식37, 서식44. 각 사업별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참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지출한 것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 내역을 증빙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그 내역도 보고해야 합니다.

나. 사무후원, 대리권 행사

(1) 원칙

특정후견인의 사무후원이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어떤 사무의 수행을 조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원에는 의사결정지원과 대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종전부터 보여 온 언행, 행동,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의사를 추정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합니다.

(2) 피후견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방법

(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언어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가집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신체 비언어적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언어에 있어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 겉모습을 보고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판단은 금물이다.
-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해야지 결정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사생활 존중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결정사항이 재정문제인가, 건강문제인가,
- 결정하는 시기
- 결정해야 할 것이 단순한가, 복잡한가,
-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 환경이 익숙한 곳인가, 낯선 곳인가,
- 개인의 경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등이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피후견인의 선호하는 방식)
- 피후견인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장소와 시간 선택
- 의사결정 과정에 주변의 다른 사람 활용 등

(나)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경우, 기억력, 지남력⁵⁶⁾, 언어, 시공간 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장애를 비롯하여, 망상, 의심, 환각, 우울증, 공격성 등 정신이상행동 증상을 보입니다.⁵⁷⁾ 치매가 심해질수록, 이런 증상도 심해지게 됩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⁵⁸⁾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⁵⁹⁾, 중증도 치매 단계 이후부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설사 어떤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등 의미 있는 의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6) 현재의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57)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사전(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3.aspx?gubun=0301 2024. 08. 07. 기준) 참조

58) 치매 최경도 단계로서, 기억력의 감퇴가 시작됨으로써 다소 사회생활이나 직업능력이 감퇴되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위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사전 참조).

59) 그러나,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단계인 자는 독립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후견이 개시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은 잔존능력⁶⁰⁾에 따라 사안별로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바, 후견인은 피후견인·보호자 등을 수차례 면접·관찰함으로써 파악한 잔존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가 심하여 그의 잔존능력이 거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곁에서 오랜 기간 그를 지켜보고 보호해 온 가족·이웃·사례관리자 등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선택하였을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대리권 행사시 주의 사항 - 후견인 증빙 등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그의 (추정적)의사에 합치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후견인은 반드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 변경 허가 심판문 등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 사본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그와 같은 필요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피후견인에게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후견인으로서 그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4) 권한 초과 행위가 필요할 경우 - 대리권 변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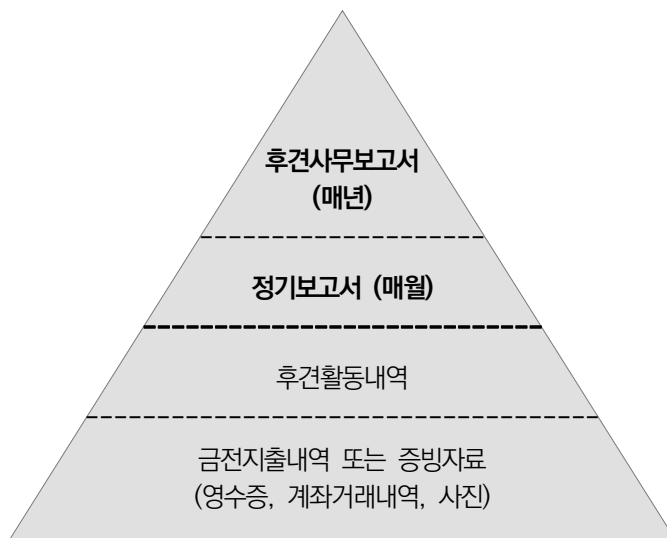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할 필요가 있거나,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대리권 수여 심판청구 또는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서식 40.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참조].

통상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대출계약, 수술, 격리행위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

60) 피후견인의 기억력은 최근 기억에 대한 인식, 저장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저장된 과거기억을 상실하는 순서로 감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과거 기억에 대하여는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는 편이고,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과 관련된 능력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ex. 은행에서 일했던 피후견인은 사칙연산 능력이 비교적 오래 남음).

위⁶¹⁾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후견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후견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리권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후견인은 후견감독인, 지원기관의 조력 아래 해당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유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소명해야 하고, 가능한 후견감독인의 동의서⁶²⁾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와 별도로 처분명령 심판 중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게 되면 즉시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무를 긴급히 수행해야 하여 법원의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감독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지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⁶³⁾

다. 정기보고서 작성(매 1개월, 매 1년)



[후견보고서 작성 개요]

61)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 제950조 제1항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한정후견은 제959조의6에서 준용), 일반적으로 공공후견에서 아래 행위는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62) 일반적으로 공공후견의 처분명령 청구시 감독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정명령 전에 미리 감독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판이 빨리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3) 예를 들어, 긴급한 수술행위의 경우 법원에 해당 사유를 설명한 후 사후 처분명령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후견인 월 정기보고서

후견인은 매월 「후견인의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위탁한 공공후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의 정기보고서」에는 피후견인의 주소 등 일반 사항, 근로(급여)관계, 사회복지급여 수령, 생활비 부담자, 생활비 외 용돈 사용처,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 관련 법률행위, 신상결정 사항, 피후견인 대면 횟수와 내용, 안전망 조력자 사항 등에 대해 기재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통장관리 권한이 있을 경우, 보고서 제출 시 금전출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지출내역서 또는 금전출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관련 장부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인 활동내역을 매월 서면으로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며, 이는 후견감독의 근거가 됩니다.

(2) 후견사무보고서

후견개시 심판문을 보면, 법원은 후견인에게 일정기간(통상 매1년) 정기 후견사무보고서를 감독인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독인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사무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후견감독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외에도 후견개시 이후 매 1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⁶⁴⁾

라. 후견 종료시

[후견종료사무 개요]

종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기간만료 • 후견개시사유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후견인 사망 • 다른 유형 후견개시
종료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감독인 검토 필요
종료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 3개월 이내 	
사후사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사무처리의무 • 종료 후 정기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후견인 사회안전망 유지

64) 공공후견의 경우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대신에 매월 제출한 정기보고서로 갈음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후견 종료 사유

공공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나 후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종료합니다. 후견인 사임 또는 변경은 공공후견 자체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후견인 입장에서 업무가 종료되어 다른 후견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종료 사유는 아닙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즉시 그 사실을 공공후견법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알려야 하고, 후견감독인은 후견감독재판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후견이 종료하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재판부에 폐쇄기본증명서⁶⁵⁾와 후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후견종료보고서 작성[서식 38. 후견사무보고서 참조]

종료보고서는 후견이 개시된 이후 또는 종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의 후견사무 수행 내역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⁶⁶⁾, 이 종료보고서에 이 계산 내역을 함께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종료시점의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폐쇄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초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⁶⁷⁾[서식 41.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참조]. 만약, 종료등기신청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⁶⁸⁾ 후견종료등기를 마치면

65) 피후견인 사망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후견기간 종료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66) 민법 제957조, 제959조의7, 제959조의13

67) 후견등기법 제29조 제1항

68) 위법 제44조

후견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후견인은 종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료보고서 작성,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료등기 신청은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후견감독인, 상속인들이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후견인의 상속인들이 먼저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⁶⁹⁾, 후견인은 미리 상속인들에게 종료등기신청은 후견인이 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후견종료등기방법	
신청기관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신청권자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준비서류	신청서, 피후견인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 배우자 등 신청시 피후견인과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대리인 신청시 후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신청방법	법원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가능, 전자 접수 불가 (우편 접수 시, 신청서에 신청인이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4) 사후(事後) 사무처리

후견이 종료되더라도, 피후견인을 위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새로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⁷⁰⁾ 이때 “긴급한 사무”라 함은 종래 후견의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이 종료됨으로써 피후견인이 안전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긴급 연락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9) 위 법 제29조 제2항

70) 민법 제959조(성년후견인), 제959조의7(한정후견인),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 제691조

마. 후견 연장신청

특정후견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후견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6개월 전에 후견감독인 또는 공공후견법원에서 후견인과 함께 특정후견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 여부 조사 시 피후견인, 후견인을 면담하고 「후견지속여부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후견지속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가정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⁷¹⁾

- 특정후견의 목표 미달성
- 피후견인에게 새로운 후견수요가 발생

바. 후견감독인 직무

(1) 개요

후견감독인이란 후견인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공후견 지원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후견감독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에 대한 후견감독인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 선임됩니다.⁷²⁾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대한 지도와 조언
-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민법 제940조의6)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민법 제940조의6 등)
- 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 이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950조)
- 긴급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대신해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민법 제940조의6)
-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민법 제953조 등)
-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각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71) 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가 법원에 별도로 있지 않으며 신규 후견 심판 청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72)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인 경우,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과 직원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후견감독인 직무 실무

원칙적으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소극적인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의 후견업무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그의 역할, 책임, 업무 내용, 금지된 행위, 후견감독인과의 관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후견인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견감독인은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공후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후견감독재판부에 즉시 보고하여 즉각적인 심층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복지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내역을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구축한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의 연락망 등을 관리해야 하고, 후견인이 매년 후견감독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을 조력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견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감독인은 공공후견법인 및 후견인과 후견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후견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후견인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후견인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과 관련된 긴급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제출

후견감독인은 매년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후견감독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으로 하여금 매월 정기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조력하고, 후견감독보고서에는 후견감독사무수행 내역을 기재합니다. 위 보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후견사무 수행 시 유용한 정보

(1) 대리권의 범위와 사무후원의 범위가 다른 경우

후견인으로 활동하다 보면 대리권의 범위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후견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때 후견인은 공공후견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리권 변경 신청 또는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 특정명령 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서식 40.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참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법원의 심판 없이 필요한 사무를 대리할 경우,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후견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이나 공공후견법인의 도움 아래 즉시 후견감독재판부에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지침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라도 필요한 대리권의 내용,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곤란할 경우

피후견인의 부모, 형제, 자녀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후견인은 그들

의 각종 민원성 요구에 대응하느라 오히려 피후견인을 위한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후견인의 업무 수행 욕구가 저하되고, 이는 피후견인의 복리 저하로 이어지므로, 후견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후견인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⁷³⁾,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주요 후견 사무

가. 신상보호영역

(1) 신상에 대한 결정과 대리권 행사의 비교

피후견인 A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B는 A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급한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우니 후견인이 대신 A의 집으로 와서 A를 보살펴달라는 것입니다. B는 후견인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활동보조인이 대근자를 구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활동보조인은 후견인이 신상보호도 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활동보조인이 근무하기 어려울 때는 대신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B는 과연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가진 A에 대한 신상결정권한에 A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상결정사무와 재산관리사무, 법정대리권 행사는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사례와 같이 후견인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결정과 재산관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3) 민법 제954조, 제959조의12 등

신상에 대한 결정은 말 그대로 나의 삶과 관련한 모든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수반하여 재산에 대한 결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결정은 신상에 대한 결정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사갈 지역을 결정하고,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게 됩니다. 그 업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때 부동산 중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주거지가 정해지면,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이사를 가겠다는 결정에 수반하여 부동산 중개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임대차계약)이라는 재산에 대한 결정이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몸이 아픈 경우, 치료를 받겠다는 결정은 신상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 갈지 결정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의료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픈 몸을 치료받겠다는 신상에 대한 결정에 수반하여 의료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상에 대한 결정	⇒	재산관리, 법률행위
주거지 이전 결정(이사가야겠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피후견인 본인이 결정		후견인이 대리

이처럼 신상에 대한 결정은 나의 삶의 순간 순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런 신상에 대한 결정에 따라 나는 재산관리 또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결정은 재산에 대한 결정, 계약체결보다 추상적이면서 더 사적이고, 본질적이며, 본인의 욕구와 취향, 선호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 비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판단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거지를 옮기고 싶다는 결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증의 발달장애인이거나 치매어르신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수반되는 적절한 주거지를 물색하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체결에 이르는 것은 높은 수준의 판단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나, 그에 수반하는 법률행위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피후견인 본인의 결정을 좇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그 결정을 하지 못할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례에서 후견인 B는 A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신상결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A의 활동보조인이 출근하기가 어렵다면 후견인 B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센터에 연락하여 대근자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근자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 후견인으로서 적절한 업무수행태도입니다.

(2) 특정후견의 경우

다만,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한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상에 대한 결정은 피후견인 본인이 하는 것이고, 후견인의 임무는 이를 지원하는 것(의사결정지원)이므로, 신상결정권한 유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피후견인의 신상결정에 따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공공후견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혼란은 신상결정권한과 재산관리권한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데에서 온 것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술하는 피후견인이 응급상황에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후견인에게 신상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주소 및 거소의 결정

피후견인 A는 후견인 B와 새롭게 이사갈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A가 사용할 수 있는 월 임대료는 40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임대료에 A는 조금 낡긴 했으나 방이 2개인 주택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후견인 B는 깨끗하고 신축이지만 방이 1개인 주택을 추천합니다. 후견인 B의 입장에서는 굳이 A가 혼자 살면서 방이 2개일 필요는 없고, 신축에 깨끗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A의 건강이나 양호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피후견인이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지, 재가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병원, 요양원, 요양 시설 등 시설에 입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어느 시설에 입소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신상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소 및 거소의 결정은 피후견인이 결정해야 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후견인의 경험과 지식 등에 비추어 적절한 조언을 함께 하되, 자신의 주관적인 선호를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술한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결정이 명백히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을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하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에 앞서 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탐색하여 시도해봐야만 합니다. 피후견인의 신상과 관련한 가장 중대한 변화이자,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려 끝에 시설에 입소할지 여부는 피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해 시설에 입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후견사업의 대부분은 특정후견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고, 법원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므로, 여러모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시설 입소에 대한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해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피후견인이 입소 신청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시설은 동법에 따른 입소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과 같이 특정후견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므로⁷⁴⁾, 최대한 피후견인에게 잘 설명하여 자의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4) 법원마다 실무는 상이하여, 전술한 것과 같이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특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고령자 등의 경우,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을 물색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의 내용은 주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사회복지관, 후견감독인, 지원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활동을 시작하면 우선 방문하여 현재 피후견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의료서비스

(가) 원칙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제947조의2 제1항). 의료진 역시 어떤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환자인 피후견인 본인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신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일반 진료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 방문할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피후견인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

로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진료 시에는 반드시 후견인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가족,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시설관계자 등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그들이 동행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 병원 입원

병원을 입원할 때도 일반 진료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후견인 본인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 등 의료계약 체결을 지원하거나, 대리하게 됩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응급한 상황이거나, 건강 악화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후견인이 입원에 대한 결정도 대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면, 특정후견인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전술한 것과 같은 논쟁이 있으므로, 후견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신상결정권 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고, 입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특정후견인이 보호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후견인의 이런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피후견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사후적으로라도 법원의 특정명령청구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949조의8). 둘째, 응급환자에 대하여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고(응급의료법 제9조 제1항),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응급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응급의료법 제9조 제2항).

병원입원과 관련하여 공공후견인이 가장 난처한 것은 병원에서 후견인에게 병원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입니다. 이와 같은 연대보증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연대보증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공후견인은 병원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라)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피후견인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후견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특정후견인이더라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9조의8). 다만, 이와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는 피후견인이 의식이 없거나, 응급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술한 응급의료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마) 연명의료중단 결정(DNR동의)은 할 수 없음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피후견인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은 후견인에게 연명의료중단 동의서(DNR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닌 후견인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종과정에 접어든 피후견인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병원비가 발생하고, 존엄한 생의 마무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원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가 연명의료중단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제1호). 만약,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족이 아닌 후견인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그 밖의 방법으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인 공공후견인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공후견인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의료진은 그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정신병원 등에 격리행위

피후견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병원 등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 결정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급적 피후견인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여 본인의 의사로 입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설득이 안 되는데 반해,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라면 행정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공공후견인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신청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후견인도 포함되고, 후견인이 최선순위로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그러나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면 특정후견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고, 법원의 실무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공공후견인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후견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정부가 공공후견인을 통해 지원을 하는 복지사업이므로 피후견인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으로 정신병원에 비자의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입원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공공후견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근로활동

피후견인이 직장에서 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 결정을 후견인이 대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스스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의사결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이 희망하는 업종에서 원하는 시간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근로능력이 충분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후견인의 근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직장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20.5.26.개정된 것)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40호, 2018. 12. 31.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할 때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친권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개념이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규정에 따르면, 성인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과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성인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는 부모나 가족의 의견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한 뒤 후견인의 의견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없이 고용노동부가 추가적인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후견인이 이에 동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공법상 신청행위

피후견인이 글을 읽고 쓰는 내용이 어렵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법상의 신청행위가 어려울 경우, 후견인이 그 사무를 지원하거나 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체결 등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후견인이 그 관리와 발급 업무를 잘 지원해줘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피후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무권대리 행위 기타 위법행위들을 저지름으로써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거나, 인감도장을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인감도장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인감변경, 인감보호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8) 학대피해 등 구제 사안

(가) 서론

1) 지원범위

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원칙 및 절차

-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피후견인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택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른 지원).
- 피후견인의 피해상황을 파악합니다(증거수집).
- 학대로 인한 정서적 트라우마와 의욕상실, 소극적 태도 등 피후견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이 가진 장애와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학대에 미친 영향과 지원 제공시 고려할 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 후견법인, 권익옹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합니다.

- 학대피해 피후견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행위 등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3) 권익옹호기관을 활용한 지원

후견기관 &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등 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지원방안 등을 상담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인권교육, 자기옹호교육 등 훈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나) 피해 확인,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 민사사건 대리

1) 피해확인 및 초기대응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한 경우 가장 먼저 피해 상황을 제거하거나 피해의 원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안전한 임시보호거처를 찾아 피후견인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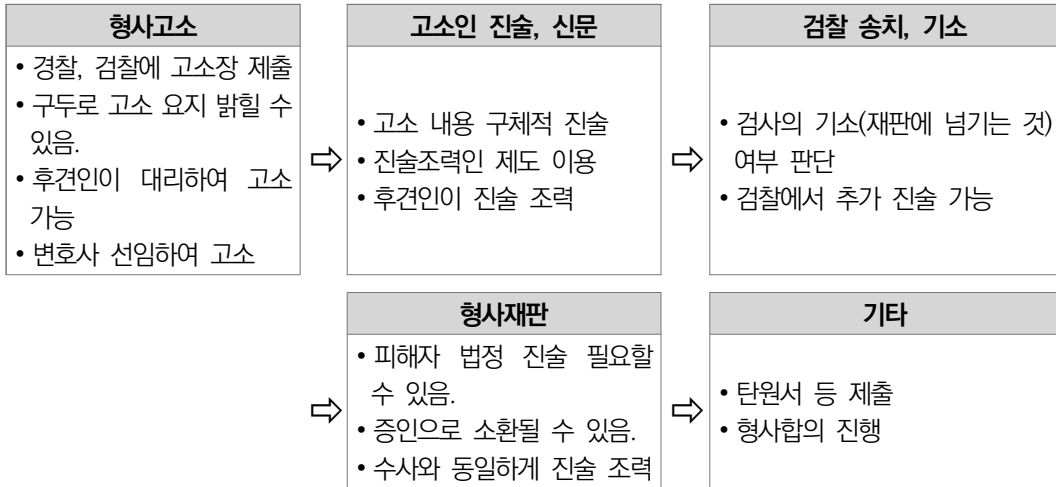
[최초의 피해상황 확인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⁷⁵⁾

기관명	지원제도	관련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조치 -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 이전비(이사실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가명조서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한 등지제도 -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1577-2584

75) 법무부 홈페이지

기관명	지원제도	관련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추가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제도(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 배상명령제도 -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긴급구호 - 경제적 지원(생계비, 간병비 등) - 취업지원 -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등 	1577-1295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1899-3075),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서도 심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472-1295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1644-7077
법률홈닥터	- 법률상담 및 법교육	02-2110-4253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조치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 임시안전숙소 - 가명조서 - 범죄피해자에 대한 동지제도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 범죄현장정리 	18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지원	02-558-1391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1644-829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드림 아동·여성·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182, 117 http://www.safe182.go.kr/index.do

2)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절차 개요]

형사범죄는 초기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권리구제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후견인 혼자서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후견인이 이를 적절히 지원하거나, 대리해야 합니다.

가) 형사 고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견인은 소송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권이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소송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통상 변호사 선임행위까지 함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견인이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고소인 진술 및 대질신문

고소인, 즉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

을 거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하여 양측의 진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자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여 피후견인이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 검찰로의 송치 및 기소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가 결정된다면 가해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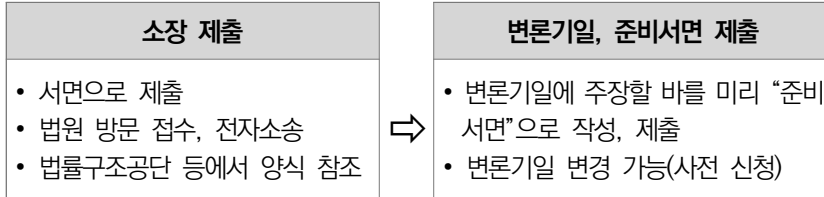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인 피후견인을 증인으로써 소환할 경우 앞선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안정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기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 및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에서 고소장 외에도 피해자의 의견과 입장을 담은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의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3) 민사사건 조력



[민사사건 조력절차 개요]

가) 민사사건 개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민사소송에 응소하려면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통상 변호사 선임행위에 대한 허가도 함께 받습니다.

나) 민사사건 소장제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통상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변론기일의 진행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주장하고 싶은 바를 진술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재판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주장할 바를 미리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반드시 피후견인이나 후견인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소송대리인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후견인은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변론기일이 종결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싶은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갖가지 서류가 존재합니다.

라) 변호사 선임

위와 같은 각종 법적절차 진행은 후견인이라도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특히 피해정도가 클수록 복잡한 민·형사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각종 기록 열람, 복사 등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 등이 해당 기록을 검토 중일 경우 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피후견인 사후(死後) 사무

(가) 개요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후견인의 업무는 당연히 종료하고, 다른 후견 종료 사유와는 달리 후견종료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피후견인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무에 한하여만 종래의 권한을 가집니다.⁷⁶⁾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상속인들에게 인계해야 하고, 관리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후견업무를 종료하여야 합니다.⁷⁷⁾

(나)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 사망과 동시에 후견인은 업무가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되므로, 피후견인 명

76) 민법 제959조, 제959조의7, 제959조의13, 제691조

77) 자세한 내용은 [제4장. 1. 후견활동 개요 라. 후견종료시] 참조

의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이 됩니다.

피후견인의 예금은 상속인들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 후 수령하면 된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후견인에게 통장과 같은 실물을 요구하는 상속인들도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응할 필요는 없고, 후견인은 통장과 같은 실물들은 모두 안전하게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일방에게 통장을 교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파기하고, 상속인들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귀금속, 서류 원본, 상품권과 같은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상속인이 1인이거나, 상속인들 전원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라면 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현물을 교부하면 되나, 그 귀속주체 및 처리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라면 후견인이 불가피하게 계속 그 현물을 보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 후견인은 그 현물을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상속인들에게 하루속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줄 것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장례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후견인에게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한데다가, 피후견인의 재산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리고, 상속인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상속인이 즉시 상속재산 관리, 장례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때, 후견인은 상속인과 협의하여 피후견인의 시신을 적당한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사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을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하는 사무, 사망진단서 발급사무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 사후 사무 처리 개요]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⁷⁸⁾, 후견인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무에는 피후견인 명의의 채무 변제, 공과금 및 세금 납부, 장례 사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⁷⁹⁾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후견인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후견인으로서 정리차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 청산절차⁸⁰⁾를 밟게 해야 합니다.

78) 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행방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상속인부존재 절차가 아닌, 부재자 내지 실종자로 처리해야 한다.

79) 민법 제1053조 제1항

80) 민법 제1056조 이하

나. 재산관리영역

(1) 개요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후견인의 재산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통상 특별한 재산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산관리는 주거래은행통장, 주거용 부동산 등의 범위에서 관리합니다.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함이 원칙입니다.⁸¹⁾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공적 서류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 등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는 공공후견인이 받는 활동비에 포함되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비용을 보전받아서는 안됩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공공후견의 경우 대부분이 특정후견으로 진행되므로 특정후견인은 후견개시심판문에 적시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후견인의 거주이전 혹은 생활비 마련 등에 쓰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후견인에게 그러한 처분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 권한변경신청’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 또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지에 대한 대리권을 대부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은 위 대리권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피후견인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

81) 민법 제959조의12, 제955조의2

를 고려함과 동시에 반드시 후견감독인이나 공공후견법인과 상의 후 후견사무보고서의 형태를 통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에서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피후견인을 만나기도 하는데, 공공후견인이 국민 임대주택의 신청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소비활동 지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비 관리와 필요한 생활용품 구매 등의 사무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구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물품구매 외에도 반찬서비스(복지관), 미용(복지관)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상생활지원으로는 휴대폰 사용, 가스점검, 수도점검, 우편물처리, 가전제품 사용방법, 집안수리, 도배장판 교체, 위생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4) 금융업무

(가) 예금관리

원칙: 대면거래

- 비대면거래(인터넷, 폰뱅킹,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정지
- (일부은행)계좌 지급정지
- 후견개시 즉시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내역 등 확인 필요

체크카드, 직불카드

- 후견인이 직접 피후견인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
- 피후견인이 스스로 경제활동 가능하다면, 체크카드 등 사용할 수 있게 조력

자동이체신청

- 공과금 등 체납되지 않게 주의
- 미리 자동이체 신청

예금계좌 해지, 개설

- 정기예금, 적금 만기시 재이체
- 은행에서 계좌 해지 등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 진행

1) 예금관리업무 개요

최초 후견사무를 개시하면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예금계좌 내역을 파악한 후, 추후 재산흐름 보고를 위하여 그때마다 지출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금 등을 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공공후견인⁸²⁾은 피후견인으로부터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후견인의 계좌 리스트를 정리하고,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기적인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정 상황을 항상 점검하고, 변동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예금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6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므로,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⁸³⁾

2) 계좌관리

공공후견인 최초로 후견사무를 개시하면서 피후견인의 예금계좌 내역을 파악했다면 후견인이 주로 관리하는 계좌와 피후견인이 사용할 계좌를 분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에는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공적부조가 입금되도록 하고, 공과금, 월차임 등이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연체위험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과 상의하여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후견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여 제3자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피후견인이 직접 관리할 계좌는 피후견인과 상의하여 필요한 금액의 용돈이 이체되

82) 공공후견인 중에 예금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83) 이 매뉴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도록 하고, 체크카드를 연결하여 후견인이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후견이 개시된 경우 금융기관의 실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손해발생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對面)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현재⁸⁴⁾ 현금카드, 체크카드의 발급 및 이를 통한 ATM 이용이 가능하고, 폰뱅킹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에게도 금융거래를 위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이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대출을 제외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계좌관리를 위한 후견인의 대면 거래 시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발급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2. 후견인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하여 처음에 원본을 확인하였다면,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원본은 다시 후견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⁸⁵⁾

4)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발급

피후견인이 이미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현금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갱신, 해지” 등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후견인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일상생활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제공하여 용돈 등을 직접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신청 등 권한은 공공후견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므로, 이를 신청하여 보다 편리한 후견사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84) 2024. 8. 기준

85) 종래

5) 자동이체 신청 등 업무

후견인의 업무 중 각종 공과금 납부 업무는 피후견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바, 납부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개시 이후 1~2개월 정도는 정기적으로 피후견인 주거지에 방문하여 공과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등이 발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재신청하거나, 고지서 송달 장소를 후견인의 주소지 등으로 변경하여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 예금계좌 해지, 개설

피후견인 명의의 정기예금, 적금 등이 만기가 된 경우, 후견인은 위 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계좌 또는 기존의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을 재이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나 후견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행에 있는 계좌를 가까운 곳의 은행으로 옮기거나⁸⁶⁾, 업무 편의를 봐주는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이체하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때 일부 금융기관들은 후견인에게 예금계좌 해지, 개설 등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기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예금계좌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바, 후견인은 금융기관에 이는 후견인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을 고지해야 합니다.⁸⁷⁾

7) 금융거래내역 조회

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된 후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이 종료된 후 관리계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적절히 정리하여 두어야 하고, 정기보고서에 첨부하여 후견감독인 또는 후견감독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거래내역은 은행에

86) 현재 금융기관들은 지점들을 감축하고 있는데 반해 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지점 혹은 후견인의 업무 편의를 배려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옮기는 일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87) 2023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39p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ATM기기를 통한 통장정리, 폰뱅킹을 통한 거래내역 팩스 수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압류방지통장

후견인의 채무가 많더라도, 공적부조금은 대부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장애인연금법 제19조, 기초연금법 제21조). 그런데 피후견인의 채권자들이 피후견인 명의의 금융계좌들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계좌로 공적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은 공적부조금이 입금되는 계좌(급여수급계좌)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9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공적부조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하여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 관련 사무

후견인 권한의 범위에 “보험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보험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험계약체결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후 피후견인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도록 합니다.

(5) 통신서비스 이용(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후견인 권한의 범위에 “통신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통신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도와줄 수는 있으니, 후견인이 적절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료가 미납되지 않게 자동이체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6) 상속 사무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등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관련한 사무는 공공후견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⁸⁸⁾ 따라서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원에 허가심판을 청구하여 대리권을 부여받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합니다.

(7) 기타 채권/채무 관리

피후견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채권/채무가 있더라도 후견인이 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이와 같은 채권·채무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은 먼저 피후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서입니다. 비교적 큰 돈이 이체되었거나, 입금된 경우,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입금되거나 이체되는 것이 그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관계인들을 통해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 계좌에서 금전이

88) 후견개시 전에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었거나 될 것을 예상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후견심판청구서에 그 이유를 작성하여 대리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체된 흔적이 있는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이 채권자인 경우, 후견이 개시되고, 피후견인이 자신의 채권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곤란하고,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후견인이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축소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피후견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이 이체되는 경우라면 일응 이를 이자로 간주하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계산한 원금을 반환하라고 채무자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실제 원금이 그것보다 적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먼저 반발하면서 원금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된 흔적만 있을 뿐이며, 차용증과 같은 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로만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후견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액을 파악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증액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소제기 여부 또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만 변제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이 채무자인 경우라면 채권자가 후견인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견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후견인이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액을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후견인의 계좌로 채권자가 입금한 내역이 없거나, 피후견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였거나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일단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채무 변제를 거절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채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거나, 피후견인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2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공미성년후견

제2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공미성년후견

제1장 미성년후견제도의 이해

1 미성년후견제도

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⁸⁹⁾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친권을 보충하고 친권에 준하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민법에서 그 기본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⁹⁰⁾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미성년후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즉, 미성년후견인과 친권자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의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거나(민법 제931조),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됩니다(민

89) 법원행정처, 「미성년후견 가이드 - 아이 품은」, 법원행정처(2021), 9면

90)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한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법 제932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관리·감독합니다(민법 제954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가사소송규칙 제69조의2, 38조의6).

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은 현행과 같은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인 1961년에 제정된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전신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와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미성년후견법에서도 후견인의 결격사유 판단 및 그 직무에 있어 명시적으로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시설미성년후견법 제5조 제1호, 제6조),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아 여건상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보아, 그 시설의 장 등이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소 간소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 등이 포함됩니다(시설미성년후견법 제2조). 위탁가정은 시설의 형태가 아니므로, 시설미성년후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에 의한 후견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제도와 달리 법원이 아닌,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시설미성년후견법에 의한 후견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⁹¹⁾ 따라서 민법상의 미성년후견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친권자 또는 기존 미성년후견인과 시설미성년후견법에 의한 후견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권자 또는 기존 미성

91)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139면

년후견인과 시설미성년후견법에 의한 후견인의 권한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알려진 판례 역시 없습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 지정(허가)의 절차는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함)하는 공립시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 시설인지 여부와 미성년자에게 생존 중인 부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민간시설일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생존 중인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지정(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기타 법률에 따른 미성년후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 달리 법원에서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입양특례법 제22조 제1항). 이 경우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입양특례법 제22조 제2항).

한편, 2025. 7. 19.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이 되며,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1항).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 그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2조 제1, 3항).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

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 각 경우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양립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견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인에 준하여 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2 친권과 미성년후견

미성년자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책무는 1차적으로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미치는 신분·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통칭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을 가지며,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11조).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만약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단독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 부모 중 일방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 5항).

민법상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일부 제한되거나, 일시정지 또는 상실되었거나,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등 친권자가 부재하게 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⁹²⁾ 이 때 친권자가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단독친권자가 사망 후 생존 중인 다른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참

92) 만약 부모가 생존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등의 신고가 있다하여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25조의3). 예를 들어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며(민법 제974조), 부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조),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해 양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으로의 친권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민법 909조의2 제2항 참조)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동이 출생신고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는 되었으나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 없음이 확인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친권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기아신고를 통해 출생등록에 이르렀거나, 부모를 알 수 없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통해 출생등록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재판실무상 민법 제928조의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여 친권자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친권의 상실 등에 대한 별도의 심판 없이도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예가 있습니다.⁹³⁾ 예를 들어 공동친권자인 부모가 함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부는 행방불명이고 모는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 등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거나, 일시정지 또는 상실되는 등 친권자가 부재하게 된 경우는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친권이 일부 제한 등이 되거나, 단독친권자의 친권이 일부 제한 등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일부 제한 등에 대하여 판단 받으려면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각 참조). 친권 남용 행위에는 친권 본래의 목적인 자녀의 복리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남용 및 의도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소극적인 남용이 모두 포함됩니다.⁹⁴⁾ 한편, 친권 남용 행위가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사퇴를 할 수 있으나(민법 제927조), 친권의 전면적인 사퇴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친권자의 친권이 일부 제한, 일시정지, 상실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9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327면

9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526면

(민법 제925조의3). 따라서 친권 상실 등이 된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고, 혈연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속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민법 제938조 제1항),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미성년자의 보호·교양 및 거소지정권에 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45조).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친권자의 친권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그 일시 정지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친권자의 친권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 중 양육권(보호·교양의 권리·의무 및 거소지정권 등)만을 특정하여 그 친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만 상실된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친권에 제한 등이 된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합니다(민법 제946조).

민법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912조 제1항),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미성년후견인 역시 후견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의 복리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의 원칙(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제도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추어 양육에 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미성년자를 위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합니다.⁹⁵⁾

95) 김현수 외,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13) 및 최현숙,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57호, 한국법학회(2015) 참조

3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의 부재로 인하여 보호 공백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하며, 미성년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성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부모와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의 대상이 되는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974조 참조). 미성년후견인은 1명의 사람(자연인)만이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에 의한 후견이나 법인에 의한 후견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930조).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그 ‘감독사건’을 개시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미성년후견인은 위 감독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 심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로는 매년 1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의 득실변경을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등 상속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시에 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심판문에 그 내용이 명시됩니다.

4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제940조의6).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후견감독 사건은 일률적으로 개시되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입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30조 제2항·제3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및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5조). 또한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등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만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법률행위 시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심판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제2장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

1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의 취지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⁹⁶⁾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원가정이 아닌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양육 및 보호되고 있는 미성년자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동’과 유사하게 양육되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⁹⁷⁾

2022년 기준 국가 및 지자체 보호대상아동 21,048명 중 친권자가 있는 아동이 17,577명, 친권자가 없는 아동이 3,471명인데, 친권자가 없는 아동 중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1,059명, 친권자가 있는 아동 중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불가능한데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1,490명이라고 합니다.⁹⁸⁾ 즉, 2022년 기준 2,549명의 국가 및 지자체 보호대상아동이 친권자 부재로 인한 보호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이래로,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보호대상아동, 그 중에서도 특히 친권자가 부재하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자체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그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96)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 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7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97) 제철웅 외, 아동중심의 공공후견사업 매뉴얼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후견신탁연구센터(2023), 88-91면 참조

98) 제철웅 외, 아동중심의 공공후견사업 매뉴얼 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후견신탁연구센터(2023), 13면 참조

아직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제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습니다.⁹⁹⁾ 그러나 민법에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의 심판을 받고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28조). 아동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또한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성년에 다다르지 못한 아동의 지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와 돌봄에 대한 아동 권리 실현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 국가와 함께 부모, 법적 후견인(legal guardian)을 들고 있으며 협약의 전문 및 개별 조항에서 법적 후견인을 아동의 보호자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제18조 제1, 2항, 제19조 제1항 등).

99) 현재 22대 국회에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의안번호 2203167, 2203223).

2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가.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수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아동권리보장원-사단법인 온울-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후견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공공후견인 추천·연계, 공공후견인 선임 지원 및 법률 자문, 후견인 선임 이후 활동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사업대상	후견대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상의 보호조치에 따른 지자체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아동
	공공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제937조에 따른 후견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후견아동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시 대상자 발굴 	
후견인 후보자 선발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공개 모집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양성교육 실시 	
후견심판청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견심판청구 대리 및 법률자문 등 제공(사단법인 온울) 	
후견인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견인 활동보고서 점검(아동권리보장원) 관할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 및 정기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부재하는 지자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국가의 양육 책임을 실현하고자 2023. 11.경부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도 지역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자(위탁부모 등)가 그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경우 공공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 등 양육자가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 욕구(채무, 상속 등) 또는 특수욕구(정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를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경우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나. 추진체계 및 업무추진 절차

(1) 추진체계

수행기관	수행업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등 총괄 조정 • 예산 지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추천 요청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대상아동 발굴·선정 • 후견심판청구 • 후견 감독
아동권리보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 사업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 시·도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 • 후견인 후보자 인력풀 관리 • 후견인 활동비 지원
사단법인 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심판청구 지원 • 후견 감독 지원 • 후견 관련 법률 자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

(2) 업무 추진 절차

시범사업의 시행 대상인 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 중인 보호대상아동 중 전문적인 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발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을 접수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인력풀에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합니다. 이후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결의를 통해 후견대상아동 및 공공후견인 후보자 1인을 최종 선정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전문가가 소송대리인이 되어 청구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건본인을 후견대상아동으로 하여,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공공후견인과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도록 함께 청구하여 추후 지자체에의 공공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을 통한 지원 필요가 있으나 법률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친권의 일부 제한 등 또는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 대리권의 사퇴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피후견인으로 하여 공공후견인 및 공공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공공후견인은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활동하며 아동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공공후견인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역할은 요구되지 않으며, 공공후견인은 아동, 아동의 대리양육자 및 아동을 둘러싼 기존의 전달체계 내의 각 행위자들과 소통하며 아동의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한 공공후견인은 매달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활동보고서 제출 및 법원에 대한 재산목록보고서(심판 확정 후 2개월 내), 후견사무보고서(매 1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후견감독 업무의 담당자를 정하여,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공공후견감독인도 법원이 정한 주기로 법원에 대하여 후견감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장 공공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절차의 이해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준비하기

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존부 확인하기

(1)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아동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8조). 아동에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기록된 내용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친권자가 없는 경우 → 곧바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가능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란에 부와 모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경우(통상 아동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이 없기 때문에 ‘가족사항’ 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적힘), 부모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있으나, 기본증명서(상세)에 생존하고 있는 부와 모의 각 친권에 대하여 일부 제한, 일시 정지, 상실 등이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각 경우 별도의 친권에 대한 심판 없이 곧바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 후 생존 중인 다른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참조), 일반 입양 후 입양의 취소나 파양, 양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인해 양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으로의 친권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민법 909조의2 제2항 참조), 친양자 입양 후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해

양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으로의 친권자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민법 909조의2 제2항 참조)도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각 경우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망 등의 사실을 청구권자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내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의 의견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칩니다.¹⁰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출생미신고 상태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였다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부 또는 모가 아동과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법률상으로는 친권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선행되어야 친권 및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친권자가 있는 경우 → 친권의 일시 정지·상실 등 심판을 받은 뒤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가능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란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있고, 기본증명서에 친권에 관하여 별도로 기록된 사항이 없으면 생존하는 부와 모가 (공동)친권자입니다. 만약 기본증명서에 생존하는 부와 모 중 1명이 친권자로 지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동의 단독친권자입니다. 이처럼 친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아동과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그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없고, 친권자의 친권을 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을 선고하는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¹⁰¹⁾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의 청구부터 지원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의 사유는 친권자의 친권 남용 또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

100)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334면

101) 만약 친권에 대한 일시 정지·상실 등의 심판 청구 후에도 친권자가 적극적인 친권 남용 행위를 통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계속하여 발생시키고 있다면,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전처분으로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별도의 결정을 받아 친권에 관한 심판을 받는 절차의 진행 중에도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단, 친권상실의 신고는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함)입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924조의2, 925조, 925조의2).

다만 재판실무상 예외적으로 민법 제928조의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여 친권자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친권의 상실 등에 대한 별도의 심판 없이도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예가 있습니다.¹⁰²⁾ 예를 들어 공동친권자인 부모가 함께 행방불명이 된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부는 행방불명이고 모는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 등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4)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 미성년후견인의 변경 또는 사임 심판의 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아동에게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미성년후견인의 사임 후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변경 및 사임에 관하여는 상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나. 공공후견인 후보자 연계

후견인 결격사유(민법 제937조)가 없으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피후견인이 될 보호대상아동이 거주 중인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사람 2인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추천하면, 지자체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그 중 1인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 청구시 선정된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10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327면

2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하기

가. 필요서류 준비하기

청구인은 기초 지자체의 장이며, 필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위 기초 지자체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준비합니다. 단, 후견인 후보자에 관련된 자료들은 후견인 후보자가 준비하여 전달합니다.

서류 명칭		
1	기초자료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2		아동의 부 및 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 만약 사망한 경우라면 각 폐쇄 또는 말소
3	아동의 보호 상황 관련 자료	사전현황설명서[서식 5.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전현황설명서]
4		아동카드
5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또는 시설 입소사실확인서
6		기타 확보가능한 서류{심리상담 소견서,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 관계인 진술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등}
7	아동의 재산관련 자료	재산목록[서식 20. 재산목록보고서]
8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9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 후견인 후보자 외의 가족 등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비공개 처리
10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1		후견인 후보자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2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13	(확보가능한 경우) 생존하는 부 및 모의 각 진술서 내지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4	아동의 부 및 모가 친권의 일시 정지·상실 등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심판문	
15	만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후견인 선임에 대한 아동의 자필 의견서(지문날인 및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사본 첨부)	

기초자료 중 아동 및 아동의 부모에 대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청구서에 아동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우선 기입하여 청구를 한 이후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 상황 관련 자료 중 사전현황설명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현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동카드 외의 추가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여 법원이 위 자료들로 아동의 현재 보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재산 관련 자료는 중 재산 목록은 청구 당시 아동 명의로 된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있는 그대로 기재합니다. 아동 앞으로 지급되는 수급비나 후원금 등이 아동 명의 계좌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아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위탁부 또는 위탁모 앞으로 지급되므로, 아동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된 수급비, 후원금 등은 통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므로, '수입 및 지출 내역'의 '지출' 항목에 그 명목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각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청구서 작성하기

목차	내용
기본정보	심판청구명,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각 인적사항
청구취지	(아래 내용 포함되도록 형식에 맞게 기재) -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후견인 후보자를 선임
청구원인	각 당사자에 대한 설명
	아동이 현재와 같은 보호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미성년후견인 선임 필요성(친권자 부재)
	미성년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및 후견계획

단, 보호대상아동에게 생존 중인 친권자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일시정지, 상실 등의 심판을 받은 뒤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서식 3.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 참조).

3 사전처분의 활용

가.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1)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친권 일시 정지 등의 청구권이 있는 친족의 협조를 구할 수 없고,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청구가 어려워 아동의 이름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소송행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소송상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을 먼저 받은 후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으로 친권 일시 정지 청구를 제기하여도 되지만, 실무상 우선 아동의 이름으로 친권 일시 정지 청구를 단독으로 제기한 뒤, 그 친권 일시 정지 청구 사건의 사전처분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 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의 임무대행자 선임

친권자의 친권 남용 행위가 심판 진행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등 친권 일시 정지 등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아동을 위해 법정대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임시후견인 선임

스쿨뱅킹 통장의 개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의 청구 등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급박하게 아동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의 흐름

가. 보정명령

후견심판청구서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가사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모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서 미비한 서류들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정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상보다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시, 아동과 아동의 부 및 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고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서에 기재하였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우선 아동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아동의 부 및 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보정명령을 받으면 아동의 부 및 모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후견인 후보자는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후견인 결격사유 중에서도 범죄경력 및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여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에 관하여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후견인 후보자가 금융기관의 신용거래불량자인지 여부 및 신용불량의 정도에 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사건본인 및 관계인 의사 확인

아동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18조의2 본문, 65조 4항 본문). 다만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18조의2 단서, 65조 4항 단서). 만약 아동복지법에 의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였다면, 연령에 무관하게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3항).

법원은 아동이 만 13세 미만이라 하여도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 및 의사 결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아동의 의견을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에 아동의 인감 내지 서명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내지 본인서명확인사실서를 첨부하거나, 지문을 날인하고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의견서만으로 아동의 의사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기일에 출석하도록 하여 묻거나, 가사조사를 통해서 그 의사를 심층적으로 파악합니다.

아동 외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견도 주요하게 청취합니다. 특히 이혼 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있어서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이혼 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되는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제출요청서'를 보내어 청구취지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등 그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아동의 양육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친족, 사실상의 보호자 등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 후보자의 의견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라. 가사조사

법원은 사망한 친권자의 친족과 생존한 부 또는 모 사이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복수의 친족이 서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친권상실 등의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소하거나 고령인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사실상 유일한 친족인 경우, 미성년자에게 상속재산이 많아 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추천된 후견인 후보자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가사조사를 적극 활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현재 보호상황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가사조사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현황설명서 및 재산목록의 구체적인 작성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충분히 하면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 명령에 따라 아동의 현재 생활 및 양육상태, 재산내역 및 관리현황,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여부 및 향후 후견계획,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11조). 가사조사 시 아동, 아동의 현재 양육자, 후견인 후보자는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하는 경향을 보이며(법원 소환조사 또는 출장조사), 아동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아동보호전담요원 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도 대면 내지 유선상으로 인터뷰합니다(법원 소환조사, 출장조사 또는 전화 조사). 출장조사의 경우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조사기간은 가사조사 명령 시 별도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심판 청구인이 가사조사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제외한 조사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2항 참조).

마. 심문 및 심판

친권의 일시 정지 등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심문기일을 잡고 심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심문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문 시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자와 보호자, 과거 및 현재의 양육환경,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도, 장래희망 및 진로, 상속재산 등 재산상황과 생활비 조달 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능력 및 후견계획,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의 교류 여부 및 양육비 지급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 등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아동 및 친권자, 청구인의 의사 및 친권 일시 정지 등 심판을 선고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문합니다.

가정법원이 친권 일시 정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및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참조). 따라서 예를 들어 친권 상실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의 심리 결과 상실을 선고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친권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없거나 미성년후견인 선임만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미성년후견인과 함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932조 제2항, 제940조의3 제1항).

바. 불복방법

친권 일시 정지 등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친권자,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3조, 민법 제925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1호).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친권의 일시 정지 등 심판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위 기간 내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며, 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제4장 공공미성년후견 업무의 이해

1 후견활동 개요

가. 후견인의 업무 범위 속지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피후견인인 아동의 법정대리권한을 비롯한 후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또한 심판문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민법 제928조, 제946조), 피후견인인 보호대상아동에게 생존 중인 부모가 있는 경우라면 그의 친권이 어떻게 제한 등이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하 3.의 가.항 참조).

만약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었거나, 기간을 정하여 일시 정지된 경우라면 미성년후견인은 심판문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친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모두 가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의 친권이 거소지정권에만 한정되어 일부 제한된 경우라면, 미성년후견인은 거소지정권에 포함되는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므로 보호대상아동이 머물 곳을 변경하는 보호조치(변경)에 대한 동의는 가능하지만 재산관리권한이 없어 아동 명의로 된 통장 개설이나 예금 인출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 등 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양육과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공공미성년후견인은 아동과 같이 거주하지 않으며, 아동을 직접적으로 양육하거나 보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미성년후견인에게 아동의 건강 상태나 위생 상태, 학교 출결 등 아동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관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공

미성년후견인 역시 숙지하고 후견 사무에 임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공공미성년후견인이 지자체인 공공미성년후견감독인과 함께 선임되는 경우의 심판문의 주문은 통상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법률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더라도, 심판문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와 더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래 주문 중 3.항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에 대하여는 아래 제4장의 3.항 참조).

[예시] 공공미성년후견인 및 공공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심판문의 주문

주 문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나공공[*****-*****, 서울시 **구 **로123, 1동 2호(◇◇동, ♡♡아파트)]을 선임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시[대표자: □□시장, **시 **구 **로12, 2동 3호(♣♣동, □□시청)]를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이 심판 확정일, 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 9. 30.을 시작으로 매년 9월 말일에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8.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미성년후견감독인은 20**. 10. 31.을 시작으로 매년 10월 말일에 미성년후견인의 후견감독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9.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미성년후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민법 제945조, 제950조에 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민법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상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끝.

나. 아동(피후견인) 및 관계인과의 관계 형성

공공미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피후견인인 아동 및 아동의 주양육자와 아무런 라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견 사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인 아동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쌓으려 하기 보다는, 주양육자와 먼저 관계를 맺고, 주양육자와 아동을 함께 만나며 점진적으로 관계를 형성한 뒤, 아동이 원하는 등 적절한 때가 되면 아동과 따로 만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매주 1회 혹은 그 이상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월 1회 정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과 관련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아동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 월 1회 만남 이외에도 미성년후견인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양육자 또는 아동과 유선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일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초기 후견사무

(1)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및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은 확정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심판이 확정된 날이 곧 미성년후견인의 취임일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제1항). 다만,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인 아동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초 지자체장에게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고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후 법원에서 촉탁서를 발송하면, 어느 지자체로 발송하였으며 언제 촉탁서가 도달하였는지를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의 사건 번호 및 아동의 성명을 입력하여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촉탁 받은 지자체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하여, 촉탁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진행 경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상 촉탁이 이루어진 뒤 2주 이내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심판에 의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함께 선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촉탁되며, 친권자의 친권이 일시 정지 등의 경우에도 촉탁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이루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1의2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면,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미성년후견인 업무 시 자신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합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등기’되는 것과 달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증명서(상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과 그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등에서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2호, 제9호). 참고로 미성년후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제11호).

(2)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기록 확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후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후견인이 아동의 상황과 후견개시 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전문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므로, 위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사건 번호 확인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기본후견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고, 미성년후견인에게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은 모든 후견 유형에 공통적으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후견과 어울리지 않는 안내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법원의 후견감독 진행상황과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제출한 서류, 심문기일, 후견감독조사시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법원에 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모두 후견감독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후견감독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미성년후견인은 선임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인 아동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의 주문에 재산목록의 제출기한과 작

성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면 됩니다. 공공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지자체가 공공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함께 선임되어, 재산조사 및 목록 작성 시 후견감독인이 참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제2항). 따라서 공공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보고서를 공공미성년후견감독인인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덧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아동과의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그 미성년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942조 제1항). 만약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2조 제2항).

미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와 다르게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후견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피후견인의 재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의3). 따라서 직접 발로 뛰어서 아동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심판 청구 시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파악 가능한 재산부터 일단 조회해야 하며, 필요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동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기입한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보고서는 이후 피후견인인 아동의 재산변동 판단의 기준이 되고, 1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며, 피후견인과 후견인 재산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재산목록보고서는 크게 피후견인·후견인·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생활형태, 재산목록, 수입·지출내역 및 후견인의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재산목록보고서(미성년후견)”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후 법원에 우편 등기로 발송하거나 PDF 파일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보호대상아동의 공공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매월 양식에 따라 작성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및 공공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미성년후견인은 통상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 뒤부터 심판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기준일 및 제출일은 심판문 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고, 신상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아동의 신상에 관하여 변동 사항 및 특이사항 위주로 작성합니다.

후견사무보고서는 크게 피후견인·후견인·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 신상보호내역, 재산목록, 수입·지출내역, 향후 계획 및 후견인의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후견사무보고서(미성년후견)”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후 법원에 우편 등기로 발송하거나 PDF 파일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미성년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의 종료 사유〉

1. 미성년후견인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별도의 종료심판 없이 종료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만 19세로 성년이 된 경우(민법 제4조)
 -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성년으로 의제 되는 경우(민법 826조의2)
 - 미성년자가 사망하는 경우
2. 법원의 친권에 대한 회복 선고, 친권자 지정 심판에 따라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종료되는 경우
 - 친권자의 상실 또는 제한된 친권 등에 대한 실권 회복 선고가 있는 경우(민법 제926조)
 - 친권자가 사퇴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회복되는 경우(민법 제927조 제2항)
 -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종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사유로 한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민법 제927조의2 제2항 제3호)
3. 친권자에 대한 친권 일시정지의 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종료되는 경우
 - 친권 일시 정지 심판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민법 제924조)¹⁰³⁾
4. 미성년후견 종료 심판에 의해 종료되고 친권자가 지정되는 경우
 - 피후견인에게 친권이 제한·상실 등이 되었으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민법 제909조의2 제6항, 제931조 제2항).¹⁰⁴⁾

미성년후견이 종료되면, 미성년후견인은 1개월 이내에 그 종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만 19세로 성년이 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료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3조 제1항).

103) 친권 일시 정지의 기간은 최초 심판 시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아동, 미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가장 4년까지만 가능함(민법 제924조 제2항, 제3항). 다만 4년이 지난 후에도 친권 일시 정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할 경우, 민법 제924조 제1하에 따라 청구권자가 새로이 친권의 일시 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541면 참조).

10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 가사 II」, 박영사(2021), 1352면

2 주요 후견 사무

가. 신상보호영역

(1) 주소 및 거소의 결정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위탁가정의 이사 등을 통해 아동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내지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동의 내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아동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동의 내지 결정을 할 때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외의 시설이나 위탁부모, 지자체 등의 필요나 사정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피후견인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및 사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모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및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등이 포함되며, 만약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절차도 이에 포함됩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매년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아동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각종 후원금 지원 사업 등을 의미하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동에게 연계하도록 합니다.

(3) 의료서비스 이용

외래 일반 진료 시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동 시술 내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 등을 지참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이 정신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받을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아동의 보호의무자가 되므로(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동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이 필요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법을 준수하여 입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아동을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현저한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하고, 그 때에도 반드시 사전에 후견감독인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원기간은 최소한으로만 유지되어야 하고, 후견인은 아동이 더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퇴원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공법상 신청행위

아동 명의의 공법상 신청행위 시 예를 들어 여권 발급 및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여권법 제9조 제4항, 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 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5) 담임 교사 면담 및 진로 탐색 지원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 담임교사와 면담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교우관계나 학교 생활 등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아동이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정하여야 하는 시기라면, 아동 및 주양육자와 상의하고,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적절한 학교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기타 주변인과 관계 맺기

학교 선생님 이외에도, 아동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 학원 선생님, 아동의 친구들 등과

도 안면을 트고 지내면 주양육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아동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아동의 주변인과의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재산관리영역

(1) 금융업무

아동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생활비조로 돈을 지급하거나, 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은행 방문 시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지참하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은 이용이 불가하므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거나, 폰뱅킹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아동 명의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아동 앞으로 지급되는 공적부조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으므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을 추천합니다.

(2) 통신서비스 이용

아동 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요금제 변경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되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동의 및 대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게 필요가 있는 경우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생활비 등 지출내역 관리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비 등 지출에 대한 관리 방법은 아동의 주양육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주양육자가 하고 있는 기존 방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도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보름 내지 한 달 간격으로 아동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주양육자로부터 증빙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관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주양육자가 여러 아동의 재산을 모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지출 증빙이 곤란하므로, 후견인은 평균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일상생활비조로 얼마간을 주양육자에게 지급하되, 그에 대해서는 증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사전에 후견감독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아동이 용돈을 어디에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출증빙은 불필요하고, 용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아동의 필요에 따라 헬스장 이용료나 학원 수강료 등 비정기적인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권한초과행위 허가

통상 미성년인 선임 심판 시,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아동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 또는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통해 아동의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대리권이 있는 미성년후견인이라 하여도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심판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도 심판문에 미성년후견인만 선임되는 경우처럼 피후견인인 아동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한정 승인 또는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명의의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채무상속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이며, 후견감독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에 의할 경우, 관련 법원 절차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전문가가 지원하므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전문가에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초기 상담을 받은 뒤 소송위임장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전달하면 일체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별첨

서식

3. 특정후견인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1) 후견의 목표

사건본인은 위 고충신고 발생 후 1년 넘게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사와의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이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계로 사건본인은 위 고충신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하고 있는 병원의 병변비를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위 고충신고 패싸구제를 위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 사건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본인의 재산관리를 통해 병변비를 지급하고 사건본인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사건본인이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견의 목표입니다.

2) 후원할 사무의 범위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보험금지급을 위한 사무,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③ 통장개설 및 관리 사무의 후원, ④ 의료서비스 사무 후원이 필요합니다.

3) 대리권의 범위

가. 보험회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 수행을 선택할 권한의 행사
법무법인 00에서는 사건본인을 위한 후견인이 없어서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무법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어떤 것이 사건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사건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관리 및 차변(채지) 포함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이 영외로 돌아오는 보험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일부는 사건본인을 위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될 수 있게 처리하는 사무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후견인에게 사건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 관리 및 차변(채지) 포함에 관한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청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라. 의료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건 본인의 개인 정보제공 신청권
사건본인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는 치료나 무엇인가를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의료정보를 열람 및 중개서 신청을 위한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마. 통대로 의료기관과 사건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상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위한 통장개설 등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사건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리권도 필요합니다.

바. 공법상의 신청행위
위에서 언급한 각종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법상의 신청 등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리권을 후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 소결론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특정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은 장기 및 부분적인 쓰기가 가능합니다. 사건본인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수 개념이 있고, 작성에서 일한 기간을 말할 수 있는 날짜의 개념이 있으며, 집 위치를 기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타인이 지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소양지표 2, 사회조사회고서 사건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다. 의사소통능력

사건본인은 기호표기수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소리 내어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문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고 타인과 글을 써서 소통하면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위 고충신고로 인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 많고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소양지표 2, 사회조사회고서 사건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라. 사무처리능력

사건본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 재산을 관리하는 일, 자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 하는 일, 자신에게 맞는 의료기관 또는 요양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을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3) 사무후원의 필요성

가. 사무후원 필요성의 원인 및 위험성

사건본인은 위 고충신고로 인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현재 자신의 병변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소송을 수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병변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개인 및 요양시설이용계약 등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본인을 방치할 경우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사무 후원이 필요한 주요 부분: 보험금지급 소송과 관련된 사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소송 또는 합의를 위한 사무처리를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00이 사건본인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건본인을 위한 합의를 할에 있어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위한 사무처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의료비지급, 요양비지급 사무
후견인이 신청되어 위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사건본인을 위한 의료비지급, 요양비지급을 위해 가지급 중단상태가 끝나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적절한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사무 등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라. 통장개설 및 관리 사무
사건본인을 위해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손해배상을 받은 후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사무를 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기타 공법상의 신청과 관련된 사무
사건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사무를 포함하여 공법상의 신청행위를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 사건본인의 의료서비스 관련된 사무

사건본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사무와 관련된 일도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질병 관련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이 사건본인의 최선의 이익인지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인의 기간	2년	
	보통당지급소속 또는 임의를 위한 사무의 후원	
특정후견인사무	재산관리 사무	
	통장개설 및 관리 사무의 후원	
	의료서비스사무 후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특정후견의 대리권의 범위	보통당지급소속 또는 보원회사의 합의 간에 선택 할 권한의 대리권	
	사건본인 명의의 통장개설 관리 및 처분(해지)를 포 함에 대한 대리권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이용계약 및 신청행위	
	기타 공판상의 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	

4) 사건본인은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위와 같은 사무에 대하여 후원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 특정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사항

성명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사민공공후견인)

2)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등

후견인 후보자는 ○○○년부터 현재까지 ○○월에서 ○○월을 해임하고 현재 ○○시 지 부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시 ○○○ 센터장, ○○○선 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소명자료 3. 후견인 후보자의 이 력서 참조). 향후 후견인사무를 수행하더라도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소명자료 3. 후견인 직무인수영향서 참조).

3) 후견인성격요건 충족

후견인 후보자는 ○○○월회 소속 ○○월회에서 시행하는 후견인양성교육프로그램을 2013. 11. 16. 이 후하였습니(소명자료 3.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인성격요건 수료증 참조).

4)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937 조항의 결과유나 사건본인과의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후견인의 사 무수행에 제한하지 않는 범죄(성범죄, 배임·횡령 등 재산권 침해 범죄, 사해, 폭행, 유기, 학대, 강권, 협박, 명예훼손, 신용침해, 비밀누설 등)와 관련된 전과가 없습니다(소명자료 3.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 회 회보서 참조).

5) 사건본인은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이 되어 자신을 도와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6) 사건본인은 후견인에 대한 보수나 사무비용을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후견인후보자로 추천 된 ○○○은 보수 없이 사건본인을 위해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소명자료 3. 후견 인 직무인수영향서 참조).

5.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1)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 사항 :

주소 :

2)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 특정후견인 후보자 ○○○은 보수를 받지 않고 지원봉사의 차원에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인 ○○○은 지원봉사로 수행하는 그의 활동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드물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후견인 후보자인 ○○○이 후견인 으로 직할하지 않게 사무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실을 즉시 가장변위에 알려 후견인을 변경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그것입니다. 아직 후견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후견에 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 이런 역할을 맡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 법적인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인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시는 민법 937 조항의 결과유나 사건본인과의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4) ○○○시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면 후견인이 그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건 본인의 자 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건본인을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계획을 세워 잘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봉사로 활동할 후견인이 후견사무수행에 소모될 상급비를 지원하면서, 장기보고서를 받는 등 피후견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후견인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소명자료 2. 사회조사보고서 8 총괄보고서 후견인감독인사항 참조). 위와 같은 사항을 충실히 사건본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대리권의 행사(허가)에 적합한 특정 후견인으로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청구금지 기제 사무에 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을 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사무의 후원 및 대리권을 부여하 며, ○○○시를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소 명 자 료

1. 시간본인에 관한 서류(기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지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진단서, 소송위임장)
2. 시간본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시간본인의 일반현황, 시간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시간본인의 희망, 적성과정 진술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정보, 총괄보고서)
3.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계획서, 이력서, 후견인 직무 인수인행서, 범죄경력조회 회답서, 후견등기신청부조제증명서, 후견인임성표의 수문증)
4. 후견인등인 후보자의 후견인토끼회서

1. 위 각 소명자료

2. 사전현황설명서

3. 재산목록

4. 심판대리하기신청서

5. 인제(5,000원)

6. 송달료납부 증명

2000. . . .

청구인 00도 00시청 000 (원)

00가정법원 개중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감독지원사업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심 판 청 구

청 구 인 경기도 00시강 000
주소 경기도 00시 00읍 00로 000

사건본인 박00
주소 경기도 00시
등록기준지 경기도

특정후견개시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별지 기재 사부의 후원을 위한 특정후견을 개시한다.
 2. 제1항의 특정 사무를 후원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00협회[대표자 : 이사 000, 법 인등록번호 : 1100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층]를 사건본인에 대한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특정후견인 사단법인 한국00협회에게 별지 기재 대리권을 부여한다.
 4. 특정후견감독인으로 경기도 00시[대표자 사장 000, 주소 : 경기도 00시 00읍 00로 000]를 선임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감독지원사업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의 지위와 사건본인의 후견심판청구 등의 후견개시사실 부존재

가. 청구인은 민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갑 제1호증의3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참조).

나. 사건본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의1 - 사건본인 동의서, 갑 제5호증의2 - 본인 의함 확인서 각 참조).

다.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후견이 개시된 바가 없습니다(갑 제1호증의5 - 사건본인 후견증거서류부존재 증명서 참조).

2. 공공후견심판청구 및 특정후견을 청구하는 경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와 청구인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수행하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사건본인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은 한정후견 청구로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도 비준 및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10. 우리 정부에게 한 “의사결정대행제도인 성년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따라 후견유형 중 가장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를 잘 제한하는 유형인 특정후견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갑 제9호증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 의견 중 성년후견 부분 별채 원본 및 번역본 참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주요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서지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까지 심판 청구서

반고,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일상동안 지속되며, 동거권이 유보된 범위에서 한하여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한정후견 유형으로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종로가 상당히 어려운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만 하는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비법조인이라고 해서 발생하지도 않은 법률문제를 우려하며 평생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정해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평생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평생 지속되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실무로 자리잡히게 되면, 사회 일반이 정신질환자들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라고 “낙인”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은 요원해질 것이고,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자체가 묻혀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인 공공후견사업에서 한정후견 유형을 사용함으로써, “복지”와 “보호”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앞장서서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만큼은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성과 현술한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권규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한정후견이 아닌 특정후견 유형을 활용하고자 하오니, 귀원케도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배려했다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사건본인의 상태 일반

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사건본인은 부 박00, 모 이00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1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갑

[서지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까지 심판 청구서

제1호증의2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그러나 사건본인이나 부모의 제척 등분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의 형제나 사촌이내 친족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시면 추가적으로 추정 친순위 상속인 등을 확인하여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건본인의 건강 상태

사건본인은 2002. 6. 27. 심한 정신장애 및 심한 청각(청력)장애로 등록된 자이고(갑 제2호증의1 - 사건본인 장애인증명서 참조), 2024. 1. 29. 경기 00시 소제 00정신과의원 의사 제000로부터 기타 조현병으로 2008. 1. 18.부터 본원에서 동원 치료 중인 자로, 자기관리와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 저하 등의 음성증상을 주로 보이는 상태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갑 제2호증의2 - 사건본인 진단서 참조). 사건본인은 이와 관련된 약물을 투약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3 - 의부기록지, 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10면 각 참조).

그 밖에도 사건본인은 당뇨가 있고, 청각장애가 심해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왼쪽 눈이 실명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으로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결절 3개가 발견되었고, 폐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8면 참조).

다. 사건본인의 일상생활 및 재산내역

사건본인은 경기도 00시 소제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한 이래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40명이 거주하는 시설이고, 사건본인은 4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 점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서랍을 보유하고 있고, 24시간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7면 참조).

사건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급여를 수급하고 있고,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 월 323,18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본인은 종래 장애인연금도 수급하고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있었으나, 사건본인이 고령으로 기초연금 수입이 가능해져서, 중복수급이 불가해
기초연금만 수급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1 - 수급자증명서, 갑 제3호증의2 - 장애인
인원수 수급 대상자 확인서, 갑 제4호증 - 사회조사보고서 5면 각 참조).

2024.5.13. 기준 사건본인의 계좌에는 보통예금 약 7,500,000원, 정기예금 26,414,204원
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5면 참조).

사건본인은 종연, 개별간식, 복식 비용 외에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거의 없고,
종종 의류 구매,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출이 거의 없는데 오랜기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누적되면서 2,600여만 원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입니다.

사건본인은 오랜기간 저의 내에서 생활하면서 인근 상권이나 산책로 등을 도보로 이
동하며 이용할 수 있고, 혼자 외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먼
곳으로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시설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7면 참조).

라. 사건본인의 일상생활능력, 인지기능

사건본인은 정신질환, 장각장애로 인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수화를 사
용하지도 못하여 간단한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순한 성격
으로 서전 내 다른 이용인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눈치가 빨라 의사
소통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만, 장각장애로 전화기 사
용 등이 어렵기 때문에 외출시 주머니에 담당자와 기관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지
참하고 있고, "이코"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담당자가 사건본인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길을 잃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름 길은 없는 경우는 있으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폭력적인 행동, 부적절한 행동 등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갑 제4호증 - 사
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8면, 10면 참조).

사건본인은 식사준비, 교통수단 이용, 정보기는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나, 그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밖의 다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들은 대부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
이 조금만 도와주면 부러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
보고서 9면 참조).

사건본인은 문맹으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손짓으로 10이하의 숫자 정도는 이해
하나 그 이상의 수 개념이 없으며, 날짜나 위치에 대한 지남력은 많이 낮은 편이고,
타인이 지시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은 부족
한 편입니다(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10면 참조).

4. 사무후원의 필요성과 후원할 사무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가. 서언

사건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자신이 수행하는 기초연금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자신
의 병원진료, 신상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후
견인의 지원 아래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의 지
원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어려울 때는 후견인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가능하면 사회
로 복귀하여 자립하는 것까지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나. 후원할 사무의 범위

(1) 일상생활비 관리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자신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필요
한 곳에 사용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즉각된
기초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소극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된다면,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현호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곳
에 적절히 즉각된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사무 후원

[서지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까지 심판 청구서

사건본인이 필요한 사회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인이 사건본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설명해 줄으로써 사건본인 스스로 그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주거지 결정, 이전 등에 대한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현재 만 68세의 고령자입니다. 추후 그에 맞게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사건본인의 희망에 따라 더 양호한 시설 또는 가능하다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후원인이 사건본인을 도와 그가 원하는 곳을 주거지로 결정하고, 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료행위에 사건본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후원인이 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건본인의 조현병이 단기적으로 악화되어 긴급히 정신병원 등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더라도, 후원인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최대한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자의입원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사건본인이 자의입원을 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데 인해 자해나 타해위험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절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후원인에게 부여할 대리권의 범위

- (1) 예금계좌 개설·해지·계좌이체·출금·미입금번호 변경·통장 재발행·인감등록·인감변경·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거대내역 등 포함), 체크카드·현금카드, 직불카드 기능에 있는 것 포함) 발급·연장·해지·재발행·미입금번호 변경 등 예금관리와 이를 위한 부수행위에 관한 대리권

[서지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까지 심판 청구서

사건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예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후원인이 사건본인 명의의 예금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와 같은 매체를 추가로 발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진료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병원비를 납부하는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는 진료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에 부수하는 진료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행위는 후원인이 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인이 보충적으로 사건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한 것에 부수하는 법률행위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것이야 말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의사결정지원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 요양시설 입소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이 노인요양시설 또는 다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스스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고,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후원인이 최대한 그를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건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을 결정하더라도, 그에 수반하는 입소계약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사건본인이 이해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소계약 등 법률행위를 후원인이 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술한 진료계약에 대한 대리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만약 사건본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준비가 되어 사회로 복귀한다면, 후원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와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귀원에 대리할 수 있는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진도제야 제견에 관한 대리권
	요양시설 입소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
	공법상의 신청행위(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제반사항의 발급, 입양등록, 인감증명 관련 서류 발급의 신청 등의 대리권

5. 특정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사항

- (1) 성명 : 사단법인 한국00협회
-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층
- (3) 법인등록번호 : 110000-0000000
- (4) 대표자 : 이사 000
- (5) 사건본인과의 관계 : 공동후견법인

나.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및 후견계획

후견인 후보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협회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차별대항행태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공동주최 해왔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술평가인증 및 보수교육 지원개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 해왔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위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본인에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 (4) 공법상의 신청행위(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제반사항의 발급, 인감등록, 인감증명 관련 서류 발급의 신청 등)의 대리권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발급신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건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급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리권을 후견인에게 수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후원할 사무와 대리권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정후견의 기간	3년
특정후견사무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후원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사무 후원
	주거지 결정, 이권 등에 대한 사무 후원
특정후견의 대리권의 범위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무 후원
	여유제과 개발·해지·계약이해·출금·비밀번호 변경·통장 해탈행·인감등록·인감변경·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거래내역 등 포함), 체크카드(현금카드,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것 포함) 발급·연장·해지·계좌해·비밀번호 변경 등 예금권리와 이를 위한 부수행위에 관한 대리권

[서식 25] 정신질환자 공공후견감독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 (1) 상명 : 경기도 00시
- (2) 주소 : 경기도 00시 00읍 00로 000
- (3) 대표자 : 시장 000
- (4)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7. 정신감정 생략 또는 진료기록부 감정 요청

사건본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모두 증거로 제출하고, 이 문서들은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추가로 정신감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사,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사건본인의 진료기록부만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8. 추정상속인 의견조치를 위한 보장명령 요청

사건본인에게서는 무 박00, 모 이00가 있습니다. 추정권대 그 밖의 형제나 사촌이내 친족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과 이들 사이에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이들이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에 단 한 차례도 찾아온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건본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장명령을 발하여 주시면 추가적으로 추정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본인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인 후보자가 필요한 사부를 후원하고,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는데,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6] 정신질환자 공공후견감독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대하여도 정기적 건강상태 및 육구확인, 시설관리상황 검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공공후견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후견인 후보자 임원현황은 30명이며(실무진: 정신건강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6명, 임원진: 정신건강간호사 6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0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7명), 모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 내부적인 신규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정기적으로 사건본인을 방문하여 신상에 대한 면화를 확인하고, 상담과 관찰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의 직원 역시 사건본인을 모토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협조하여 사건본인이 서신 내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 기타 후견인 결격 사유 부존재

후견인 후보자는 연법 937 소정의 결격사유나 사건본인과의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6.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으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그를 도울 적절한 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선임절차부터 후견인 선임, 후속 절차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감독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려고 합니다.

나.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사항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소 명 자 료

1. 갑 제1호증의1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1. 갑 제1호증의2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1호증의3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갑 제1호증의4 - 사건본인 주민등록초본
1. 갑 제1호증의5 -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 갑 제2호증의1 - 사건본인 장애인증명서
1. 갑 제2호증의2 - 사건본인 진단서
1. 갑 제2호증의3 - 의부기록지
1. 갑 제3호증의1 - 수급자격증서
1. 갑 제3호증의2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서
1. 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사회조사보고서
1. 갑 제5호증의1 - 사건본인 동의서
1. 갑 제5호증의2 - 본인 의향 확인서
1. 갑 제6호증 - 사건본인 통장 사본
1. 갑 제7호증의1 - 후견인후보자 직무수행의향서
1. 갑 제7호증의2 - 후견인후보자 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7호증의3 - 후견인후보자 고유번호증
1. 갑 제7호증의4 - 후견인후보자 인감증명서

[서식 2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특정후견제시 신청 청구서

1. 갑 제7호증의5 - 후견계획서
1. 갑 제7호증의6 - 소제기 부존재 확인서
1. 갑 제8호증 - 후견감독계획서
1. 갑 제9호증 -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의견 중
성년후견 부분 발췌 원본 및 번역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부
1. 사전현황진행서 1부
1. 소송위임장

2024. 5. .

정구인 경기도 00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가정법원 귀중

[서식 3호]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p>청구인 사진본인</p> <p>미성년후견인 선임</p>		<p>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p>	
<p>청구 취지</p>		<p>청구 취지</p>	
<p>1. 사진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를 선임한다.</p> <p>2. 사진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도 **시[대표자 **시장 읍읍수, 주소: ◇◇도 **시 **로 123]를 선임한다.</p> <p>라는 심판을 구합니다.</p>		<p>청구인은 ◇◇도 **시장입니다. 사진본인은 현재 **시에서 가정위탁보호되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p> <p>사진본인은 만 6세 남자로,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사진본인의 친권자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p>	
<p>1. 당사자</p>		<p>2.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경위</p>	
<p>가. 관련 규정</p>		<p>가. 관련 규정</p>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복지부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존재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의 양육 책임을 실현하고자 2023. 11. 정부포 호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견 하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공공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친권의 부재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건전한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 사진본인의 보호 상황

사진본인은 만 3세부터 친조모인 △△△를 위탁모로 하여 가정위탁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진본인은 최근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이 없어 스쿨벨트 등 장 계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뢰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사항

- (1) 성명: ◆◆◆
- (2) 주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직업:
- (5) 사진본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후보자

나.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및 후견계획

후견인 후보자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1급 사회복지사로,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아동복지법에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개표된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진본인의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사진본인의 위탁모인 △△△가 법정대리인 공백 없이 사진본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소통하여 사진본인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후견인 결정 사유 부존재

[서식 50] 보호대상아동 공동후견대상자 사전현황점검서

1. 사전본인에 관한 사항	
사전본인의 나이, 성별	만 12 세, 여
종전 원권자가 양육한 기간	2014. 04. 01. ~ 2014. 04. 01.
종전 원권자의 사망 원인	부모가 모두 병문 중이나 인력두절함
현재 사전본인을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외조모 <O><O>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다면 연계부담인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보호체제 편입 기간 2014. 04. 01. ~ 현재
사전본인의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동의 여부 (동의서 첨부)	알지 못함(원래 부모에 대하여 각 권리의 일시정지 실행 불가 진행 중임)
미성년후견인집회에 대한 사전본인의 동의 여부 (사전본인이 만 13 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3 세 미만임

2. 미성년후견인집회를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사전본인은 현재 부모가 이혼하고 외조모의 양육 및 돌봄을 받아오고 있음. 이후 부의 소식이 없게 되며, 또는 병원에 붙어있거나 유신상으로 인하여 하절이나 2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함. 사전본인의 양육자인 외조모는 만 68 세의 고령으로, 다른 가족 없이 사전본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상황이며, 약 1년 전인 2014. 04.경부터는 아동복지법상 사전본인을 가정위탁하는 하타부가 되었을 때, 사전본인이 학교 중 결석사유를 당하여 보훈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원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이외에도 원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전본인의 본래인 학습사이드 가학이 안 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제 사전본인의 여학을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공동후견 제원 제정사업을 통해 이 진 불구를 해소 되었음.

3. 사전본인의 현재 양육 환경 및 장래 양육 계획(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사전본인은 위탁모인 외조모와 아주 친밀한 관계이며, 외조모의 보살핌 하에 건강히 자라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볼 다니고 있음. 다만 외조모가 고령인 관계로 외조모가 사전본인의 더 나은후견인이 되어 여러 업무를 보는 것이 어려울 지원을 요청함. 이제 보호대상아동 공동후견 제원 제정사업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사전본인의 관련자 부패로 인한 보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한편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사전본인의 거구를 사생활권하고 있어, 사전본인의 보호·양육 및 교육 상황에 대하여 공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후견인 후보자는 <O>시 아동보호전문관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생활권 탐방, 학교 교사 등과의 협력 하에 중앙유치원 사전본인의 외조모와 사전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아동보호체제 내에서 사전본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식 60]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사회초사보고서 재산 항목을 참조하여 기술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할 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면 됨)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서식 7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회조사보고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장구인	지방자치단체		
	주소		
사건	본인과 관계		
	성명	생년월일/성별	
본인	주소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작성자) 1. 2. 3. 4는 가급적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작성하시고, 5.6은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시기 바람. 장애단체 등이 후견수요자를 발견한 경우 사회복지사기 전제를 직접 작성하여도 됨) (서명)

담당공무원(또는 사회복지사의 성명):

생년월일/성별: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 관계): ()

주소: ()

[후견심판사건의 신청에 대한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

☐ 동의를 받았음

☐ 동의를 받지 않았음: 이 경우 특별한 이유 (예시: 동의능력이 없음)

※ 후견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 원칙임.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본인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면 됨).

1.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여박취 (전화번호 등)	
주소			
결혼·이혼·재혼 또는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예일 경우, 언제: 후견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연마취:		

II 사건변이의 활동능력에 대한 이견

(작성일자: 2012년 10월 10일) 사회생활을 수행할 때의 일반적 활동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을 알기 위한 것임.
7월 5일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개론 수업 시범으로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얻어 작성하는 것임 바람직함

성명: (서명) 성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위(또는 분야)와 관계:)
주소:)

1.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일반생활 동작	1. 부형 : 2. 처사 : 3. 직렬의 : 4. 용면 : 5. 의사소통 :
현재 건강상태	1. 질환 : 2. 해복용 : 3. 외상 : 4. 중독 : 5. 시력문제 : 6. 청각문제 : 7. 기타의 외 건강 및 신체상태 :
교육	기간 학과명 졸업여부
직업훈련 활동	기간 직업명 나이
대인관계 및 정서적 특성	
강 령	
장애 수준도	
기타	

6. 사건 본인의 주거 관련 정보

주거생활 영역

주거 생활	□ 지역	□ 인기보통시설	□ 거주시설	□ 공동생활거점	□ 기타
• 시설명 :	• 생활인 :	• 생활기간 :	• 생활기간 :	• 생활기간 :	• 생활기간 :
주거 형태	□ 아파트	□ 빌라	□ 단독주택	□ 복합건물	□ 기타
• 평수 :	• 방갯수 :	• 화장실 유무 :	유, 무	• 단독방사용 :	
주거 상태	□ 차가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 시기 :	• 전세금 :	• 보증금 :	월세		

기타사항(주거 환경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 : _____

아도

그런데 일상생활이 활동바탕이 될수록, 이를 이용하여 그 많은 의미를

2. 장애인권 특성

장애유형/장애가 심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중복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장애진단기관
인복을 어부(악물)	
보장구 사용 또는 필요 여부	
장애인권 치료 현황	

3. 행동특성

번호	내용	평가		기타사항
1	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2	한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갔다하여 안정부절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3	길을 잃거나 해면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4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법적인 행동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5	흔지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땔 수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6	불편이나 옷을 맴가트려거나 부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7	의미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4. 인지기능

읽기/쓰기	
수계능	
날짜개념	
위치개념	
지시이해력	
상황판단력	

발달영도 기능종류	지원제공상태				불가능	임이불편	조금불편	불편함	중심	퍼들	복종	지관	점
이탈기													
확률하기													
웃이기/웃기													
몸조순침													
몸변보기													
장보기													
식사준비													
식사하기													
청소/씻거지													
세탁													
누워서 앉기													
앉아서 서기													
화장실 가기													
보통													
침대에 이동													
교통수단 이동													

인정활동능력

④ 의사소통표현능력

<p>• 기타사항 : 내용 외 → 수준 고, 혹은 기타사항 또는 예를 기입한다. (예. 기능1-요구하기에서 내용 : 의사소통 시 필요 표현을 요구하기 어렵다를 체크했다면 → 수준 : 2소리를 내서 표현하는데 다시 체크한다. 수준에서 체크내용이 없거나 기타사항이 있을 시 기타사항 : 무슨내용이라는 식의 예를 써준다.)</p>

• 기능1- 요구하기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필요 표현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복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p> <p><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듣고 표현 가능 (예. 물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볼, '물' 또는 '물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 현)</p> <p><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필요 표현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복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p> <p><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기타키거나 선택)</p> <p><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이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표현 또는 마시는 행동을 표현)</p> <p><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복마한다는 것을 표현)</p>
수준		
기타 사항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필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화투를 맡아달라고 요구)</p> <p><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듣고 표현 가능 (예. '화투', '맡아주세요' 또는 '화투 맡아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화투, 맡아 또는 '화투 맡아주세요' 모)</p> <p><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화투, 맡아)</p>	<p><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필요 행동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화투를 맡아달라고 요구)</p> <p><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화투를 맡아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기타키거나 선택)</p> <p><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치거나 얼굴 표정으로 맡아달라고 표현)</p> <p><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맡아달라는 것을 표현)</p>
수준		
기타 사항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① 언어이해 능력

평가내용
<p><input type="checkbox"/> 말을 이해하는 데 2문장 이상의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예. 이제 엄마가 사 온 노란색 기분을 좋아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파란 음료이 기쁨으로 좋아?)</p> <p><input type="checkbox"/> 말을 이해하는 데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할 때 잘 이해한다. (예. 기쁜 취? 밥 먹을까? 등 좋까?)</p> <p><input type="checkbox"/> 말을 이해하는 데 단어 수준으로 제시할 때 이해를 잘 한다. (예. 기쁜? 밥? 좋?)</p>
• 기타사항 :

②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p><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 할 때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가 주스 줘)</p> <p><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 할 때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 주스)</p> <p><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 할 때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아아엄마, 두드(주스))</p> <p><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 할 때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으으, 아아아)</p>
• 기타사항 :

③ 의사소통이해 능력

평가내용
<p><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대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아기 좋아)</p> <p><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손짓, 입꼬표정)</p> <p><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억양이나 톤을 이해할 수 있다.</p>
• 기타사항 :

* 기능2- 반영하기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승용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p> <p><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글로 표현)</p>
수준	<p><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네'를 상징하는 스티커 그림을 그리기)</p> <p><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p> <p><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p>
기타 사항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 저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p> <p><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아니요'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아니요'를 상징하는 화난 얼굴 그림을 그리기)</p> <p><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부정의 의사를 표현)</p> <p><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p>
수준	
기타 사항	

* 기능3- 주관적 진술하기

내용	<p><input type="checkbox"/>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p> <p><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 문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p> <p><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을 얼굴 표정, 아니 몸짓으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p>
수준	
기타 사항	

내용	<p><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생동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 하기 어렵다. (예. '하늘이 파랗고',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상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그리거나 선택)</p> <p><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고',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상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그리거나 선택)</p> <p><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고', '빨간색' 등의 단어,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고', '빨간색' 등의 단어,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나 생각을 표현)</p> <p><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고', '빨간색' 등의 내용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p> <p><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p>
수준	
기타 사항	

III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적성자사건본인의 후견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포입, II의 작성자가 사건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록하여, 발달장애지원센터, 공공후견법 전문인력의 조언을 받아 작성)

성명 : (서명) 성년월일/성별 :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 의 관계) : ()

주소 : ()

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요구

(복지지원들을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사항 기술)

한글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모양육수당(지역특화) <input type="checkbox"/> 할사장애수당(지역특화)(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전달지원(월 원)
복지 서비스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관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가정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내용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 표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또는 쓰기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 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단어 문장으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뿐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이거', '네모' 등 단어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 표현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 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발표 표현하거나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뿐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이거', '네모' 등 단어로 표현)
가타 사항		

6. 의사소통 단계 선정

해당 여부 (체크)	단 계	특 성	피후견인 주 의사소통 수단 유형 예 (예. 구어, 몸짓등)
<input type="checkbox"/>	4단계 (구어 의사소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어 몸짓 그림, 글자, 및, 물체 등 구체적인 상징이나 구체적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3단계 (상징적 의사소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상징적
<input type="checkbox"/>	2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 의도적 의도적 의도적
<input type="checkbox"/>	1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 의도적 의도적 의도적

2.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사무의 후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부라도 없다고 판단되면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 각 절단은 예시임. 이를 표시된 부분을 참조해서 기술하면 됨. 좌측 예를 참조해서 우측도 기술하면 됨)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간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병원을 다니며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입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인원수속, 퇴원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 시의 등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행 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신할 필요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p>사건발언에게 병행진료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병행진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병행진료를 인계하여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p>	
가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임대하는 아니지만, 추가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스스로 전셋집이나 전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개인의 체결 등을 통해 장소 관리가 필요하데, 이 사무처리 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관련한 계약체결, 변경, 해지의 대리권이 필요한지? 현 거주지의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우 계약 사망자인 상태이므로, 계약 갱신 대리가 필요함 □ 주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활동등 보조서비스의 신청, 포함(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대릴 필요가 있는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 가 필요한지?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교육, 여가, 노동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향포로 그림, 작업훈련프로그램, 리크레이션 등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직업활동의 수행(보훈직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향포로 그림, 작업훈련프로그램, 리크레이션 등) 이용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개별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 파출감인의 동장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 개별상의 행위가 필요함 ■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p>공립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개인의 수 입면이 전담한 상태로 수급 신청이 필요함 - 수급비를 거부하며 통장을 개설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개설 및 수급비 관리가 필요함 □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상 생활비용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금융 입출금 통틀러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3. 후견 관련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

(후견이 필요한 영역: 건강, 가사,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등 공판상의 행위, 재산관리, 일상생활 관리 등의 영역을 명목에 두고 작성하기 바람.)
그 영역에 있어서 후견수요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표현하기 바람.)

- 1) 각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
- ☐ 있음 ☐ 변동적임시간, 시간별로 있을 때도 있을 때도 있음)
 - ☐ 지면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 지면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 2) 대립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라는 표현을 구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의 여부, 구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인과된 판단을 하는지, 부족 함)
- ☐ 있음 ☐ 변동적임시간, 시간별로 있을 때도 있을 때도 있음)
 - ☐ 지면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음 ☐ 지면 없이도 비교할 수 있음
- 3)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위 1, 2에서 변동적이거나 있다고 한 경우에만 답변하면 됨)
- ☐ 문장화하여 전달할 수 있음 ☐ 단문으로 전달할 수 있음
 - ☐ 행동 또는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움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은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복안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사건변인이 외상을 극도로 기피하고 대인관계를 피하므로 복안을 대신하여 용정을 개발하여 수감비용을 관리 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복안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 위 항목을 기재할 때에는 특히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람. 한편 당해 사항의 건강, 주거 등등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지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이 있다면도 스스로 할 수 있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사건변인이 병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병진치료의 내용이 복잡해서 의사진행상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나요? 후견수요자가 병된 치료를 거부하고 있나요?
- ▶ 사건변인이 추가를 용가하나요? 입원비를 용가 주어야 하나요? 지금 입원비가 바만 것 같은가요? 아니면 추가와 관련하여 용가 가능성을 알고 있나요?
- ▶ 사건변인이 주위의 사람들과의 신체적으로 학대·방임·유기의 가능성이 있나요?
- ▶ 사건변인이 경제적으로(물리적) 재해결, 등, 정서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나요?
- ▶ 사건변인이 일상생활(식사, 청소, 빨래, 돌봄)을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렵나요?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고 있나요? 현재 후견수요자의 일상생활상의 돌봄에 불충분한 점이 있나요?
- ▶ 사건변인을 돌보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도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어서 보호에 불충분한 점이 있나요?
- ▶ 사건변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위험이 하나요?
- ▶ 사건변인이 사회복지급여 또는 사회서비스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 사건변인이 사회복지 급여의 관리 또는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나요?
- ▶ 사건변인이 스스로 금전관리를 할 수 없나요? 은행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IV. 시간본인의 희망

(작성자) (위 II, III을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성명: (서명) 생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책(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의사소통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결정이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의사확인인지 아니면 결정 또는 정서의 확인인지는 구분할 것

☐ 시간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후견인에 대한 희망

1) 시간본인은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_____에
 _____아니요

2)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3)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과의 관계는(배우자/가족이 있었는지 여부 등)

2. 후견업무에 대한 희망

1) 본인은 후견인이 어떤 일을 도와 주었으면 하나요?

서유 :

※ 이 부분의 작성에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시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역할, 시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 시간 본인이 결정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시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등이 후견인이 할 일입니다.

2) 후견인이 본인을 도와주거나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일(해당부분 체크)

- _____의를 관련 사항
 _____주거
 _____대인관계
 _____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
 _____교육 관련 활동
 _____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
 _____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
 _____사회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_____기타()

3)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내가 특별히 희망하는 내용

※ 이 부분의 작성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가장 반드시 지켜 먼저 내용을 설명해 줄 것, 별 것 없다면 좋 것 중장관리 등등이 시간 본인의 희망사항의 예일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인에 대한 희망

1)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적절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인을 선정하도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권고를까요?

2) 후견감독인으로 누가 적합할까요?

☐ 시간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V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과정 진술서

(사회조사보고서 양식 15.6 및 15.7 N를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여기까지가 사회조사보고서의 핵심부분임)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
연락처 :

본인은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 다음 내용에 따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건 본인의 현황, 활동능력 등을 판단할 때 참조한 의견
성명 :
후견수요자와의 관계 :

☐ 사건 본인의 면담
사건현황 및 면담 시간 :
장소 :
분위/내용이 왕래하는 공간, 상담실 등 :

☐ 기타 특이사항 : 수화통역사 활용 () 글로 써서 대화한 경우 ()

본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년 월 일

VI 후견인 후보자 관련 정보

※ 이 부분은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사건 본인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주소	주소

2.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별
주소	주소
그 외 연력이 가능한 사항	연력처
관계 :	연락처 :

3. 경력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 등

4. 후견인후견 교육이수 내용

- 1) 교육이수 여부
- 1)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 2)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생 받은 적이 있음
 - 3)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계획임
- 2) 교육 이수 내용
- 교육시행기관 :
 - 교육이수 기간 :
 - 교육과정명 : 시간 : (주요내용을 기술)

5. 후견인 결재사유 (민법 937조) 여부 : ☐ 있음 ☐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미환장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파산선정자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적정지 이상의 행위 상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1) 후견인으로서의 사무처리 능력이나 전문성, 사건본인과의 의사소통 능력등 확인가능한 내용, 일반적으로 학력, 경력, 전 직립, 자격증 등, 법원배우명에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기재 요구

총괄보고서
VII

※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적성자》(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토, 공공후견, 관련 전문가가 작성

०२/०४/०२ ०२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100%

1. 본인의 인지 사항

		이전(초)분
		수 분
	출발/도착시간	출 입

2. 시간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기재하는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고, 참고자료가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1) 사건 본인의 상태

가. 장애 유형, 발견시기, 장애등급판정 사항 :

나. 금치상자·한정채산자 선고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다. 사기죄의 성립 및 현행 입법기준에 대해, 무양어부, 조가형대, 동계어부 등 포함:

라. 소득(사회복지지원포함), 기타 생활비, 해당내용(가족의 부양 포함):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3년 4월 25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그는 1519년 5월 2일 프랑스의 앙투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519년 5월 2일 프랑스의 앙투안에서 태어났다.

2)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가. 인사생활의미여 :
가. 임금생활의미여 :

나. 인지능력 :

다 이사수통능(李師守通能)의 19세기 초 판본이다.

라 시무처리는정(보통) 계약해지근로정 제사할근로정 이사결정근로) :

3) 사무 후원의 필요성

가 시무후의 비요성의 원인 및 해결책의 산출과, 비요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 내용() :

5. 법원에서 해외로 반출된 대만인
6. 법원에서 해외로 반출된 대만인, 한중혼혈인, 특강후견인, 민묘후견인, 그 가족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파후각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6. 위 5. 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후견인 후보자는 사전 불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일이 없음을 서야합니다.
- 예) 아니요 ()), 잘 모름()
-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7. 아래 내용 중 귀하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1) 나는 성병의 관련 전과·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2) 나는 배임 및 횡령 등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전과가 없습니다.
3) 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강간,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4) 나는 명예훼손, 신용 침해, 비만주술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나. 일상생활, 복지서비스이용, 계약체결 등 사무처리 등의 후원의 범위(주된 후원이 필요한 부분) :
 다. 장편상의 신용평가독자지침의 신청, 주민등록권 입부 등의 기회 :
 라. 본인 관련 정보제공 신청(영양정보, 의료정보 등 본인 관련 정보제공의 신청 등의
 기회) :

3. 특정후견인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가. 특정후견인의 목표	
나. 후원할 사무	
다. 대리권	
라. 기간	
마. 시간본인의 후견 희망 여부	

4. (특정)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1)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
- 가) 성명 :
- 나) 주소 :
- 다) 생년월일/성별 :
- 라) 직업 :
- 2)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경력, 시민공공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 시범사업참여 등) :
- 3)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
- 4) 후견인 경력 사유 등 :
- 5) 시간본인의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희망여부 :
- 6) 시간 본인이 후견인 보수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

5. (특정)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 1)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 사항 :
- 2)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
- 3) 후견감독인의 경력사유 및 이해관계 :
- 4) 후견감독계획 :

[사외 8호] 치매공공후견사업 사회조사보고서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한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지자체의 장	OO 도 △△시장		
주소			
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명	OOO	생년월일/남·녀	
주소			

〈작성자〉 이 부분의 작성은 치매 환자를 발굴한 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중,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위임을 받아 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재직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등록증, 진단서, 후견등기부초제출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성명(서명) : 생년월일/남·녀 : / (성)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성)

주소 :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

성명: 직위: 연락처: (성)

[사건본인 발골 경위]

☐ 자체발골
☐ 외부발골
 (□자자제, □복지관, □재가요양센터, □요양원/병원, □이웃/자민 □ 기타())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후견심판사건의 신청에 대한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

☒ 동의를 받았음
☐ 동의를 받지 않았음 이 경우 특별한 이유 (예시: 동의능력이 없음)

※ 후견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긴급히 필요가 있거나 본인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향확인서 서류를 받도록 함.

1.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OOO	생년월일	19XX. XX. XX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락처 (전화번호등)	000-0000-0000
주소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예 (예일 경우, 인쇄 : 후견인 성명:)		

* 후견 개시 여부는 후견등기부초제출명서를 통해 확인함.

2. 사건본인의 간단 이력(주위로부터 듣거나 알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 력 (대거 및 현재 직업, 활동경력 등)	내 용
19XX - 19XX	OO 회사 재직
19△△ - 19△△	OO 교회 집사
20★★ - 20★★	OO복지원 자원봉사

* 사건본인이 과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재 어떤 직업이나 활동을 하는지를 알면 사건본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함.

4. 사건본인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해당영역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

	<input type="checkbox"/> 장미안근금 (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장배수금 (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기호성불교보금어 (월) 친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호연료 (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의로리 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부장애우영사(여탁착) (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황새장애우영사(여탁착) (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복금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금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노무제공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EK
사회 모임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연금(사회연금)월 친원) <input type="checkbox"/> 신채보상월 친원)

5. 자산영역(보인)의 자산 및 보인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 파부양자의 자산

	□ 복인 권리	□ 타인권리	□ 타인권리	□ 타인 권리와 복인의 관계
예속권리				
사회보장금 이관권리	□ 복인 권리	□ 타인권리	□ 타인 권리와 복인의 관계	
기타 자산관리	□ 복인 권리	□ 타인권리	□ 타인 권리와 복인의 관계	
	공적이익소속	■ 중핵	* 원	* 원 민원
	위 4. 복지지원(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협력책임규정 기제)			
월 수입 (복인)		□ 급여중요인) □ 외부 지원금(복인의무 자 면단대세) □ 개인연금	* 원 * 원 * 원	민원 원 원
	사회이익소속	□ 사보험	* 원	원
피부양가족 월수입	월수입(종액)	원	공적이익소속근 영여를 작성한 공무원(기제)	
	□ 전월세		* 원	원
	□ 세급 (수도 전기요금)		* 원	원
	□ 교통/통신비		* 원	원
월 지출	■ 일상생활비		* 원	원
	□ 기타()		* 원	원

3. 사건본인의 현재의 일반적 인 특성

기속성	원인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 ※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 (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자녀 (명)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 ※ 본인을 포함한 총 동거가족 (명)
	기속성	- 사별한인은 2015년 1월 23일 000명부터 집행명도 압조하여미행의 노년형 자택로 인자가능성에를 주조로 내발하여 상가명양으로 외관후치 관제조임. 자속적인 역양사로 및 경과 관할 필요하다는 지단을 발도. - 사별한인은 2015년 3월 3일 장(노인)93부하 4등근 인장을 받음. - 재가 있는 상행으로 인자가능에 정해야 있어 사속자로 제발인물을 복용해야 되는 상행임.
기속성	소득 또는 재산 상태 (주택 포함)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120%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공공부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득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인원 국민연금 등 () <input type="checkbox"/> 차상근로 <input type="checkbox"/> 지역근로 <input type="checkbox"/> 의료보조 1종 <input type="checkbox"/> 의료보조 2종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존속거 <input type="checkbox"/> 동거 가구원 있음 ※ 본인 포함 총 가구원 수 (명)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거주 <input type="checkbox"/> 58명 <input type="checkbox"/> 노인양육수당주책 <input type="checkbox"/> 58명 <input type="checkbox"/> 58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속성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빌라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복합건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II. 사건본인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1. 일상생활, 치료, 요양 등에서의 특성

구분	내용
예금 관리	1. 체크카드 사용여부: 불가능 2. 신용카드 사용여부: 불가능 3. 통장 거래 현황: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원 필요) 4. 온라인뱅킹 이용여부: 불가능 5. 현금 사용여부: 지원이 있으면 가용(금전의 사용도는 않지만 금액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 그러나 추적으로 자신의 필수품 등의 구입 등의 현금사용은 지출이 있으면 가능) 6. 기타: -
임상 생활 문자	1. 회복: 주변 사람들 전으로 가능한 고령으로 인하여 남아질 위험이 있어 부족하여 갈기도 함 2. 식사: 독립적인 식사준비 불가능 3. 복장: 가능하나, 많이 힘들 4. 용변: 어려움, 보행이 원활하지 않아 부족 등 필요 5. 의사소통: 본인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차 못하고 주로 과거의 이야기를 함 그러나 6. 기타: -
현재 건강 상태	1. 질환: 고혈압 2. 약복용: 고혈압, 영양제 3. 외상: X 4. 중독: X 5. 기타문제: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함(2008년 경)이라고 함 6. 청각문제: 큰 소리를 잘 듣지 못함 7. 기타(그 외 건강 및 신체상태): X
사건 본인의 최근 사회활동 또는 지원 내역	기간: 2020-00-00 내역: 000주인센터 000돌본센터 000돌본센터 000돌본센터
내연관계 및 정서적 특성	- 본인 사망에 관계 없음 - 장남, 딸 등 친척에서 친척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고 사별한 등등 위해 - 본인 사망 후 친척에서 친척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고 사별한 등등 위해 - 본인 사망 후 친척에서 친척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고 사별한 등등 위해
장 점	본인 사망에 관계 없음, 친하게 지내는 여배우, 친척과는 지금은 연락이 끊긴 부인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함.
약 점	체력에서도 낮고 고령에 강함.
기 타	

자 산 (본인)	□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		* 월		원
	□ 사회복지지원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				
	유증자산				
	□ 현금: 000 만원 □ 보증금/잔액: □ 예금: 000 만원 □ 사보통계좌: □ 정기예금/저축: □ 사보통계좌: □ 부동산: 000 만원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부동산 사가) □ 자동차: □ 사가 있는 귀속: □ 기타자산: □ 유증자산: □ 원 고장자산: 원				
파생자산	유증자산	원	고장자산	원	
채 무 (본인)	□ 없음 □ 있음: 채무금액 () 만원 □ 상환기간: 까지 □ 채무발생원인 () 만원 □ 상환기간: 까지 □ 채무발생원인 () 만원 □ 상환기간: 까지 □ 채무발생원인 () 만원 □ 상환기간: 까지				
기타사항(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자산, 원소, 원소, 원소 등에 관한 사항					

6. 사건 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작성)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동거여부
<p>사건 본인과 가족 간의 관계</p> <p>-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상 상의 아들 000(1970년)이 있으나, 사건본인의 자식관계로 소관하며, 000(주인)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건 본인을 통해 연락이 없음을 확인함.</p> <p>- 사건본인 본인의 친제(배우자) 000(1970년)이 있으며, 000(주인)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건 본인을 통해 연락이 없음을 확인함.</p> <p>- 사건본인 본인의 친제(배우자) 000(1970년)이 있으며, 000(주인)에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건 본인을 통해 연락이 없음을 확인함.</p>					
사실상 보호자가 있는 때 인적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기타사항	
개인적 및 가족적 정보제공자					

3. 대인관계에서의 특성

번호	항목	특성	기타
1	낯선 사람이 해가를 갈거나 도움을 주려고 할 때의 반응	낯선 사람과의 경계 심함.	
2	친숙한 사람이 해가를 갈거나 도움을 주려고 할 때의 반응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음.	
3	병원에서 진장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의 반응	거부반응 있음.	
4	노인복지관, 노인정 기타 모임에 참석할 때의 반응	어울리지 않고, 강제로 참여할 않아지면 거부하기도 함.	
5	은행 관공서 등을 방문하였을 때의 반응	강제된 있음.	
6	외출하였을 때의 반응(길을 잃거나 신호등 준수)	기준에 친숙하던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거부감이 잘 빠지고 주는 등 특약적이거나 거부반응은 많지 않으나 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	
7	기타 특성		

4. 의사소통 방식

* 일상생활, 치료, 요양, 예금인출,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관리 등 사건법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파악

① 언어 소통에서의 특성

특성
<input type="checkbox"/> 성인 간의 통상적 대화 수준으로 해가(하나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input type="checkbox"/> 간단한 문장 으로 해가할 때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다. (예, 식사 하셨어요? 잘 드셨어요?)
<input type="checkbox"/> 단어 또는 문장 등으로 해가(하나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예, 가방? 밥? 물?)
* 기타사항 :

기본정보	불편정도	불편원인	조금불편	불가	중도	불충분	지원요청
이탈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복합하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웃임기/웃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음도소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음반모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장모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식사준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식사하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침소/침가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세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누워서 앉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앉아서 서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화장실 가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보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화재어 이동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통수단 이동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자기결정권 행사 관련 영역

영역	의사소통지원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의사소통지원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의사소통지원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의사소통지원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이 필요한
예금 관리		지원 있으면 가능	지원 있으면 가능	
치매 기타 증상의 질병 치료		지원 있으면 가능	지원 있으면 가능	
후기에 관한 사항			지원 있으면 가능	지원이 있어도 어려움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리			지원 있으면 가능	
임상응용의 구입		현금으로 스스로 구입가능		
모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있으면 의사표현 가능하지만,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막아주어 거부하기는 함.		

III.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

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

- * 복지지원 등을 받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사항 기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보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가정호봉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대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모양육수당(자녀특화) <input type="checkbox"/> 불우성장애수당(지역특화)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구민복지지원 (별 차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별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을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인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산모대상임이도무다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조사업서비스 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돌봄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양부모가족지원(자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오항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신제보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상기구 급여대여 <input type="checkbox"/> 보장구지원 <input type="checkbox"/> 보살구 건강보험급여 <input type="checkbox"/> 주택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자금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주거안정태수리 <input type="checkbox"/> 고령주택 <input type="checkbox"/> 노인대학 <input type="checkbox"/> 문화회관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특 <input type="checkbox"/> 학습지도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품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아동나눔미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
복지 서비스지원	
사회보험	
보장구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교양교육	
여가문화 지원	
기타지원	

② 의사소통에서의 특히 유의할 점(후견심판절차, 후견활동 등에 참고 목적)

항목	내용
리본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해진 만큼
문장, 단어 이해에서 얻은 점	'좋은' 표현은 하지만, '싫은' 것은 '싫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
문장, 표정 등의 이해에서 얻은 점	

5. 사건본인의 인간적 특성(사건본인의 인간적 감정 이해를 통해 요구, 희망 이해 목적)

항목	내용
사건본인의 과거 직업에 대한 회상	본인이 은행에서 근무한 것이 대한 사부님이 대단히 큰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한 회상	몸의 어떤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심.
신분제(계급)에 대한 회상	신분제(계급)에 대한 회상
사건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회상	
기타	

6. 사건본인의 욕구, 희망, 감정에 대한 이해

행목	내용
예금관리	현금으로 회전을 쓰는 것을 좋아하신.
영양공공의 구급	당배를 파우치 없으시는데, 당배를 자취적으로 구입하심. 기타 그해임이 있신데 귀하를 좋아하심. 당배와 함께 지족적으로 구입을 하하심. 당배도 당배와 귀하가 많이 있음.
사비보장금여의 신장책 관리	사비보장금여 등을 독립적으로 신장하기가 편리한 것은 불거는. 그러나 본인은 항상 반대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에 오직의 급복을 가지고 쓰신 것은 기가질 것으로 보임.
차량(차대 차량을 포함)	병안 병문 등은 조속한 사비들거나 이동들은 순조로하니 당임자가 병문과는 등 가진 사비들이 있으면 귀도로 강제할 하신 지료를 위한 영영함에도 친숙하 시거나 사비들을 친후. 기타 지료와 관련된 부분은 아신까지는 순조롭게 따라 오심.
가주 및 요양	지비사비에서 자취공으로 거주하고 싶어 하신 요양원 등 사비 없으 고여 가는 것을 좋아하심.
대안책	

2.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 지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부라도 없다고 판단되면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 각 집문은 예시임. 이를 참조해서 기술하면 된. 좌측 예를 참조해서 우측도 기술하면 되.

구분	의사결정 자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자 필요한 영역
간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병원이나 다른 곳 의사결정에 시간이 필요할지? ■ 병원을 다이나 하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필요할지? ○ 입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자(의사) 필요할지? ○ 입원수속, 진료수속, 수술 또는 처치에의 동의 등 (인원수속, 진료수속, 수술 또는 처치에의 동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응급치료 및 입원에서 거의 대리자 필요할지?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병원 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지? ※ 대리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욕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간헐적 필요함, 그 사이에는 대리권 용서가 불가피해 도함.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추가적, 관련한 계획적결정, 변경, 해지의 대리권이 필요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곳이나 어떤 기관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어떤 치료에 있는지 병원을 들러도 쉽게 설명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어려움. ■ 스스로 정할만한 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중심적인 개인인 제인 등을 통해 그와 대리자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권, 의사처치권을 위한 의사결정자만이 필요할지? ■ 복식사절 및 의사결정, 신체 및 관련 계획의 제정에서 의사결정자(의사) 필요할지? □ 기타 추가적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자만이 필요할지? ※ 의사결정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복제에 어느정도 기능하나 단기간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또한 입양(도입)이 있는 하절간 양자로 등이 관련이 제정해, 또지 않자, 제정해, 많은 상황인, 이에 양쪽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제정(이) 필요함, 또한 양쪽 양친들 등으로 이해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음. 이에 가족관련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추가 권리를 축하으로 하는 제인(활동중심)서비스의 신장 도함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복식사절 및 도입(사절) 신체 및 관련 계획의 제정에서 계획적결정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타 추가 관련 사무 처리에 대리자 필요할지? ※ 대리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욕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결의(이) 필요함 그 사이에는 대리권 용사(가) 불가피해 보임.
가소에 관한 사항		
간접의사 결정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광범위한 의사결정(가결) 주권(의사결정)의 신장, 갹신, 주권(의사결정)을 통해 필요함.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대리자 필요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광범위한 의사결정(가결) 주권(의사결정)의 신장, 갹신, 주권(의사결정)을 통해 필요함. ○ 의사결정자가 거의 불가능하여 대리자 필요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합사구 관련 신장 및 수속 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장, 장애인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합사구 관련 신장 및 수속 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장, 장애인에 관한)

※ 위 항목을 기재할 때에는 특히 후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초점을 맞추거나 버림, 한문 당해 사형어 간결, 주거 등들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치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치원이 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IV. 후견에 대한 사전본인의 희망

※ 위소통중재의 장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결정이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의사확인인지 아니면 감정 또는 정서의 확인인지는 구분할 것. 후견인은 사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역할, 사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해 주는 역할, 사전 본인이 결정할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사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일 등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1. 후견인에 대한 희망

1) 사전본인은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2)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3)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과의 관계는? (사전본인과의 관계 또는 알고 있었던 기간 등)

OOO(은)는 OO(군·구) 차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단 소속 직원으로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의 사전 이전부터 사전본인을 매주 1회 방문하여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2. 후견업무에 대한 사전본인의 희망

1) 본인은 후견인이 어떤 일을 도와 주었으면 하나요?

병원 치료 및 입원동의, 자선관리, 전세계약 중지, 은행업무 위임

2) 후견인이 본인을 도와주거나 대신하여 의사결정자임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일

(해당부분 체크)

—○— 의료 관련 사항 (의료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일, 의료계약을 대리하는 일 등)

—○— 주거 (주거 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일, 거주 관련 계약을 대리하는 일 등)

—○— 대인관계

—○—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

—○— 교육 관련 활동

—○—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

—○— 사회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 기타(재난동장관리)

3)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희망하는 내용

※ 이 부분의 작성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가령 반드시 내게 먼저 내용을 설명해 줄 것, 월 몇 회 방문해 줄 것, 동장관리 등등이 사전 본인의 희망사항의 예일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인에 대한 희망

1)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적절한 감독관임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권장할까요?

2) 후견감독인으로 누가 적당할까요?

☐ 사전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

V. 총괄보고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1.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남·녀
주소	
등록기준지	

2. 사건본인의 상태와 일반현황

가. 질병 유형, 발병시기, 장기요양등급판정 사항 :

사건본인은 2013년 00월 00일 0000명일 의사 000로부터 결핵병은 말초레이마병의 노년성 치매로 인지기능장애 진단 받고 치매적인 악동치로 및 경과 관찰 필요하다는 진단 받음. 2017년 00월 00일 장기노인요양보호 2등급 인정을 받았음 (장애진단서 및 사회조사보고서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1.3 부분 참조).

나. 사건본인의 생활 및 현황 일반(질병,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 포함) :

사건본인은 치매 이외에 2008년형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생겨, 수송을 한 적이 있으며, 교통안 및 난장이 있어 크게 이차해야 함. 사건본인은 배를 잠으면서 현재 움직이는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식사섭취나 취침, 양변 등의 처리는 지면이 있어 가능. 의사소통의 장애는 본인의 '싫다' '좋다'의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용어나 설명은 어려움. 현재는 기초수급액으로 48만원의 지원받고 있으며, 본인의 당해 및 소소한 지출비용으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또한 현재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가 월 12만원인데, 현재 몇 개월째 저배 금액을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이 채입되어 있는 상황임 (사회조사보고서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1.3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부분) II(사건본인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 참조

다. 가족관계 등(부양, 동거 등 포함):

사건본인은 현재 독거로 임하(파트)에 거주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김00(70세), 딸 정00(37세)가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딸은 결혼하였으나 양사자를 도울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함(00주인센터, 가족방문상담 당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회조사보고서 II. 5. 사건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 부분 참조)

라. 후견 개시 여부:

없음.

3.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사무처리와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 기술)

1) 사무영역

가. 소득(사회복지지원포함), 기타 생활비 충당내용(가족의 부양 포함) :

사건본인은 기초수급비로 매달 48만원의 사회수당을 받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임하(파트)의 보증금 500만원, 예금 500만원의 소득 있음. 또한 기타 매월 지출이 20만원 정도를 대비 월 기타 소소한 지출비로 사용하고 있음. (사회조사보고서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부분 참조)

나. 병역지표와 관련된 사항 :

사건본인은 현재 체제 진단을 받은 후 고혈압 등이 있으나, 현재 병원 치료와 관련된 작성해인 사항은 없음 (사회조사보고서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부분 참조)

2) 사건 본인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과 지원의사결정 등

가. 일상생활활동, 치료, 요양 관련 영역 :

사건본인은 배 등을 잡으며 보행을 하고 있어 부족 등은 필요함. 또한 식사 및 목욕, 취침의 용변 등 일상생활활동에서 독립적인 활동은 어려움. 다만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정도로 완전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님 (사회조사보고서 II. 사건본인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나.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

예금관리,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관리, 치료, 요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불가능. 그러나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표현이 가능. 본인이 직접적으로 신청서의 등을 이행하지는 못하지만도 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감정이나 욕구 파악이 가능. 이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면 아랍지 않은 사람은 의사 확인하여 최대한 자기결정권 수준이 가능.

다. 자기결정권 행사의 방식 :

성인의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 함. 그러나 단순한 문장이나 단어 등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 가능함.

마. 일상생활에 관리 지원 :

사건본인은 기초수급비와 소액의 예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사건본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상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 이에 공공부조 등의 통장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요경비 지출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사건본인의 보다 안정 적인 일상생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리권, 예금관리 대리권 및 관부사무 지원 필요.

바. 공공성의 신장행위(복지지원)의 신청,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의 기회 :

위 사회서비스 신청 및 대리행위를 위하여 사건본인 영외의 각종 서류 발급 사무 필요, 이에 공공성 신장행위의 사무 지원과 필요에 따라 대리권이 필요.

사. 미래생계의 지원 :

사건본인의 의사소통이 성인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음, 본인의 출고 실용에 대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수준임, 이에 주거, 치료, 요양 등에 대한 본인의 욕구 등에 대한 선호도에 부합하는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

4. 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가. 후견의 목표	사건본인은 지역사회에서 혼자서 살아 있음, 일초이대형 노년성 치매 증등 정도이며 일상생활, 예금관리, 요양, 치료, 기타 사회보장수급권의 관리 등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사표현은 가능한 정도임, 그러나 사건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전담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 있음, 이에 사건 본인의 의사 및 욕구, 감정을 최대한 확인하여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이러한 재발 사건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에게 적절한 사무후원을 통해서 사건본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생활에서 최대한 위원을 예방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견의 목표임.
	일상생활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사회보장수급권 관리 지원
	거소관련 지원
나. 후원할 사무	공법상의 신장행위 관련 지원
	미래생계 지원(신청으로 -요양지시서, 의료 및 요양 관련 동의권의 대리행사 대리인 지명서, 신약계약체결 지원 등)
	예금관리 관련
	법원 자료나 입원, 계약
	사회보장수급권 신청 관련
다. 대리권	거소관련 계약체결 관련
	공법상의 신장행위 관련
	기타(공공부조등으로 취득한 금전의 신약계약 체결)

라. 본인과의 소통에서 특히 유의할 점 :

대인관계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면을 어려워하거나, 심한 경우 과격해짐도 있음, 이에 의사결정지원시 의사확인 과정 등에도 꾸준한 리브 형성 필요.

3) 사무 후원의 필요성

가. 사무후원 필요성의 원인 및 위험성(일상생활, 활동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

사건본인 독거의 치매환자로 지역사회에서 살아있음, 하지만 현재는 치매가 중등도로 진행한 상태임, 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의 사무를 스스로 시기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식사 및 청결유지 등 아직은 불변하지만 보행이 되고 있지만 향후 적절한 지원이 필요.

나. 사회보장수급 관련 :

사건본인은 재택근근을 받았음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기초수급비용 이외의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 신청 및 일련의 이용절차를 지원 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사건본인이 학시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다.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

사건본인은 치매 뿐만 아니라, 고혈압 그리고 몇 년 전에 수술한 배낭장 등의 병력이 있음, 이에 향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미리 본인의 질병의 진행상황과 의료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노인장기요양 2등급으로 중등 수준으로 사건본인에게 현재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서비스 이용계획 및 의료행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의료서비스 사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거소관련 사무지원 :

사건본인이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보증금 800만원 월 12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임대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주택의 청결상태 등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거주자의 임대료 지불의 남반 등을 정리하고 청결유지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치매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대비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미리 요양원 등 본인의 거소관련 각종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시·도 000]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회조사보고서

5. (특징)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1)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생년월일/남·녀 :
 라) 직업 :
- 2)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등(경력, 공공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 유사사업참여 등) :
- 3)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
- 4) 후견인 결정 사유 등 : 없음
- 5) 사건본인의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희망여부 : 희망함
- 6) 사건 본인이 후견인 활동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없음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소속 및 직위	000 제1배안심센터 소속
직성명, 기타 특이사항	

정신질환자를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공공후견법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청구인	지발자지단체	
	주 소	
	사건 본인과외 관계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1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작성자>
 1, 2, 3, 4는 기금적 음면품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업무원이 작성, 5, 6은 후견자원
 대상 정신질환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작성
 자의 신상은 아래에 기재하면 됨)
 성명(서명) : 주민번호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단)

[후견심판사건의 신청에 대한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¹⁾

☐ 동의를 받았음
☐ 동의를 받지 않았음 : 이 경우 특별한 이유(예시: 동의능력이 없음)
 ※ 후견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면 됨)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²⁾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전화번호 등)	
주 소		
금지산·한정재산 또는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³⁾	□ 아니오 □ 예 (예일 경우, 안재 : 후견인성명: 후견인 연락처 :	

1) 성인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할 수 있다.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증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함. 주소는 기금적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줄 것.
 3) 한정재산, 금지산,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이 개시여부는 후견등기사항전부등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건본인의 일반적 인 특성

결혼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반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형제 자매(명) <input type="checkbox"/> 자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명)
동거여부	<input type="checkbox"/> 형제 자매(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명)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장애유무 (□유 □무)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한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하지 않은 장애
소득수준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경제 생활	<input type="checkbox"/> 소독수준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메 (직장명:) <input type="checkbox"/> 기타(자영업:)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직장건강 <input type="checkbox"/> 의료보험 1종 <input type="checkbox"/> 지역건강 <input type="checkbox"/> 의료보험 2종
독거여부	<input type="checkbox"/> 독거 <input type="checkbox"/> 동거 가구원 있음 <input type="checkbox"/> 혼독거 <input type="checkbox"/> 본인포함 총 가구원 수 (명)
거주 상황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단기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건본인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매년 영역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할 것)

현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자녀)(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지원(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한정지원 ()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자녀)(월 전원)
복지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지원(자녀)(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월 전원)

※ 참고자료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른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2023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p.201)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교육·자상위)
상격	의무지급 (별도의 신청 불필요)	월 3만원	제향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모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자상위장애인
관한서비스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자상위)

4. 자산영역(본인의 자산 및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 피부양자의 자산)

자산영역 - 본인/부양가족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 가능	□ 불가능	□ 부분가능 ()		
자산	□ 본인	□ 부모님	□ 형제·자매	□ 친척	□ 기타
관리자	공적이전소득	□ 총액	1. * 월 원		
		위 3. 국지지원(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합계(공무원 기제))	2. * 월 만원		
월 수입 (본인)	사적이전소득	□ 외부지원금 (부양의무자, 민간단체)	3. * 월 원		
		□ 개인연금	4. * 월 원		
		□ 사보험	5. * 월 원		
부양할 가족	월수입(총액)	원	공적이전소득(3. 항목을 작성한 공 무원이 기재)	원	
	□ 정월세	6. * 월 만원			
	□ 세금 (수도, 전기요금)	7. * 월 원			
	□ 교통/통신비	8. * 월 원			
	□ 일상생활비	9. * 월 원			
월 지출	□ 기타 ()	10. * 월 원			
	□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	11. * 월 원			
	□ 사회복지지원서비스 (복지지원청조)				
자산 (본인)	유동자산	□ 현금:	□ 단기투자자산:		
	□ 예금:	□ 정기예 적금(적립액):	□ 사보험적립액:		
	□ 부동산:	(소유부동산 시가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자동차:	□ 시가 있는 귀금속:			
	□ 기타자산:				
부양가족의 자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채무 (본인)	□ 없음	□ 있음: 채무금액()만원	□ 상환기간: 까지		
기타사항(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 부양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재산과 관련된 기타사항)					

5. 사진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세부정보

가족 및 보호자 정보(Family History)

* 가족관계 및 보호자(가족관계등록부의 대조하여 작성하면 됨)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동거여부

사진 본인의 사실상의 보호
자(가족 등)의 재산장도(부동산,
동산, 동산, 부채 등에 관한 일
반적 정보), 사진 본인을 돌
볼 역할(고령, 장애 등 참조)

사진 본인이 부양할 가족의
상태 (저녀의 연령, 가족 중
장여가 있을 경우, 동거여부,
가족관계에 대한 주변의 평
가 등)

보호자가 있을 때 연락처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기타사항
개인력 및 가족력 정보제공자			

6. 사진 본인의 주거 관련 정보

주거생활 영역

주거생활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단기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 시설명 : * 생활인 : * 생활기간: 약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빌라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복합건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수: * 방점수: * 화장실 유무: 유, 무 * 단독방사용:	
주거상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시가: * 전세금: * 보증금, 월세:	
기타사항(주거 환경을 적절 본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청결상태 등 포함)		
약도		
고향편(임상생활의 활동반경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적으면 됨)		

2. 장애관련 특성

장애 유형/등급 (신원장애, 신체지 장애 없음)	중복장애 유형
장애 판정 시기	장애 진단기관
약 복용 여부(약물명)	
보정구 사용 또는 필요여부	
장애관련 치료 현황	

3. 행동특성

번호	내용	평가		기타사항
1	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지장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2	한글대 기판과 일치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화 다갔더라도 인정부절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3	길을 잃거나 배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4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험 적인 행동을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5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땔 수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6	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7	의미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무목적한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나오

4. 인지기능 (해당수준에 체크)

알기/쓰기	
수계념	
날짜개념	
위치개념	
자시인해력	
상황판단력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① 언어이해 능력

평가내용
<input type="checkbox"/> 말을 이해하는데 2문장 이상의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예. 어제 엄마가 사 온 노란색 기판들 돌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이 기판으로 돌려?)
<input type="checkbox"/> 말을 이해하는데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할 때 잘 이해한다. (예. 가방 줘? 밥 먹을까? 물 줄까?)
<input type="checkbox"/> 말을 이해하는데 단어 수준으로 제시할 때 이해를 잘 한다. (예. 가방? 밥? 물?)
13. * 기타사항 :

②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 할 때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가 주스 줘)
<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 할 때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잠미, 주스)
<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할 때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아아(엄마), 두드(주스))
<input type="checkbox"/> 말을 표현할 때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으으으, 아아아)
14. * 기타사항 :

③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대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예. 여기 앉아)
<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예. 손짓, 얼굴표정)
<input type="checkbox"/>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억양이나 톤을 이해할 수 있다.
15. * 기타사항 :

• 기능2 - 반응하기

내용	<p>□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별로 수용응답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p> <p>□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도 표현가능 (예. "네" 또는 "아니" 용어로 말로 표현)</p>	<p>□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별로 수용응답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p> <p>□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도 표현가능 (예. "네" 또는 "아니" 용어로 말로 표현)</p>	<p>□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별로 수용응답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p> <p>□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도 표현가능 (예. "네" 또는 "아니" 용어로 말로 표현)</p>
수준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니" 용어로 말로 표현)</p>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니" 용어로 말로 표현)</p>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니" 용어로 말로 표현)</p>
기타 사항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p>

내용	<p>□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별로 거부지행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p> <p>□ 단어, 문장, 또는 쓰기도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p>	<p>□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별로 거부지행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p> <p>□ 단어, 문장, 또는 쓰기도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p>	<p>□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별로 거부지행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p> <p>□ 단어, 문장, 또는 쓰기도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p>
수준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표현)</p>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표현)</p>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표현)</p>
기타 사항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p>

④ 의사소통표현능력

• 기록방법: 내용 □ → 수준 ○, 혹은 기타사항 또는 예를 기입한다.
(예. 기능1-오구하기에서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 수 준: ○소리를 내서 표현가능에 다시 체크한다. 수준에서 체크사항이 없거나 기타사항이 있을시 기타사항: 무시한다라는 식의 예를 써준다.

• 기능1 - 요구하기

내용	<p>□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목아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p> <p>□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도 표현가능 (예. "물" 또는 "물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p>	<p>□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목아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p> <p>□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집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p>	<p>□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목아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p> <p>□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집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p>
수준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p>	<p>□ 표현용지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이라는 집오양을 만들어 표현, 또는 마시는 컵 등을 표현)</p>	<p>□ 표현용지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이라는 집오양을 만들어 표현, 또는 마시는 컵 등을 표현)</p>
기타 사항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목아한다는 것을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목아한다는 것을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목아한다는 것을 표현)</p>

내용	<p>□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물새이를 물어달라고 요구)</p> <p>□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도 표현가능 (예. "물 새이" 또는 "물아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p>	<p>□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물새이를 물어달라고 요구)</p> <p>□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새이를 물어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p>	<p>□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물새이를 물어달라고 요구)</p> <p>□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새이를 물어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p>
수준	<p>□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물새이, 물아 또는 "물새이 물어주세요")</p>	<p>□ 표현용지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갯지어나 영글 표정으로 물어달라고 표현)</p>	<p>□ 표현용지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갯지어나 영글 표정으로 물어달라고 표현)</p>
기타 사항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물새이, 물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물어달라는 것을 표현)</p>	<p>□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으로 물어달라는 것을 표현)</p>

• 기능3 - 주편적 진술하기

내용	□ 본인의 기분이 어떨지,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할 수 있다.	□ 본인의 기분이 어떨지, 감정이 어떤지 알지 못할 수 없다.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수준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표현/문장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기타 사항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좋아", "슬레" 등의 단어로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이나 감정을 표현)

내용	□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알 수 없다.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다",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없이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다",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없이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수준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다", "빨간색" 등의 단어로 지인이 지니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 표현/문장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랗다", "빨간색" 등의 단어로 지인이 지니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기타 사항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 "파랗다", "빨간색" 등의 단어로 지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이나 감정을 표현)

내용	□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 수 있다.	□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 수 없다.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수준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표현/문장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기타 사항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기분이 더 좋아", "내로 모으므로 행복" 등 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빌려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이나 감정을 표현)

5. 의사소통 단계 선정

해당 여부 (체크)	단계	특성	피호견의 주 의사소통 수단 유형 예 (예, 구어, 글씨 등)
<input type="checkbox"/>	4단계 (구어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3단계 (상징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 • 그림, 글자, 만, 물체 등 구체적인 상징이나 구체적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2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 •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input type="checkbox"/>	1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 • 주로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 의사소통 상대방이 의사소통자의 행동을 해석해야함.	

목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도구는 대리가 필요하며

[illegible]

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요구

협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모양육수당(직업특성) <input type="checkbox"/> 형제양육수당(직업특성) <input type="checkbox"/> 기타양육지원금 등	(한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노인맞춤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지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영사회서비스 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돌봄가족양육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보육료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돌봄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입양비용지원(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합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장가구·교부대어 <input type="checkbox"/> 보충구직지원 <input type="checkbox"/> 주택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급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촉진 <input type="checkbox"/> 노인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교육 <input type="checkbox"/> 문화체험 <input type="checkbox"/> 여행, 나들이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보충구 건강보험급여	
	<input type="checkbox"/> 보충구 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주택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급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촉진 <input type="checkbox"/> 노인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교육 <input type="checkbox"/> 문화체험 <input type="checkbox"/> 여행, 나들이	<input type="checkbox"/> 추가활동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추가인건비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취득 <input type="checkbox"/> 학습지도 <input type="checkbox"/> 입소율 <input type="checkbox"/> 생활체육	
기타지원			
타지			
지			
원			

1. 사무의 후원(의시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연

17) (사무의 측면이 있어 역사적정을 할 수 있는) 청와 및 의사결정능력이 인과다 없다고 판단된 뒤, 좌측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할 각 전문은 여성인, 이를 표시된 구문을 참조해서 기술하면 됨. 배를 참조해서, 우측도 기술하면 됨.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건강에 관한 판단 사항	<input type="checkbox"/> 현재 환경을 떠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을 떠나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입원이나 병원 치료요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입원 수속, 퇴원 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 동의 등(등)	<input type="checkbox"/> 병원 치료 및 입원에서 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 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p>※ 위생감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p> <p>사건관계자 병원진료가 필요하고 사망자(인, 환자)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양으로 병원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한</p>	<input type="checkbox"/> 주거와 관련된 계약 체결, 변경, 해지의 대리가 필요할지?
	<input type="checkbox"/>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주거 권리를 약탈으로 하는 계약(합동보유 서비스)의 신청, 포탈을 체결하는데, 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평상시나 편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용모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주권 관련 필요조건 계약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리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거주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가 필요할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input type="checkbox"/> 경제력, 신체의, 성격으로 확대, 피해를 입은 뒤임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 사건본인이 의식을 극도로 기피하고 대인관계를 피하므로 본인을 대신하여 통증을 깨워 수감비율을 관리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타	<input type="checkbox"/>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후 위 항목을 기재할 때에는 특히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람. 한편 당해 사형(인간, 주거 등등)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지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이 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이가활동(가형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워크숍 등) 이동거하의 대리가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이가활동(가형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워크숍 등) 이동거하의 대리가 필요한지?
교육, 이가, 노동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직업활동의 수행(보조직업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직업활동의 수행(보조직업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input type="checkbox"/> 입방적 관리상의 행위(가형 주민등록의 신청, 경신 주민등록증발급 등)의 대리, 필요하지	<input type="checkbox"/> 입방적 관리상의 행위(가형 주민등록의 신청, 경신 주민등록증발급 등)의 대리, 필요하지 - 거주인의 통장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입방적 관리상의 행위가 필요함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 사회복지수급이 필요하여도 불구하고 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가인의 수급권이 전무한 상태로 수급 신청이 필요함 - 수급비를 기동하며 통장을 활용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개설 및 수급비 관리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관리를 위한 대리권이 필요한지(지인통장개설, 이체, 해지 등 포함)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비용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비용 및 서비스의 구매결정에 대리가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법률 위촉을 통해서 중상사 등의 사건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V 사건본인의 희망

<작성지> <위 II, III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	
성명(서명) :	(서명) 생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 관계) :	(인)
주소 :	

※ 의사소통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문 말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의사확인인지 아니면 감정 또는 정서의 확인인지는 구분할 것

☐ 사건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후견인에 대한 희망

1) 사건본인은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_____에
_____아니오

2)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3)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과의 관계는? (매월사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

후견업무에 대한 희망

1) 본인은 후견인이 어떤 일을 도와 주었으면 하나요?

※ 이 부분의 작성에는 도움을 참고해주세요.

사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역할, 사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해 주는 역할, 사건 본인이 결정할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사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등이 후견인이 할 일입니다.

2. 후견 관련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

18 (후견이 필요한 영역인지, 계속, 중단하도록 판결정할 수 있는가, 여가활동, 재산관리, 인신관리, 관리 등의 영역, 시민사회의 참가, 사회적응, 학습, 생활습관, 건강을 양호하게 하고, 그 영역에 있어서 목적수행력의 의사결정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부동의 의사결정능력의 평가도구로 활용하기 바람.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표현하기 바람.)

_____ 1) 각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

- ☐ 없음 ☐ 변동적임(시간, 사람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 ☐ 자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 자원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_____ 2) 대립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X라는 용건을 구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의 이유, 구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일관된 판단을 하는지)

- ☐ 없음 ☐ 변동적임(시간, 사람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 ☐ 자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 자원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_____ 3)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위 12에서 변동적이거나 있다고 한 경우에만 답변하면 됨)

- ☐ 문장화하며 전달할 수 있음 ☐ 단문으로 전달할 수 있음
- ☐ 행동 또는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움

V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과정 진술서

(사회조사보고서 양식 1, 5, 6 및 II, III, IV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
여기까지가 사회조사보고서의 핵심부분임)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본인은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 다음 내용에 따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건본인의 현황, 활동능력 등을 판단할 때 참조한 의견

성명:

후견 수오자와의 관계:

☐ 사건 본인과의 면담

시간(연월일 및 면담시간):

장소:

문짜기(공중이 왕래하는 공간, 상담실 등):

☐ 기타 특이사항: 수화동역사 활용() 글로 써서 대화한 경우 ()

본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년 월 일

2) 후견인이 본인을 도려주거나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일 (해당부분 체크)

___ 의로 관련 사항

___ 주거

___ 대인관계

___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

___ 교육 관련 활동

___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

___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

___ 사회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___ 기타()

3)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내기 특별히 희망하는 내용

___ 후 이 부분의 작성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가령 반드시 내게 먼저 내용을 설명해 줄 것, 월 몇 회 방문해 줄 것, 통장관리 등등이 사건 본인의
의 희망사항이 예일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인에 대한 희망

1)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신청
하고자 합니다. 편찮을까요?

2) 후견감독인으로 누가 적당할까요?

☐ 사건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_____

후견인 후보자 관련 정보

※ 이 부분은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간복합 유형	□ 가 □ 나	복합 유형
제출		작성

후견인 후보자

후진진후교	후진진	진관지
주소		
그 외 진관지(이)교를 관할		
관계: 영랑지:		

정려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 등)

4. 후견인관련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이수여부

- 1) 후진제도의 과점점이 과점점이 없는 것이 있는가?
- 2) 후진제도의 과점점이 과점점이 없는 것이 있는가?
- 3) 후진제도의 과점점이 과점점이 없는 것이 있는가?

이항수열의 수렴

- ▶ 교육시행기관:
▶ 교육이수 기간:
▶ 교육과정명 호 시간: (주요내용 및 기술)

후 화전언어로써의 서무처리 능력이나 전문성, 시간보완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일반화적으로 보면, 시간보완언어에 대해 기대 요구, 지적 수준, 협정하는 언어에서, 직업, 동소, 통일화적으로, 직업, 시간보완언어에 대해 기대 요구.

5.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937조) 여부 : ☐ 없음 ☐ 있음

1. 이성녀자
 2. 피성년배인, 피양육자인, 피양육중인, 피양의후견인
 3. 회계정리자에게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가격리지 이상의 형의 선고 판결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판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청탁후견인, 양친후견인, 양친후견인, 양친후견인, 양친후견인, 양친후견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학권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고 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다. 5와 5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후견인의 후견인은 사건 법원이 이 법규칙과 대립되는 것이 없으면 영장 없이 한다.

예() 아니오() 잘 모름()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2. 아래 내용 중 귀하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에 체크해 주세요.

- 1) 나는 다니다가 성당에서 만난 친구인 김민준이 나에게 말했다. "그 친구는 정말 재미있고 친절하네."
- 2)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자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이다.
- 3) 나는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학생이 나에게 말했다. "그 책은 정말 흥미롭네."
- 4) 나는 다니다가 카페에서 만난 친구인 김민준이 나에게 말했다. "그 카페는 정말 친절하네."

III 종합보고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대상자>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공공후견법인 전월가 가 작성)

성명(서명) : (서명) 생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작성일 :

1. 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기재하는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고, 참고자료가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1) 사건 본인의 상태

가. 장애 유형, 발견시기, 장애등급판정 사항:

나. 한처신, 금치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

다. 사건본인의 생활 및 현황 일반(가족관계, 왕래, 부양여부, 주거형태, 동거여부 등 포함) :

라. 소득(사회복지지원포함), 기타 생활비 충당내용(가족의 부담포함):

마. 병원치료와 관련된 사항:

2)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가. 일상생활능력:

나. 인지능력:

다. 의사소통능력:

라. 사무처리능력(특히 계약체결능력, 재산관리능력, 의사결정능력):

3. 사무 후원의 필요성

가. 사무후원 필요성의 원인 및 위임성(일상생활, 활동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나. 일상생활, 복지서비스이용, 계약체결 등 사무처리 등의 후원의 범위(주된 후원이 필요한 부분):

다. 공법상의 신청위탁지지의원인 신청, 주민등록관리 업무 등의 기해:

라. 본인 관련 정보제공 신청(주민등록정보, 공과금정보, 의료정보 등 본인 관련 정보제공의 신청 등의 기해):

3. 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가. 특정후견의 목표	
나. 후원할 사무	
다. 대리권	
라. 기간	
마. 사건본인의 후견 책임여부	

4.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기본사항

가) 법인명:

나) 주소:

다) 연락처

2) 후견인 경력 등:

3) 법인 소속 후견인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4) 후견인 경력사유 등:

5) 사건본인의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희망여부:

[서식 10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용)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O 사건본인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싱기 당사자는이 본인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 대조필 본인)
6.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
7. 본인의 후견 등기사항부록증명서 1부(가정법원 또는 관할법원)

5. 후견감독임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 1)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사항
- 2)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 3)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 4) 후견감독계획

【서식 11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p>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p>	
<p>_____는 (은) 사건 본인인 _____ 세에 개 가장 법원의 판사님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후견 개시 심판을 청 구해도 좋은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고, 사건본인은 이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p>사건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사람:</p>	<p>(인/서명)</p>
<p>- 소속 및 직위:</p>	
<p>- 생년월일/성별:</p>	

【서식 12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 피후견인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 동거하는 친족 등)이 있고 그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용

<p>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이해관계인용)</p>	
<p>O 이해관계인</p>	
<p>성명: _____ (인/서명) 생년월일/남·녀: _____</p>	
<p>주소: _____</p>	
<p>연락처: _____</p>	
<p>사건본인과의 관계: _____</p>	
<p>성기 당사자는(지법지사단배장)이 사건본인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p>_____ (인감도장)</p>	
<p>첨부: 이해관계자의 인감 증명서 1부</p>	

[서식 13-1] 바람직예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후견인(후보자)(지원자)(영))	
성명 :	(인/사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p>상기 당사자는 _____ (지원자(지원자)(영))에서 청구하는 후견심판사건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합니다.</p>	
년	월 일
<p>첨부 : 1.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후견인의 경력사유면(537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 4. 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증(또는 이수확인서) 1통 5. 이력서 1통 6.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7.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경제적 능력에 관한 자료 8. 소재기부존재확인서</p>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법인(후견인(후보자)(지원자)(영))	
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	
연락처 :	
<p>상기 당사자는 _____ (지원자(지원자)(영))에서 청구하는 후견심판사건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합니다.</p>	
년	월 일
<p>첨부 : 1. 후견인(후보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1통 2. 후견인(후보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공공후견법인 지정 관련 서류 1통 4. 공공후견법인 현황(활동) 소개서 1통 5. 그 외 후견인(후보자)법인의 후견 관련 서류</p>	

[서식 13호] 지대공공후원사업 후원인 업무 수행 의향서

* 후원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로 후원인 후보자가 작성 후 제출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보수지급포기서)		년 월 일
(후견인후보자(지원자용))		
성명: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p>상기 명시자는 ○○○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는 후견인(후견인)에서 사건본인 ○○ ○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며, 후견인이 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 지대공공후원사 업에 따른 후견인 활동비(월 20만 원)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 사건본인 ○○○로부터 어떠 한 보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p>		

[서식 15호] 발달장애인 공공후원지원사업 후원계획서

후견계획서

작성일	년 월 일		사건본인과의 관계
	성 명		
작성자	소속/직위	연락처	

☐ 사전 본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 후견인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 수임받고자 하는 후견사무의 내용(아래 부분은 예시임)

-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리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 E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권이 불완전하다면 지원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을 다니며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건강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임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인양수술, 피임수술,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거주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하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임금을 전입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집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의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서식 16호] 치매증상후견사업 후견계획서

후견계획서

※ 후견계획서는 후견인 후보자가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생활관리사 등)의 원소를 받아 작성

작성일	성명	년	월	일
작성일자	소속/직위		사건발원과의 관계	연락처

☐ 사전 본인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주소 : (주민등록본상의 주소)

☐ 후견인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주소 :

☐ 후견인 결정사유 (인법 937조) 여부 : ☐ 없음 ☐ 있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화상원자까지정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락장지 이상의 형의 잔고를 받고 그 형기(喪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하인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하인된 친남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수임받고자 하는 후견사무의 내용(아래 부분은 예시임)

-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리

표록, 어가, 노동에 관한 사항	거소 권리가 필요한지,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및 고용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가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공법상의 행위 대한 사항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레크리에이션, 직업훈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직업활동의 수행(보통직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공법상의 행위 대한 사항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의 신청, 경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주민등록등본 등 출생 및 사망기록이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공법상의 행위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회 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신청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위 II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건강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을 다니지 않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임원수족, 퇴원수족,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대하는 아파트, 주거공간을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위 II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거소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집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소 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복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야간활동(새활프로그램, 작업훈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교육, 여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공복상의 행위(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복구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주민등록등본 등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지원에 출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 사회복지수급과 신청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할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부 II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관리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서비스구입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 위임 중 몰라서 전문사 등의 사인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하지? 금융 잘 모름기 때문에 전문사 관련 사인을 이행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임상생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장애자, 신체적, 성격으로 학대, 피해를 입은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기타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불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입)	

■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를 때(후견사무의 수행)의 계획

○ 후견의 목표

--

○ 후견인이 수행할 사무

1)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

--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약의 체결

--

3) 기타사항 : (예 : 통장관리, 거소관련 사무지원 등)

--

○ 후견인이 대리결함을 보유했을 때 행사 방법 및 계획

1) 사전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 및 관리행위

--

2) 사회복지자금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권

--

3)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장개설은행 등이 보유한 개인 관련 정보신용대리권

--

■ 후견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확인서

- 후견인후보자는 후견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

- 후견인후보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확인함

- ① 성범죄 관련 전과사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이 없음
- ② 배임 및 횡령 등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전과가 없음
- ③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간첩,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 ④ 명예훼손, 신용 침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서식 17호] 정신건강자랑후견활동지원사업 후원계획서

후견계획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회복지사 또는 공공후견법인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함.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속/직위	연락처	

☐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 후견인 후보자

법인명:

주소:

연락처:

☐ 수임받고자 하는 후견사무의 내용(아래 부분은 예시임)

-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리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건강에 관한 사항	(위 II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을 다니어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입원 수술, 퇴원 수술,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거주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소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집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주 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직업활동의 수행(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는?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주민등록등본 등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p>때문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패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신청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할 필요가 있음.</p> <p>※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p>
<p>임상생활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임상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임상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서비스 구매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글을 잘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공문서 관련 서신을 이해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p>
<p>기타 (위에서 묻지 않았던 것 이외에 보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p>	

☐ 의사결정을 지원 또는 대리할 때 (후견사무의 수행)의 계획

○ 후견의 목표

○ 후견인이 수행할 사무

1)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약의 체결

3) 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은 대리체결이 안됨)

○ 후견인이 대리권한을 보유할 때 행사 방법 및 계획

1) 시간적인 영역의 통장개설 및 관리행위

2)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권

3)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장개설은행 등이 보유한 개인 관련 정보신청대리권

□ 후견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확인서

- 후견 담당자는 후견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후견인 후보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확인함

- ① 성범죄 관련 전과·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이 없음
- ② 배임 및 횡령 등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전과가 없음
- ③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 ④ 명예훼손, 신용 침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서식 18호] 후견감독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 특정후견감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요시는 500이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고, 60시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경우 다음과 같이 후견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기로 계획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함.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에게 후견사무의 처리 시 장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교부하기로 함.
- 특정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모르는 사항,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지문을 구할 수 있고, 특정후견감독인은 그 지문에 응해 적절한 지도를 해 주기로 함.
- 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제정할 지침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함.
- 후견감독인은 후견사무에 소요되는 सभी 비용을 위해 후견인에게 매월 소정의 सभी비용금을 지급하기로 함.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후견인을 청하여 특정후견인 교육을 위한 지원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후견법인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
- 특정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경우, 후견종료와 관련한 사무를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정후견 감독인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피후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일체를 특정후견감독인에게 반환함.
- 후견업무 수행 중 취득한 피후견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가정법원, 특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으로 부터 후견 업무 지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이외에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이를 그 밖의 사람에게 누설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약속함.

후견감독인 후보자 _____ (서명 또는 인)
후견인 후보자 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10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사건번호	2022후개 (담당재판부 : 제 단독) 1)
청 구 인	○○○사장 ○○○
사건본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개사비송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p>1. 대리허가신청</p> <p>대리할 사람의 이름 ○○○(○○자형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p> <p>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 - 이매일 주소 :]</p> <p>2. 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p> <p>위 ○○○은 ○○○○시에서 상단후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입니다.</p> <p>[첨부서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분증 증명하는 증명서 1부</p>	
<p>3. 위임할 사항</p> <p>가. 일체의 소송 행위</p> <p>나. 청구의 취하</p> <p>다. 항고의 제기 또는 취하</p> <p>라. 기타특정사항 기재요)</p>	
<p>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 청구인 ○○사장 ○○○ (남인 또는 서명)</p> <p>○○○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p> <p>20○○.</p> <p>귀중</p>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불합의로부터 수평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당사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1) 심판청구서 접수후 사건번호 및 사건배당 완료된 후 사건번호 등 표시하여 접수

[서식 20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사건번호	2022후개 (담당재판부 : 제 단독) 1)
사건본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위한 보조인 출석허가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p>1. 보조인출석허가신청</p> <p>보조인으로 출석할 사람의 이 름 ○○○(○○자형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또는 교육기관 관리자)</p> <p>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 - 이매일 주소 :]</p> <p>위 사람은 사건본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인으로 출석하기를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조력할 사항</p> <p>가. 사건 본인에게 심판 절차의 설명</p> <p>나. 사건 본인의 의사 또는 복원의 진달</p> <p>다. 가정법원의 질문 시항의 진달, 본인의 답변의 진달</p> <p>라. 기타특정사항 기재요)</p> <p>3. 보조인출석허가 신청 사유</p> <p>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심판기일에 출석하여 원할 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p>	
<p>20○○.</p> <p>보조인 출석대인자 ○○○ (남인 또는 서명)</p> <p>○○○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p> <p>제 단독 귀중</p>	

1) 심판청구서 접수후 사건번호 및 사건배당 완료된 후 사건번호 등 표시하여 접수

【서식 21호】후견등기사항부록에 발급 확인장

정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필
수임인 성명	수임인 주민등록번호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인 : 는(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후견등기법」 제15조 및 「후견등기법」 제31조제3항, 제32조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 제출 및 수령 또는 후견등기신청서 등의 열람 신청서 제출 및 열람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임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하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식 22호】법정장액인 공공후견절차지원사업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제본 신청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제본 신청서

청구인 : ○○○도 ○○○시청 ○○○

주소 :

사건본인의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청구 취지

○○가정법원 2022주제 호 특정후견 등의 심판청구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원 인

1.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이 법원 호로 특정후견을 심판청구를 하였습니

2. 특정후견 등 심판청구의 개요

1) 의사결정능력의 장애

사건본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2006. 06. 05.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참고자료 4. 사건본인의 장애인증명서 참조). 2010. . . ○○○도 ○○○시 ○○○동 소재 ○○○병원 소속 정신과의사 ○○○에게서 받은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추정인은 지능지수 48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됩니다(참고자료 5. 사건본인의 장애인단체 참조).

2)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능력의 장애

사건 본인은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건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사무에서도, 다른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위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의사결정

에 쉽게 영향을 받아 내린 결정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특히 2016년도로 신청한 특정후견 등 심판청구사건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바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와 피해부상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움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주거 이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도 어렵습니다.

- 3)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를 지원해 줄 적합한 사람의 부재
 사건본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게서는 현재 요양시설에서 거주 중인
 고향의 어머니 ○○○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6. 사회조사보고서 1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참조).
- 4) 특정후견개시 등의 개요
 위 사건본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후견 등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정후견의 기간	○년	
	형사절차 진행 사무	내 용
특정후견사무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주거 및 임시주거를 결정하는 사무	
	의료서비스사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주거환경개선 사무	
	형사행위 및 민사소해상, 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임개입제결의 대리권	
	사건본인의 재산 피해심회 인용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대리권	
	불응계설 및 통장관리	
	임시주거의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대리권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이용계약 체결 대리권	
특정후견의 대리권의 범위	추가환경 개선을 위한 계약 체결 대리권	
	가사도우미 서비스 계약 체결 대리권	
	기타 공법상의 신장행위에 대한 대리권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증명서 발 급을 위한 신청행위)	

3. 사전처분의 필요성

- 1) 주거의 불안정성
 사건본인은 ○시 소재 ○○재활원시설로 강제 입소되어 생활하다가 위 강제이주 사실이 언론에 알려
 지면서 같은 해 10. 24. 진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실상 전 인에서 강요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같은 해 11. 8. 00시 ○○○소제 ○○○의 임시 거주시설로 다시 입소되어 같은 날
 21. 까지 생활하였고 현재 다시 현재의 거주지로 주거를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6. 사회조사
 보고서 1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참조).
- 사건본인은 진으로 복귀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한적인 ○○○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설에 재입소되거나 이주의 위험이 있

고, 위 ○○○은 사건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본인의 주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 사전처분의 필요성

사건본인의 시설개입소를 받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시설이 사건본인을 위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법적 조치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것 뿐 아니라, 민사법
 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하위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는 특정후견인으로 추천 ○○○으로 하여금 특정후견개시 신청에 대한 상반이 효력을 발생시키까지 임
 시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4. 임시후견이 필요한 상황

사건본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위해 형
 사절차진행권사상 및 민사적 구제 등에 관한 제반 사무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에게
 형사행위 및 민사소해상, 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임개입제결의 대리권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건본인을 위해 안전한 임시주거를 결정하는 사무에 대한 후견인의 지원
 이 필요하고, 임시주거의 계약면담 및 토스 시 필요한 절차에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가. 지원사무

	내 용
지원사무	형사절차 진행권한 사항,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주거 및 임시 주거를 결정하는 사무

나. 대리권의 범위

	내 용
대리권	형사행위 및 민사소해상, 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 임개입제결의의 대리권, 임시주거의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대리권

5. 이에 임시후견인의 선임률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6. 임시후견인으로서는 ○○○을 추천합니다.

임시후견인 후보자	성명	○ ○ ○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이해관계 없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시민공공후견인)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신청인, 시간보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시간보인) 각 1통
3. 시간보인 및 후견인(후보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주소 및 폐쇄시할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장애인증명서 1통
5. 장애인단서 1통
6. 사회조사보고서 1 시간보인의 임박현황 1통
7. 상담기록부 1통
8. 진술서 1통
9. 추가가거원 요청서 1통
10. 수급자증명서 1통
11. 장애인연금확인서 1통

2000.

위 신청인 00도 00군수 000 (인)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서식 23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인 업무인수 체크리스트

피후견인 성명 :

피후견인 주소 :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후에 임무가 개시	
심판이 확정된 날짜 :	가정법원명칭 :
시간보인 :	후견감독인(연락처) :
후견인의 직무-신상-연관 재산 관리 예 () 아니오 ()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리인 겸임 및 중영서 발급신청 <input type="checkbox"/>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권반환청구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계좌에 관한 개설권한, 관리권한 <input type="checkbox"/> 은행계좌에 대한 차분전거를 하지	
<input type="checkbox"/> 복지급여의 신청 <input type="checkbox"/> 복지급여의 관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후견인의 직무범위-신상 보호 예 () 아니오 ()	
<input type="checkbox"/> 병행 치료 관련 <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조사 관련 의료기록 열람 및 중영서 발급신청권 * (필요한 부분) . . <input type="checkbox"/>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할지를 조사 . .	
후견인의 직무범위-신상보호 중 거주관련 예 () 아니오 ()	
<input type="checkbox"/> 시설에 입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예 () 아니오 () <input type="checkbox"/> 입소장계를 제출해야 하는지? 예 () 아니오 () <input type="checkbox"/>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지? 예 () 아니오 () (이라고 말한 경우) 기간 :	
후견인의 직무범위-신상보호 관련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 관련하여 물품 및 서비스공급계약의 체결 관련 지원 () 또는 대리 ()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지원 () 대리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서 온 우편물의 관리 지원 ()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식 24호] 발탁계약인 공공주택사업 입주권인 관련 신청서

피신청인 성명 :
 피신청인 주소 :

후견 관련 서류 표지			
출생일 :	출생장소 :	종교 :	가족상태 :
주거 :			전화 : 모바일 :
임대인(임대주택업 경영) :			전화 : 이메일 :
요양시설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 :			입소일 : 전화 :
요양시설 책임자 :			이메일 : 전화 :
고용관계 :			전화 : 이메일 :
근로직업장 :			전화 : 이메일 :
의료보험 등 :		번호 :	전화 :
기타 사적 지원자(단체 등) 및 지원 장소 :			
활동보조지원 : 내역	약수 :	이용시간/일 :	
연금보험 :		번호 :	전화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전화 :	전화 :
일반인 :		전화 :	전화 :
전문인 :		전화 :	전화 :
장애인등록증		예 :	아니오 :
요양급여			
가정병원			선임남매 :
후견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건강 보호	<input type="checkbox"/> 주거 결정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주거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재산 관리	<input type="checkbox"/> 관할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급여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동의권 유무가 된 경우 :			
다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 :			
친척 또는 피후견인 인정행 조력자 기타 중요한 역할자			
이름	주소	전화/팩스/이메일	관계

[서식 25호] 발탁계약인 공공주택사업 입주권인 재산목록표

피신청인 성명 :
 피신청인 주소 :

1. 재산 목록	
1. 부동산 : 임대주택 () 지기 소유 () 전세 소유 ()	기타 특이사항 :
주소 : 보증금(임대할 경우) : 시가(소유일 경우, 대략적 가치) :	
2. 보유하는 유동재산	
A) 현금 :	
B) 은행예금 : 은행 : 계좌번호 :	
C) 주식 기타 유가증권종류, 가치 등	
D) 사보장이 있는 장부보통사, 종류, 보험금액 등	
E) 기타	
3. 보유한 여타의 재산(자동차, 경운기 기타 기계류 등)	
4. 차입(대출)한 자금	
유형 : 기타 :	
5. 등산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시계	
<input type="checkbox"/> 지갑 등 이동수단	

[서식 25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원사업 피후견인 월 수입·지출표

월 수입의 표시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는 수입이 없고, 자기 수입으로 부양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기재함)

	피후견인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
1. 근로소득		
2. 사회연금·월 금액 연금·연금지급 기타 관련 정보		
3. 공적부조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급여		
4. 장기요양급여 등급 : <input type="checkbox"/> 한달 <input type="checkbox"/> 금액지급 <input type="checkbox"/> 한달 및 금액지급 결합 <input type="checkbox"/> 요양시설 입소로 지급		
5. 기타 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수입 <input type="checkbox"/> 부양비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6. 소정가치 있는 동산 <input type="checkbox"/> 예술품 등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기타	
7. 개인 사용 물건 <input type="checkbox"/> 옷가지 <input type="checkbox"/> 책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용품 <input type="checkbox"/>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8. 동물 등 <input type="checkbox"/> 애완동물 <input type="checkbox"/> 가축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채무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개인 빚 <input type="checkbox"/> 남의 빚을 보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가족 빚을 대신 갚는 경우	
1. 기타의 채무(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별 지출의 표시

항 목	피후견인의 지출
1. 사회보장 관련 본인 부담금	
2. 지분화 임대료	
3. 지출화 이자액	
4. 사회보험 부담금	
5.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지출액 (표시를 정확히 함 것)	
6. 요양시설 입소시 본인 부담금	
7. 기타 지출 □ 공과금 □ 생활비 □ 기타 잡비용	

[서식 27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피후견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 장애인 관련 혜택

- ☐ 예 ☐ 아니오 장애인연금 판정을 받았나요?
 - ☐ 예 ☐ 아니오 장애인연금 신청판정 또는 하형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 ☐ 예 ☐ 아니오 장애인연금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인돌가정 양육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의료보충급여 등 장애인이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보장장보충급여 등의 수혜를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공공시설이나 공공교통수단(철도, 도시철도, 항공, 요근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등)을 무상으로 이용(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한 장애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할인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요금, TV 시청료 등의 할인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가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 등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관공주제 특별보양신청이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종로재단 또는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 ☐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아래 첨부 자료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혜택**
- ☐ 예 ☐ 아니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 * 기초생활급여 중 수급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인가요?
 - ☐ 생계급여, ☐ 추가급여, ☐ 의료급여, ☐ 재향급여
 - ☐ 예 ☐ 아니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 ☐ 예 ☐ 아니오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 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상하수도요금의 관련 혜택을 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생활재활투를 지급받고 있나요?
 - ☐ 예 ☐ 아니오 종로재단 또는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나요?
 - ☐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아래 첨부자료 참조)

[서식 3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원자후보조사서

특정후견 지속여부 조사서

작성자: (소속:) / 작성일:)
 응답자: □ 피후견인 □ 후견인 □ 기타 ()

1. 사전 기본정보

시간	내용	시간번호	후개	가시일	종로
피 후 견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정액은행	가족 형태
후 견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후견인 유형	교육 수료기관
관련 기관	공공후견 법인			감독기관	센터
					모용안 모지역

2. 특정후견 개시 이후 변경사항(법원으로부터 판결, 허가)을 받은 사항

질문	선택	예라고 응답한 경우, 설명내용 또는 이유를 기재
1) 후견인 변경 및 시일이 있었나요?	□ 아나오 □ 예	
2) 감독인 변경이 있었나요?	□ 아나오 □ 예	
3) 후견사무 범위지원 또는 대리권 사항변경이 있었나요?	□ 아나오 □ 예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치른) 가능한 피후견인	□ 은행 □ 여수	제과보호
매월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액수(평균)	□ 여수	
그 밖의 유가족권	□ 내역	
10.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에 구해진 물건(일상생활용품 제외) 또는 권리		
11.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 또는 신용장정을 대리한 경우 □ 의뢰행위에 대한 동의 □ 추가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률행위(부동산거래, 돈을 빌리는 것 등) □ 은행 관련 업무 □ 공법상의 신용행위 □ 기타		
12.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과의 직접 방문 또는 대면한 횟수(피후견인의 주거지 방문, 피후견인의 직장 방문, 피후견인을 초대할 경우 등)		
13. 피후견인에게 제공된 중요한 후원물, 용지 등의 처리상황 □ 피후견인이 스스로 처리 □ 후견인의 지원		
14. 피후견인의 안전을 조력할 것(금전적)		
15. 기타 보고할 사항(피후견인의 일상생활상의 모습, 건강 상태, 기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려움 등)		

이상 보고 내용은 본인이 조사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조사한 것에 일치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없음을 서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3. 현재 특정후견 사무의 목표달성 정도

1) 특정후견 사무(가원) : 심판결정문에 기록된 사무

현재상황 ①사무종결 ②소스로 가능 ③지원체계 확보 ④지원체계 연결배정 ⑤후견계속지원			
연번	사무의 내용	현재상 황	작성자의견
1	이혼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견		현재 상황에 대한 기술 등
2			
3			
4			
5			
6			
7			
8			
※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무에 대한 내용			
기타			

2) 특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 심판결정문에 기록된 대리권

현재상황 ①사무종결 ②소스로 가능 ③지원체계 확보 ④지원체계 연결배정 ⑤후견계속지원				
연번	사무의 내용	현재상황	작성자의견	
1	이혼서비스 신청 및 이혼후견신청 관련 대리권		현재 상황에 대한 기술 등	
2				
3				
4				
5				
6				
7				
8				
		※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무에 대한 내용		
기타				

4. 새로운 사무총원 필요여부

※ 지원필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결정이나 사무처리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대리필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사건, 대리 종료제외 가능)

지원 필요	대리 필요	필요사유에 (✓) 표시	구체적 내용 서술
		은행업무 지원(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계좌 이체 및 출금, 체크카드 발급, 대금관련 정보 조회 등)	
		임상성향배 관리 지원(거화착인, 금전관리 등)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장신병원 입퇴원 포 함)	
		공부상 행위 사무 지원(주민등록초본, 가족 관계등록부, 개인신상에 관한 재판 서류 받 급 등)	
		인간관계서 발급 사무 지원 (사유 :)	
		주거대리권 관련된 정보검색 및 계약체결 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주거이동에 따른 제 약, 임대료 매수 등)	
		상속재산 처리 및 채권 등에 관한 사무지 원(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분할, 상속의 승인·환정 승인 포기 등)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 용 (공적서비스, 민간서비스, 사립복지시설 연계 등)	
		권리대변 상황 시 형사절차 및 민사적 구제 절차 진행 사무고소, 증거수집, 형사기록 열람신청, 형사합의, 변호사 수입계단 체결 등)	
		기타	

5. 피후견인의 안전행 조력자

성명	연배서	거주지/소재 지	피후견인과 의 관계	지원내용 구체적 기술(만남의 횟수, 요일, 지원방법, 의사소통, 연락 방법 등)

6. 특정후견 지속 여부 판단에 대한 조사항의 의견

지속여부 판단	() 종료필요	() 재신청 필요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기한만료에 의한 종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의 희망에 의한 종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사무 계속지원 필요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후견사무지원 필요
종결의견		

작성자 ()은/는 () 종료되는 특정후견 사건의 지속여부를 위하여 같이 조사하였으며
본 사례는 (종료/ 재신청)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서식 31호] 발달장애인 공공후생지원사업 후원금발표고지서

피후생인 성명 및 주소	성명 : / 주소 :
가정법원 및 사건번호	법원 / 사건번호 :
종로사유	예시 : 기간만료, 후생연속성, 후생연속성, 피후생인의 사망등
종로 사정의 피후생인의 재산 상환(재산목록서식붙임)	
후생사무 종료 시점에서 보관하는 피후생인 관련 신상정보 서류(후생연속성연계 반환할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고서 • 재산목록표 • 신상정보 • 회계장부 • 인건비, 조력자, 긴급연락망 연락처 • 기타
후생종료 업무 처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인계 • 기타 업무
후생연속인 또는 후생연속에서 연속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아니오, (이유) :
피후생인의 상태에 대한 진술(특히 후생목록 열상과 관련)	
기타 특이사항 보고	

[서식 32호] 차비공공후생사업 후원인 정기보고서

보고 기간	20__ - __ - __ ~ 20__ - __ - __
피후생인 성명	
1. 피후생인 주소	
주소 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
2. a) 자유가 재산되는 사실에 수동되어 있는지 여부 b) 자유재산 사실은 아니지만, 생활시설, 요양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특히 피후생인이 임의로 시설에서 보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배치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 자유재산 사실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인지 여부 확인 필요
3. 피후생인의 상태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신변을 돌볼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지 (연금 등의 종류, 지급장소, 액수 등)
4. 연금 및 기타 사회복지급여수령. ※ 최초로 수령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설명하기 바람.	연행 개좌번호 (금액 등 내역) * 지출내역서 대체 가능
5. 급여 및 연금 등을 지급받는 은행	연행 개좌번호
생활비의 사용처 : <input type="checkbox"/> 식비 <input type="checkbox"/> 의복 등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금액 등 내역) * 지출내역서 대체 가능
6. 생활비 부담자 (법인인 경우 법적 주체, 주소지)	
7. 기본 생활비 이외의 용돈의 사용처	<input type="checkbox"/> 용처 <input type="checkbox"/> 월 예수 <input type="checkbox"/> 관련 은행 및 계좌번호
용돈 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후생인이 지급할 경우 지급원자 등)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사용 등
8. 피후생인이 금융자산(정기예금 등)을 보유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예수 계좌번호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이 가능한 피후견인의 금융채권(예금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예수	계좌번호
매월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액수(원)	<input type="checkbox"/> 예수	
그 밖의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내역	
9.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이 구한한 물건상환비용 채액 또는 권리		
10.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 또는 신상결정을 대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주거 임대계약, 관련 사항 : <input type="checkbox"/>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한 법률행위(부동산거래, 돈을 빌리는 것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광범위한 신장행위 <input type="checkbox"/> 기타		
11.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과의 직접 방문 또는 대면한 회수(피후견인의 주거지 방문 등)		
12. 피후견인에게 매달된 중대한 위반물, 등지 등의 처리상황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이 스스로 처리 <input type="checkbox"/> 후견인의 지원		
13. 피후견인의 인신감 조차자 및 간담역량		
14. 기타 보고할 사항(피후견인의 일상생활상의 모습, 건강 상태, 기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려움 등)		

क्र.सं.	नाम	प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८
९
१०
११
१२
१३
१४
१५
१६
१७
१८
१९
२०
२१
२२
२३
२४
२५
२६
२७
२८
२९
३०
३१
३२
३३
३४
३५
३६
३७
३८
३९
४०
४१
४२
४३
४४
४५
४६
४७
४८
४९
५०
५१
५२
५३
५४
५५
५६
५७
५८
५९
६०
६१
६२
६३
६४
६५
६६
६७
६८
६९
७०
७१
७२
७३
७४
७५
७६
७७
७८
७९
८०
८१
८२
८३
८४
८५
८६
८७
८८
८९
९०
९१
९२
९३
९४
९५
९६
९७
९८
९९
१००

[illegible]

- ※ 「권지철씨와 제술 시, 파죽연인 영의의 수문비 등 권 수의 총 서보」가 서울관리 공소장 등 정자료를 같이 제출할 것.
- ※ 후건복보시두 수행자는 정자료를 확인하고, 금지책발령을 검토 할 것.
- ※ 「권지철씨에서 서식은 후건복인 재원으로 수정가능」 함.

[서식 35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 욕구확인서
* 피후견인 거주이전, 시설입소 등 필요시 작성

피후견인 욕구확인서			
방문일 시		방문장소	
본인의 욕구, 희망, 선호도 파악	1. 거주관련 2. 일상생활 관련 3. 의료 관련 4. 미래설계 5. 기타		
본인에 게 자원이 필요한 부분	1. 재산 관련 2. 신상 관련 3. 공법상의 신장행위 4. 미래설계		
후견인 의 지원 계획 확	1. 법률자문 요청 2. 후견지원회의 요청		
지원 실행 내용	경위	내용	
	후견지원회의 결과		
	실행 내용 및 결과		

[서식 36호] 치매공공후견사업 활동내역서
(00월)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내역(월별작성)

○ 후 견 인 :

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확인	
			후견인	담당자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본인은 활동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를 때에는 활동 중지 및 지근된 활동비의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서식 30호] 피해공동후견사업 후원 지속여부 조사서

특정후견 지속여부 조사서

작성자 : (소속 :) / 작성일 : . . .
 응답자 : □ 피후견인 □ 후견인(. . .) □ 기타 (. . .)

1. 사건 기본정보

사건 내용	사건번호	20**후개 ****	개시일	종료 예정일	종료 여부
피 후견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장래유형 /등급	장래/금	□재가 □사설 □기타 ()
후견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후견인 유형	교육 수료기 관	
관련 기관	공공후견 인 교육기관		감독기관	선터	□중앙 □지역 ()

2-1. 특정후견 개시 이후 변경사항(법원으로부터 판결, 허가를 받은 사항)

질문	선택	'예'라고 응답한 경우, 변경내용 또는 이유를 기재
1) 후견인 변경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2) 감독인 변경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3) 후견사무 담당자(원 또는 대리권 사람)변경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2-2. 특정후견 개시 이후 사건본인에 대한 변경사항

질문	선택	'예'라고 응답한 경우, 변경내용 또는 이유를 기재
1) 주거지의 변경이 있었나요?	□아니오 □예	
2) 신체, 인지 건강상의 변화 가 있었나요? (신체질환, 치매, 외상노동 등)	□아니오 □예	

3. 사건 본인 재산 관련 사항

소득수준	■ 국민기초수급	□ 최상위 120%	□ 일반
현금 자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월 전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초연금 (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상(가정특화) (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할애장여수급(지역특화) (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기타특수지원		
복지 서비스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봉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회 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연금/사학연금(월 전월) <input type="checkbox"/> 신제노령연금		

월 수입 (원안)	공적이전소득	■ 총액	□ 월	□ 민원
	위 4. 복지지원(국민연금부조 및 사회보험)의 합계(국민연금부조 제외) <input type="checkbox"/> 급여(중생원안) <input type="checkbox"/> 외부 지원금 (부양 의무 자, 민간단체)		□ 월	□ 민원
월 지출	사적이전소득		□ 월	□ 민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세	□ 개월연금	□ 월	□ 민원
	<input type="checkbox"/> 세금 (수도, 전기요금) <input type="checkbox"/> 교통/통신비	□ 시도청	□ 월	□ 민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상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월	□ 민원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지원서비스(복지지원금)		□ 월	□ 민원
			□ 월	□ 민원

4. 현재 특정행정 사무의 목표달성 정도

1) 특정행정 사무(지원) : 심판결정문에 기록된 사무

현재상황	①사무중결	②소로 가능	③지급체계 확보
④지원체계 연결예정	⑤후견계속지원		
연번	사무의 내용	현재상 황	적성지원 현
1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휴결		현재 상위에 대한 기록 등
2			
3			
4			
5			
6			
7			
8			
※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무에 대한 내용			
기타			

지 산 (분야)	□ 현금 :		□ 보증금/ 전세금 :	
	유동자산	■ 예금 000 만원	□ 보증금/ 전세금 :	
	□ 장기매·주금(채무매):		□ 시변형채권매:	
	■ 부동산 : 000 만원 (부동산 소유하고 있음시 해당 부동산 시기)		□ 시가 있는 권금속 :	
□ 자용차:		□ 기타자산 :		
파부영가죽 자산	유동자산	원	고장자산	원
	■ 없음 □ 있음: 채무금액 (원원 □ 상환기간 : 까지			
채 무 (분야)	□ 채무부양원인 (ex) 병원 마비금, 금상기금 대출 등)			
	기타서명본의 및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자산, 월소득, 월지출 등에 관한 사항			

2) 특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 심판결정만에 기록된 대리권

현재상황	①사무총괄 ③지원체계 연결매칭	②스스로 기능 ⑤후견계속지원	③지원체계 확보
연번	사무의 내용	현재상황	작성자의견
1	의료서비스 신청 및 이용(주요신청내역 관련 대리권)		현재 상황에 대한 기술 등
2			
3			
4			
5			
6			
7			
8			
※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무에 대한 내용			
기타			

4. 사무총원 필요여부

※ 지원필요 : 후견인의 결정이나 사무처리에 지원등 해야 하는 경우
대리필요 : 후견인에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지원 대리 중복체크 가능)

지원 필요	대리 필요	필요사무에 (<) 표시	구체적 내용 서술
		은행계좌 지원(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계좌이체 및 출금, 체크카드 발급, 예금관련 정보조회 등)	
		임상생활비 관리 지원(계획적인 금전관리 등)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공법상 행위 사무 지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개인신상에 관한 서류 발급 등)	
		인간중생서 발급 사무 지원 (사유 :)	
		주거마련과 관련된 정보탐색 및 계약체결 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주거이동에 따른 계약, 아파트 매수 등)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공적서비스, 야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연계 등)	
		기타	

5. 피후견인의 인정양 조력자

성명	연락처	거주지/소재지	피후견인과의 관계	지원내용 구체적 기술(만년의 횡수, 요일, 지원방법, 의사소통, 연락 방법 등)

6. 특정후견 지속 여부 판단에 대한 조사의 의견

지속여부 판단	() 종료필요		() 재산형 필요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의 희망에 의한 종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사유 계속치원 필요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후견사부지원 필요	
종합의견				

작성지 ()은/는 () 종료되는 특정후견 사건의 지속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으며 본 사례는 (종료/ 재산형)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 월 일
작성지 : (서명)

[서식 57호] 정신질환자 동등후견활동지원사업 참가후견보고서(본가)

보고 기간		부록 ~	까지
1. 정신요양시설명 / 피후견인명			
2. 피후견인의 상태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지	
3.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급여수령 ※ 최초로 수령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연금 등의 종류, 지급장소, 액수 등)	
4. 금어 및 연금 등을 지급받는 은행		은행	
5. 생활비의 사용처 : <input type="checkbox"/> 식비 <input type="checkbox"/> 의약 등 <input type="checkbox"/> 이밖에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금의 등 총액 내역)	
6. 물은 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계간이) 지급할 경우 지급일자 등)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은행 등)	
7. 피후견인이 금융자산(예금) 등을 보유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약수	
8.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생활이 가능한 피후견인의 금융계좌장(계좌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약수	
9. 마름 금융거래로 입금되는 약수(할관)		<input type="checkbox"/> 약수	
10.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이 구입한 물건(일상생활용품 제외)			
11.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 또는 신상변경을 처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input type="checkbox"/> 주거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 <input type="checkbox"/>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률행위(부동산거래, 돈을 빌리는 것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관공서의 신청행위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과의 직접 방문 또는 다양한 통신(피후견인 요양시설 방문, 피후견인과 가통신 등)			
13. 기타 보고할 사항(피후견인의 일상생활상의 모습, 건강, 습관, 기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려움 등)			

이상 보고 내용은 본인이 조사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조사한 것에 일치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없음을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여성·노년·후견대상자 보호권사무보고서



기본 후견감독서건 사건번호

기 본 사 랑

과후견인의 지정요건에 따른 후견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보고 대상 기간	20 ~ 20	후견종류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합성후견 <input type="checkbox"/> 투쟁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성명	후견번호 (-)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명	후견번호 (-)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외부전원과 관계	주소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명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명	주인등록번호	연락처	

신 신 보 호

과후견인의 지정요건에 따른 과후견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표 하고, ()나 비 등한에는 주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있음		<input type="checkbox"/> 1년 동안의 과후견인의 주소변경 사실을 아래의 한에 작성합니다.	
주 소 변 경 상 황	변경 시기	변경 주 소	
주소 1			
주소 2			
주소 3			
합 입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주 ()회 <input type="checkbox"/> 월 ()회 <input type="checkbox"/> 연 ()회		
기 타	<input type="checkbox"/> 전과, 서신, 이매일 등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주 ()회 <input type="checkbox"/> 월 ()회 <input type="checkbox"/> 연 ()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서식 303] 후견사무보고서

거주 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요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유 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무상
• 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성명() 관계()	
생물 정보	성별인과의 성명 연 령 직 업 필 주 입 등 거 인 세 세 세 세
건강 상태	• 해당 /표하고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아래 한에 구체적인 상태를 작성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type="checkbox"/> 상태 악화 정신적 상태 신체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type="checkbox"/> 상태 악화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 항목 <input type="checkbox"/> 생활유지 <input type="checkbox"/> 간 호 <input type="checkbox"/> 주거확보 <input type="checkbox"/> 의 료 <input type="checkbox"/> 교 육 <input type="checkbox"/> 재 물 <input type="checkbox"/> 시용임대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종료 후견적응여부 사유 <input type="checkbox"/> 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있음 후견법위 변경여부 변경 내용 주 양 보 조 계 획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보람 증명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증명서 증명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진행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5. 증명서 증명					

소극재산의 해당 전부를 표기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구분	건명	금융기관	대출금	상대 □정산 □거절하나 일부 중 □정산 □거절하나 일부 중 □정산 □거절하나 일부 중 □정산 □거절하나 일부 중 □정산 □거절하나 일부 중
금보대물				
보증금·보증원채무				
신용대물				
기타 채무				
저용금부				
개박				

※ 작성한 부속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소극재산 총액

제 1 장 종역

(1) 2-3(4) 5-6

사서 제2회 후견사면교과서

수 입 내 역

회계장부의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장입니다.
 연별 분별은 회 계장부에 직접입한 연별 중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단행본 작성합니다.

수 입 내 역	부동산 전입	월소득×12개월 가년 임대소득	
		월 ()원 × 12개월 = ()원	()원
임대소득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① 임대소득합계			
입금 받은 사회보장수입	수급액 월	월 수급액×12개월 가년 수급총액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월 ()원 × 12개월 = ()원	()원
② 수급합계			
연 별		이 과 수 익	
이 저 소득			
③ 이저소득합계			
수입총액	소득금액	원 부 서 무	
	④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해당 1년분	
	⑤	근로소득세 확정징수영수증 서문	
	⑥	수급 증명서	
	⑦	판관 증명서	
수입총액		①+②+③+④+⑤+⑥+⑦	

[illegible][illegible]

[서식 300] 후견감독사무보고서

관 록 내 용		관 록 항 목	구분	비고	비고
신상 모 록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 후견인이 진료, 주거환경, 의료, 생활 등의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호재산을 적절하게 채우고 있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양치는 관용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태도는 관용되지 않았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정기수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재산 관 리	■ 피후견인의 정기수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수입누락이 관용되지 않았다.				
	■ 지출항목이 적절하다.				
	■ 후견인의 개인 지출이 관용되지 않았다.				
	■ 후견인의 재산 관리가 관용되지 않았다.				
	■ 후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적극적이다.				
	■ 후견인이 감독에 협조적이다.				
	■ 피후견인 및 관계인의 불만이 관용되지 않았다.				
일 반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용되지 않았다.				
	후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용된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변경 의사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 변경 사유				
<p>※ 후견인의 신상모로, 재산관리, 일반사무 활동에 대한 감독의견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p>					

[서식 300] 후견감독사무보고서

관 록 내 용	
신상 모 록	
재산 관 리	
일 반	

위와 같이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후 견 감 독 인

(서명 또는 날인)

[처사 4회]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청 구 인:	(연타 가능한 전화번호:)	
주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권	20	(년단 / 후감)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특정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능정후견인·심판, 미능정후견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상할판정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원고법원이 후건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이 가정법원입니다.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매각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 예시는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가2245호로 특정후건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건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건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 및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무극한으로 사건본인의 간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건본인의 재산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사건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그 일부를 간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5.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수질 전순위 상속인표의 동의서(인간장년인, 인간중립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각 예상금액 소명자료(국민은행 시세자료 등 인터넷 시세자료, 편원 증권기관의 시가확인서 등) ※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부적합함
- 사건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주거 계획
-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 계획

■ 담보제공행위 하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발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사건 본인(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행하라는 청구를 하겠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 예시는 뒷장 참조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가2345호로 특정후견계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사건본인의 부동산의 담보제공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은 임대 중인 부동산의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여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예금계좌에는 잔고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건본인의 차용 및 요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은 사건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드 됩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후견 전문의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간난민, 인간중립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월 인출한도 초과 인출행위 하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8900)에서 월 인출한도 5,00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0원 을 추가로 인출하는 행위를 하겠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가2345호로 특정후견계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합계 5,000,000원 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월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10,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월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를 하기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p>■ 소송행위 하가의 경우 작성 예시</p>	<p>※ 청구취지 예시</p> <p>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채무자 ○○○(원)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의 제기와 그와 관련한 소송행위,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p> <p>라는 심판을 구합니다.</p>
<p>※ 청구원인 예시</p>	<p>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제12345호로 특정후진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진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p> <p>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진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가정법원의 하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p> <p>3. 사건본인은 채무자 ○○○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자 ○○○(원)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p> <p>4.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대여금청구 소의 제기와 그와 관련한 소송행위,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특별대리인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하가의 경우 작성 예시</p>	<p>※ 청구취지 예시</p> <p>1. 청구인 등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을 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협의 분할 할 때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를 선임한다.</p> <p>2. 특별대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p> <p>라는 심판을 구합니다.</p>
<p>※ 청구원인 예시</p>	<p>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후제12345호로 특정후진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진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p> <p>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진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함에 가정법원의 하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p> <p>3. 그런데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분할 협의할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를 선임하며, △△△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자 한 청구에 이를 것입니다.</p> <p>4. 따라서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와 같이 분할협의를 할 때 특별대리인으로 △△△를 선임하는 것과 특별대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행위에 대한 하가를 구합니다.</p>
<p>※ 기타 소명자료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명단 - 상속재산목록(소속재산 포함)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후보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특별대리인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 특별대리인선임승낙서, 보수포기서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예시 1) 일반건물의 경우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애틀 빌들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80㎡

(예시 2) 집합건물의 경우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16 가(가)파트 제 2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86.03 ㎡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대 1,400 ㎡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6 대 1,600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용: 3000원의 47

■ 대물기판권 설정 허가의 경우 작성 예시

※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이 사건분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대물기판을 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 예시는 몇장 참조

※ 청구원인 예시

1. 사건분인에 대하여 2020. 9. 30. 서울가정법원 2020가정12345호로 특정부권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부권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사건분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분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의 만기가 20 . . . 입니다.
4. 따라서 사건분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분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대물기판 연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명자료 예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대출계약서 사본

[서식 41호] 주민등록등가신청서

종로등가신청서

제	20	치	정	수	기	입	교	학	각종
수	제	호	인						종지

사건본인의 표시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 별
	등록기준지			
	주 소			
등가의 목적	상년후견 종료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피상년후견인의 사망			
등 기 활 사 항				
종로할 등기사항과 원인연월일				
기타				

첨 부 서 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기 타>
1. 관할을 증명하는 서면	등
1.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면	등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등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번호)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전화 번호)	
가정번호 귀중	

20

- 신청서 작성 방법 -

1. 하나의 신청서로 2개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0mm × 297mm)

[자식 2인] 특정후견인 선임하기신청서

특정후견인 선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선임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주소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법원 2023후계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서는 ○○○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성명
-------	----

후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5.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6.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3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6. 기타(증거자료)

2016. 0. 0.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7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처음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의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서식 43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필요아동 발굴 체크리스트

1. 아동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후견대상 아동		주 소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유(有)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무(無)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친권자	<input type="checkbox"/> 인탁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탁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공공후견인 필요 사유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인 어려움(채무상환, 재산관리 등 경제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정신장애, 약물복용, 비행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양육자 수감, 고령 양육자, 친권자 병입, 학대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공공후견인 선임 전 정구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친권의 상실(민법 제 924 조) <input type="checkbox"/> 친권의 일시정지(민법 제 924 조 제 1 항) <input type="checkbox"/> 친권의 일부제한(민법 제 924 조의 2)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외후견인 특성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아동의 특성 작성		
특이사항 (공공후견인 추천 시 고려사항)	공공후견인 추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작성		

2. 체크리스트	
구분	문항
1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선임 여부 1. 친권자가 있다.
	결과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1-1~3번 해당)	
1-1	친권자 유형 선택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1-2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부재로 통장개설 등 양육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아동의 친권자(부모)가 6개월 이상 연락무질 상태이다. (예: 아이를 친권이나 시설에 맡긴 후 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
1-3	(예: 아이를 친권이나 시설에 맡긴 후 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1-4번 해당)	
1-4	아동의 후견인이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다.
* (1-2, 1-3 번 문항) 1 개 이상 해당 시, 친권 남용 관련 제한 및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상담 연계·지원 또는 공공후견인 연계	
☐ 친권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양육자)가 아동의 복리후생에 합리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 (예: 아동의 재산 무단처분, 아동명의 핸드폰 사용요금 체납 등 부당 채무부담)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친권자의 행위가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1 개 이상 해당 시, 친권 남용에 따른 구제소송 청구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지원 또는 공공후견인 연계 * 사안에 따라 친권 제한·상실 청구 가능	
☐ 상속채무 여부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	
1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와 아동이 상속인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무독촉장 또는 민사상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을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1-3 번 문항) 1 개 이상 해당할 경우, 법률상담 신청 또는 공공후견인 연계	
☐ 기타	
1	아동에게 정신장애, 약물복용, 비행 등 특수유구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위탁부모 등 양육자가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움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1-2 번 문항) '예'로 답변한 경우, 공공후견인 연계	
소견	

서식 11 공공후견인 활동 보고서

보고 대상 기간				부터 ~ 까지	
미성년자					
장	명	주인등복번호			
주	소	연 락 처			
거	소	주 소변경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위와같은					
후견인					
성	명	주인등복번호			
주	소	연 락 처			
후견인특약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여 /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인등복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상정보					
생 신 장 연	성 리 성 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input type="checkbox"/> 불치 양육 (구체적 사항:)			
	신 체적 상 태	<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좋지 않음 (구체적 사항:)			
	학 령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			
학 령 장 연	출 생 사 람	<input type="checkbox"/> 출생양호 <input type="checkbox"/> 결핵성 <input type="checkbox"/> 중독			
	교 우 관 계	학교친분관계 마르도한 교우관계가 원안이라고 함			
	생 활 유 지	미성년자의 생활비를 총양양법을 지켜주세요			
후 견 인 등	비 록 유 지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지리적 접근이 있었다면 내용을 적어주세요			
	비 록	○○○ 상등기관 상의자로(2023. 10. 4일 ~ 현재까지 주 / 회)			
교 령	비 록	법외 후 생활, 학원, 공부방, 과외 등 내용을 적어주세요			

		기 타		지역(아동성인) 공무관, 영구학원 ○○ 학습지 등	
--	--	-----	--	-----------------------------	--

피추경인 재산 관련 금지처분내역						
기재번호	보통예금(A) 계좌		청구예(특)금(B) 계좌		추경인 다른 금액	
	수입	지출 전액	수입	지출 전액	총액	내 역

추경인 재산 상황	차려재산		소유재산		수입내역 4	
	부동산	채권	채권	채권	임대소득	차용금
계좌잔고	모기지	증권	보증금	보증금	연금 및 사회보장금	
	기타)	기타)	기타	
	<p>※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에 √표 하고 변동 상황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p> <p>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자료 첨부</p> <p>예) 최근 출생증명서, 입적사, 계약 체결 및 해제이력, 다른 보증금의 변동 등</p> <p>미상환자에 대한 지출 기록 등 재산 권리 거래 기록</p> <p>예) 다음달에는 화원을 분양하여 더 다들 미정된 통장을 한 곳으로 모아 신규 통장 개설 후 권리 이전을</p>					

추경인의 친척관계	보고 대상기간 신상정보, 건강상태, 재산관리 등 추경인 주 주변에 대한 의견 법원에 미치는 영향상황 등 예) 그릇하고 진학 후 이사 할 예정입니다. 신자의 시골거라 너무 책임 없습니다. 장남자원이 풍부합니다.
-----------	--

후견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신상 및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20 . . .

후견인 : (인)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발행인 조 순 열

발행일 2025. 3.

발행처 서울지방법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서울지방법원
Seoul Bar Association